

제 75차 여성정책포럼

# 미혼부의 책임강화 방안

일시 | 2012. 5. 2 (수) 14:00-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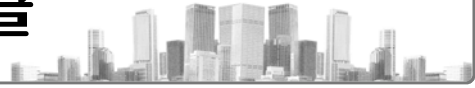
장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Forum  
Forum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모시는 글



최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양육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양육하려는 미혼모가 증가하는 등 미혼모의 양육 이슈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혼모를 포함하여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의 복지 서비스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는 있지만, 선진국의 아동수당, 가족수당, 생계급여와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양육 부모인 미혼부의 양육비 책임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정부도 비양육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육비 청구 및 이행과 관련된 법률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데, 비양육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이혼한 비양육 한부모 뿐만 아니라, 미혼 비양육 한부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제공 의무에 태만하면 자녀의 복리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는데, 양육비 미지급은 미혼모 자녀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본원에서는 미혼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혼부의 책임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당사자의 의견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서 고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5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 금 숙**



시간	구분	세부내용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 회 식	사 회 : 이택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 인 사 말 :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14:10~15:40		사 회 : 은기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발 표 1	미혼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 관련 실태 및 과제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 표 2	미혼모들이 경험한 인지청구 및 양육비소송 서비스 최형숙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기획홍보팀장)
	발 표 3	선진국의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와 자녀양육비 이행제도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발 표 4	미혼부의 법적 책임강화 방안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5:40~16:00	휴 식	
16:00~16:50	토 론	김선영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박영미 (한국한부모연합 고문) 오영나 (전국여성법무사회 부회장) 이정연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사무관)
16:50~	종 합 토 론	



# 목 차

## 발 표

- 미혼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 관련 실태 및 과제 ..... 1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미혼모들이 경험한 인지청구 및 양육비소송 서비스 ..... 31  
최형숙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기획홍보팀장)
- 선진국의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와 자녀양육비 이행제도 ..... 43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미혼부의 법적 책임강화 방안 ..... 79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 김선영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115
- 박영미 (한국한부모연합 고문) ..... 119
- 오영나 (전국여성법무사회 부회장) ..... 127
- 이정연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사무관) .....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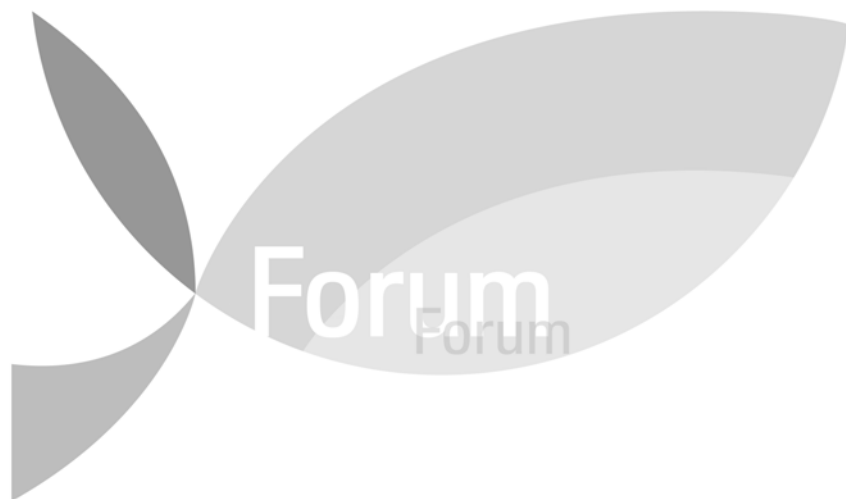
발표 1

미혼부의 책임강화 방안

# 미혼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 관련 실태 및 과제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I. 들어가면서

미혼모의 양육 이슈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sup>1)</sup> 오랫동안 많은 미혼모들은 자녀를 직접 키우지 못하고 입양을 보내야 했다. 그리고 미혼모들이 자녀를 직접 키우더라도 사회적 편견 때문에 미혼모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이처럼 자녀를 키우는 미혼모 집단이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정책 수혜 대상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정부의 서비스 전달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최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양육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입장 등으로 양육하려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다. 빈곤한 미혼모는 기초생계수급비 지원을 받지만, 수혜자격 조건이나 기한이 제한적이다. 미혼모를 포함하여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의 복지 서비스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지만, 선진국의 아동수당, 가족수당, 생계급여와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양육부모인 미혼부의 양육비 책임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비양육 한부모의 양육비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육비 청구 및 이행과 관련된 법률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자녀양육비 의무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와 함께 살며 키울 수 없을 때 발생한다. 비양육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이혼한 비양육 한부모 뿐만 아니라, 미혼 비양육 한부모에게도 있다. 미혼한 부모가족의 경우 대부분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비양육 부모인 미혼부는 양육비 제공 책임이 있다. 미혼모 가족의 양육비 청구 및 이행 절차는 이혼 한부모 가족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혼율의 증가로 자녀 양육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면서, 최근 이혼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도가 이혼 과정에 도입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양육비 소송 및 이행을 지원하는 정부의 법률구조 서비스도 최근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실적은 미미하다.

비양육부모가 양육비 제공 의무에 태만하면 자녀의 복리는 심각하게 위협 받게 된다. 양육비 미지급은 미혼모 자녀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다수의 미혼모와 자녀 아버지인 미혼부는 자녀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심각한 의견 대립 및 감정적 충돌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 2010; 이미정, 2010). 이러한 감정 대립으로 미혼모들은 양육비 청구 및 이행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 비양육 미혼부의 자녀양육비 제공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활용도는 저조하다.

1) 본 원고는 2011년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지원으로 수행된 『미혼부의 책임강화 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우리나라 같이 빈곤 미혼모 가족을 위한 공공 급여가 미흡한 국가에서 비양육 한부모의 자녀양육비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다수의 미혼모가 양육비 청구를 고려하지 않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실태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소개하고, 양육미혼모 가족의 양육비청구 및 이행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려고 한다. 조사자료 분석을 토대로 왜 양육미혼모들이 양육비 청구에 적극적이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관련 대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 Ⅱ. 우리나라 자녀양육비 이행 현황

### 1. 이혼 및 미혼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이행

이혼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비 이행 실태는 몇몇 조사연구를 통해서 파악되고 있다. 2001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혼가정 실태조사에 의하면 별거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경우 규칙적으로 양육비를 받고 있는 비율은 18.2%에 불과하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1). 이들 중 대다수인 70.9%는 전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10.9%는 불규칙적으로 양육비를 받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거나 불규칙적으로 받는 경우가 전체의 81.8%에 달해 별거가정의 양육비 확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1). 이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91명 중 28.6%인 26명이 양육비에 관해 합의가 있었으며, 양육비에 대한 ‘판결이 있었던 경우’는 9.9%인 9명이었다. 양육비에 관한 ‘합의나 판결이 없었던 경우’가 38.5%인 35명,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가 23.1%인 21명으로 나타났다.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받지 않기로 한 사유를 보면 ‘상대방과 연결을 갖고 싶지 않아서’ 32.6%, ‘양육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자녀양육을 맡았기 때문’ 19.6%, ‘양육비에 대해 몰랐기 때문’ 10.9%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양육비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무내지 책임 차원이 아닌 부모들의 감정 다툼이나 양육권을 갖는 협상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육비를 받지 않는 한부모 중 62.2%는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 35.7%, ‘혼자만 감당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35.7%, ‘생각보다 양육비가 많이 들어 분담을 해야한다’가 17.5%로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 연구에 의하면 전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2.7%에 불과하다(김혜영 외, 2006: 119-124). 이혼 한부모 88.6%가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녀양육 비용부담을 들고 있다. 2006년 연구에서 이혼 한부모가 자녀양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31-50만원 이하가 33.3%, 50만원 이상이 29.2%로 나타났다.

자녀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여봉(2003)의 연구에 의하면 판결에서는 통상적으로 정기급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는데 그 사유는 비양육친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자녀로 하여금 같이 살고 있지 않는 부모와 이혼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친으로부터 보호를 느낄 수 있고 유대감과 신뢰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액으로 장기간 지급하는 정기급 형태는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양육친의 사정이 협의 및 판결당시와 달라질 수 있고, 책임감이 낮아질 수도 있으며, 비양육친의 재산 및 수입의 변동가능성, 재혼 후 부양가족 증가, 재산은닉, 소재지 불명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육 한부모의 입장에서 양육비를 일시급으로 받는 것은 헤어진 배우자와 다시 엮히지 않고 양육비가 중단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비양육친이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비양육친이 양육친의 향후 삶의 상황을 불안해하여 거액의 자녀양육비를 일시지급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자녀양육비는 정기급 형태로 지급하도록 판결되고 있다(이여봉, 2003).

2010년 미혼모 실태조사의 의하면, 대다수의 미혼모들은 미혼부에게 자녀출산 및 양육사실을 알렸다고 응답하고 있다(김혜영 외, 2010). 그러나 미혼부에게 자녀 양육비를 요구하거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미혼모는 많지 않고, 미혼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에 불과하다. 양육비 문제로 미혼부와 교류하기를 원치 않거나, 자녀의 양육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나아가 현실적으로 양육비 청구소송에 대한 인지도나 절차의 번거로움, 소요되는 시간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 등이 미혼모로 하여금 자녀양육비 청구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법률구조서비스 이용자의 자녀양육비 이행 현황

여성가족부는 2007년부터 경제적 빈곤과 자녀양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청구나 자녀인지 청구 등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1a). 2007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지원을 받은 사례는 총 1,714건인데, 이들 사례는 자녀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으로 법적 절차를 밟은 적극적 한부모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 지원 양육비 이행소송의 유형을 살펴보면, 양육비 청구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으며,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합의하에 취하 혹은 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아서 양육비이행확보 소송을 추가적으로 하거나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대상 집단의 소송유형은 양육비청구 73.3%로 가장 많고, 양육자 및 친권지정 및 변경 12.3%, 양육비이행확보 8.5%, 미혼모의 친자확인 인지소송 2.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1〉 정부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자 소송유형

(단위: 가구)

구분	계	양육비 청구	양육비 사전확보	양육비 이행확보	이혼 및 위자료	친자확인 인지소송	양육자, 친권지정
계	1,405	1,030	16	119	19	40	173
법률공단	1,147	850	16	105	18	30	120
(%)	81.6	82.5	100.0	88.2	94.7	75.0	69.4
가법상담소	258	180	0	14	1	10	53
(%)	18.4	17.5	0.0	11.8	5.3	25.0	30.6

자료: 여성가족부(2011c), 『아동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 연구-조사분석보고서』, 미발간, p. 19.

주: 1. 소송유형은 중복됨.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기타 8건을 제외한 내용만 제공함.

여성가족부의 자녀양육비 이행 정부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결과를 살펴보자. 단계적으로 화해를 권유하고, 화해가 불성립할 경우 소송을 시작한다. 화해·조정 등을 통한 결정이 27.0%로 나타난다. 화해의 불성립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대부분 승소하는데, 그 비율은 62.9%이다. 소송 취하는 5.9%, 기각·패소는 1.0%이다.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송이 중단(0.6%)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송(0.7%) 되는 경우도 있다.

화해와 소송결과 판결된 장래양육비는 각각 월 30만원 이하(17.9%)와 월 31-50만원 이하(15.2%)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월 50만원 이하의 양육비를 판결 받은 한부모 비율은 33.1%이며, 51만원 이상 5.7%, 요청은 했으나 0원으로 판결된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3.3%로 나타난다.

여성가족부(2011b) 자녀양육비 이행관련 실태조사 결과 양육비 판결금액은 21만원-30만원 이하 41.2%, 31-50만원 이하 31.5%, 20만원 이하 11.8%로 나타났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양육비는 대략 21만원-50만원사이로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1:122).

여성가족부(2011b)의 조사에 의하면 양육비 소송 후 한번이라도 자녀양육비를 받은 사람은 60.5%인 266명으로,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39.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육비 판결금액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낮게 나타나 만족이 24.8%, 불만족이 67.3%였다. 또한 자녀양육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118명인 42.4%로 가장 많았으나,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받다가 최근에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81명인 29.1%, 부정기적으

로 받는 경우는 45명인 16.2%, 과거에는 정기적이었다가 최근 부정기적으로 바뀐 경우는 18명인 1.8% 순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1:123).

### III. 연구 방법

양육비 청구 및 이행과 관련된 미혼모 가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양육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 대상은 만 19세 이상 양육미혼모이다. 이들의 양육비 청구 및 이행과 관련된 양육 미혼모 가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한국미혼모가족협회’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다. 협회의 정기모임에 참석하는 회원,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자보호시설, 미혼한부모거점기관 등의 협조를 얻어 조사 대상 양육미혼모를 확보하였다. 미혼한부모 거점기관은 지역사회 미혼한부모를 위한 위기지원 및 자녀양육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설문지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 협조를 받았다.

조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서울 이외 지역은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서울 지역 등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거주하는 미혼모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방문하여 직접 설문지를 제공하고 수거하였다. 집단인터뷰 및 개별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2011년 9월 15일부터 30일 기간 동안 설문지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 기간 동안 실시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오류가 있는 설문지는 체크하여 조사원이 전화통화나 우편으로 수정을 요청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에 포함된 설문지는 213부이다.

〈표 Ⅲ-1〉 조사대상자 거주지역

지역	배포 방법
서울	자조모임 및 개별 방문 조사
부산	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조사
대구 및 경북권	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조사
인천 및 경기권	우편조사
광주	우편조사
대전 및 충남권	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조사
경남권	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조사

<표 III-1>에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포함하고 있는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왜 미혼모들이 양육비 청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지를 밝혀내려고 하였다. 양육비 수급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양육미혼모가 처한 상황이 상이하기에, 양육비를 받는 사람, 소송 중인 사람, 소송이 완료된 사람, 향후 소송 의사가 있는 사람, 향후 소송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문항을 도입하였다. 양육비 수급 및 소송에 있어서 아이 아빠의 양육비 책임에 대해 양육미혼모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관련 문항을 포함시켰다. 자녀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아이 아빠의 생각, 미혼부의 경제적 상황도 양육비 수급 및 청구와 관련하여 주요한 변수로 고려되었다. 양육 미혼모와 미혼부의 관계도 중요하게 고려하여, 임신 전 두 사람이 알고 지낸 기간, 미혼부에 대한 신상 및 거주 정보도 포함시켰다. 이혼 커플과는 달리 양육 미혼모는 양육비 청구에 앞서 법적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녀의 인지 상황, 향후 인지여부에 따른 양육비와 관련된 상황을 보여주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 IV. 양육미혼모 가족 자녀양육비 이행 실태

### 1. 양육미혼모 가족의 경제적 여건

#### 양육미혼모의 일반적 현황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는 19세 이상 양육미혼모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9세는 1.9%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20대와 30대에 해당되었다. 연령분포를 보면 20대가 125명, 58.7%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30대로 75명, 35.2%이다. 그밖에 40대가 3.8%(8명), 50대가 0.5%(1명)이다.

〈표 IV-1〉 조사대상 양육미혼모의 연령 분포

(단위: 명, %)

구분	명수	비율
연 령		
19세	4	1.9
20대	125	58.7
30대	75	35.2
40대	8	3.8
50대	1	0.5
합계	213	100.0

조사대상자 자녀의 연령별 분포가 <표 IV-2>에 제시되어 있다. 1세 이상 3세 미만의 자녀가 36.5%로 가장 많고, 1세 미만은 34.7%이다. 다음 3세이상 5세 미만이 15.3%, 5세 이상은 13.5%였다. 조사대상자 자녀 대다수가 3세 미만의 영유아인 것을 보여준다.

〈표 IV-2〉 자녀의 연령 분포

(단위: 명, %)

구분	명수	비율
만1세 미만	77	34.7
만1세 이상-만3세 미만	81	36.5
만3세 이상-만5세 미만	34	15.3
만5세 이상	30	13.5
합계	222	100.0

#### 양육미혼모의 경제활동 및 소득관련 현황

양육미혼모의 경제활동 및 소득 현황을 살펴보자. 현재 주로 하는 일이 소득활동인 경우는 전체의 35.2%, 75명이다. 두 번째로 응답자들이 많이 하는 활동은 자녀양육에 전념하는 것으로 31.0%, 66명이다.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와 자녀양육 전념의 경우는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진학/취업준비/직업훈련중인 경우가 전체의 16.4%이며, 구직활동(13.1%) 중이거나 학생(4.2%)인 경우가 있었다. 응답자의 3분의 1정도(35.2%)만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취업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V-3〉 양육미혼모의 경제활동 및 기초생계수급

(단위: 명, %)

구분	명수	비율
주요활동		
학생	9	4.2
진학/취업준비/직업훈련 중	35	16.4
구직활동(실업상태)	28	13.1
자녀양육에만 전념	66	31.0
소득활동	75	35.2
소계	213	100.0
직업		
전문직/관리직	18	24.0

구분	명수	비율
사무직	22	29.3
서비스직	18	24.0
판매직	10	13.3
기능직/조립직	1	1.3
단순노무직	6	8.0
소계	75	100.0
고용형태		
전일제근로	37	49.3
시간제근로/아르바이트	28	37.3
자영업	7	9.3
기타	3	4.0
소계	75	100.0
기초생계수급비 지원 여부		
받고 있음	106	49.8
받지 않음	107	50.2
소계	213	100.0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인 75명의 직업을 보면 사무직이 22명, 29.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전문직/관리직(18명, 24.0%), 서비스직(18명, 24.0%)이다. 그 다음으로 판매직(13.3%), 단순노무직(8.0%)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전일제근로 37명(49.3%)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시간제근로 또는 아르바이트가 28명, 37.3%로 나타났다. 자영업은 9.3%로 소수에 불과하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3분의 1정도(35.2%)만이 소득활동을 하고, 이들 중 절반 정도만이 전일제로 일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의 근로 및 이를 통한 소득의 확보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 대다수가 어린 자녀 양육으로 제한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사 대상자 절반 정도가 기초생계 수급자이다. 기초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가 49.8%, 지원받지 않는 경우가 50.2%로 나타났다.

아이 아빠 및 그 가족으로부터의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자. 현재 소득 중 아이아빠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물어본 결과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92.0%로 미혼모 자녀 대부분이 아이아빠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 213명중 단 17명으로 8.0%에 불과하다. 아이 아빠로부터 받은 양육비 분포를 보면, 50만원이하가 7명(3.3%), 10만원이하와 30만원이하가 각각 3건, 100만원이하와

150만원이하가 각각 2건이었다. 전체 소득 중 아이아빠 또는 아이아빠가족으로부터 받은 소득비율은 평균 4% 정도에 그치고 있다. 미혼모 자녀 대부분이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4〉 미혼부로부터 받은 양육비 현황

(단위: 명, %)

구분	명수	비율
0원	196	92.0
10만원 이하	3	1.4
30만원 이하	3	1.4
50만원 이하	7	3.3
100만원 이하	2	0.9
150만원 이하	2	0.9
중간값	0	
평균	3.8	
전체 소득 대비 아이아빠/아이아빠 가족으로부터 받은 소득 비율	4.0	
합계	213	100.0

## 2. 미혼부 양육비 책임에 대한 미혼모의 태도

### 적정 양육비에 대한 미혼모 의견

기존 한부모가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양육비 이행 수준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양육비 지급의무, 청구, 이행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있고, 정부의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받는 자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양육비 청구에 있어서 양육비와 관련된 양육부모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양육비와 관련된 미혼모의 태도 및 관련 현황을 검토하였다.

조사대상자에게 적정 양육비 수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월평균 적정한 자녀 양육비 지급액수는 60만원이상이 4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50-60만원미만으로 23.0%, 40-50만원 미만은 20.7% 순서로 나타났다. 안받겠다는 미혼모는 3명으로 1.4%였다. 사례조사에 의하면 미혼모가 법원에서 판결 받은 양육비 금액은 30만원-40만원인 경우가 많은데, 조사대상 양육미혼모의 69.5%가 50만원이상을 적정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양육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IV-5〉 양육미혼모가 생각하는 월별 적정 양육비

(단위: 명, %)

구분	명수	비율
20-30만원 미만	5	2.3
30-40만원 미만	13	6.1
40-50만원 미만	44	20.7
50-60만원 미만	49	23.0
60만원 이상	99	46.5
안받겠다	3	1.4
합계	213	100.0

〈표 IV-6〉 미혼부의 면접교섭권 인지여부

(단위: 명, %)

구분	명수	비율
예	98	46.0
아니오	115	54.0
합계	213	100.0

아이아빠는 한편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를 면접할 권리가 있다. 양육미혼모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양육비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아이아빠의 자녀 면접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여 양육비 청구를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아이아빠가 면접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46.0%, 그렇지 않은 경우가 54.0%로 나타났다. 갈등을 피하고 싶은 미혼모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아이아빠와의 만남을 긍정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 아이아빠와의 관계 및 상황별 양육비책임에 대한 태도

아이아빠가 양육비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 대한 미혼모의 태도를 살펴보자. ‘매우 책임이 많다’는 태도가 47.9%로 절반의 응답자가 아이아빠의 양육비 책임에 대해서 강하게 동의하고 있다.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한 경우는 39.4%로, 전체 응답자의 87.3%인 대다수가 양육비 책임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표 IV-7〉 아이아빠의 양육비책임

(단위: 명, %)

구분	명수	비율
전혀 책임이 없다	12	5.6
별로 책임이 없다	15	7.0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84	39.4
매우 책임이 많다	102	47.9
합계	213	100.0

### 자녀인지와 양육비책임에 대한 미혼모 태도

미혼모의 경우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서는 아이아빠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야 하며, 이들 통해 부모자녀 관계가 확립된다. 아이아빠의 양육 책임에 대한 미혼모 태도와 자녀인지 여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녀인지를 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96.3%로 거의 대부분에 해당된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자녀인지를 하지 않은 경우가 85.5%, 자녀인지를 한 경우가 14.5%이다. 이를 보면 아이아빠가 자녀양육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녀 인지를 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으며, 양육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인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8〉 인지 여부별 양육비책임에 대한 미혼모 태도

(단위: 명, %)

구분	합계	책임없다	책임있다
그렇다	28 (13.1)	1 (3.7)	27 (14.5)
아니다	185 (86.9)	26 (96.3)	159 (85.5)
합계	213 (100.0)	27 (100.0)	186 (100.0)

인지방식은 아이아빠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인지 청구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다. 자녀인지 방식을 보면 임의인지가 89.3%이며, 강제인지가 10.7%로 임의인지 방식이 대부분이다.

인지를 하지 않은 미혼모 중 향후에도 인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았다. 이유를 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74.3%는 아이 아빠를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서라고 응답하고 있다. 아이 아빠와의 불편한 관계가 인지 및 양육비 청구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인지욕구와 양육비와 관련된 태도를 함께 살펴보자. 아이아빠가 자녀양육비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미혼모의 경우 자녀인지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가 79.2%로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양육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이아빠와 연락하거나 만나고 싶지 않아서가 73.2%로 높게 나타났고, 아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까봐 두려워서가 23.2%로 나타났다.

〈표 IV-9〉 인지 원치 않는 이유별 양육비책임에 대한 미혼모 태도

(단위: 명, %)

구분	합계	책임없다	책임있다
아이 아버지가 아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까봐	29 (21.3)	3 (12.5)	26 (23.2)
더 이상 아이 아버지와 연락하거나 만나고 싶지 않아서	101 (74.3)	19 (79.2)	82 (73.2)
나 혼자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있기 때문에	6 (4.4)	2 (8.3)	4 (3.6)
합계	136 (100.0)	24 (100.0)	112 (100.0)

#### 아이아빠 특성별 양육비책임에 대한 미혼모 태도

아이아빠 양육비 책임에 대한 미혼모 태도와 임신당시 및 최근 아이아빠 직업의 관계를 살펴보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아이아빠의 직업이 서비스직인 비율이 35.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판매직이 21.4%, 기능직/조립직 14.3%, 전문직/관리직 14.3% 순서로 나타났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서비스직이 32.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동일하지만, 두 번째는 전문직/관리직인데 27.4%로 나타났다. 아이아빠의 직업은 이들의 양육비 책임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관리직 직업을 가진 아이아빠는 양육비 지급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양육비 책임에 대한 미혼모의 태도가 아이 아빠 직업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현재의 아이 아빠 직업과 아이아빠 양육비 책임에 대한 미혼모의 태도를 보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미혼모 중 아이 아빠 직업을 모르는 비율이 55.6%로 절반이 넘게 나타났다. 아이아빠의 직업을 모르는 경우는 상호간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상황이 미혼모로 하여금 아이아빠의 양육비 제공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 같다. 반면 아이아빠가 양육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아이아빠 직업을 모르는 경우가

38.7%로 가장 비율이 높으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보다는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아이 아빠 직업이 없거나 서비스직 또는 전문직/관리직인 경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보다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10〉 미혼부 직업별 양육비책임에 대한 미혼모 태도

(단위: 명, %)

구분	임신당시 아이아빠 직업		현재 아이아빠 직업	
	책임없다	책임있다	책임없다	책임있다
전문직/관리직	2 (14.3)	26 (27.4)	1 (3.7)	21 (11.3)
사무직	0 0.0	14 (14.7)	1 (3.7)	5 (2.7)
서비스직	5 (35.7)	31 (32.6)	1 (3.7)	21 (11.3)
판매직	3 (21.4)	6 (6.3)	2 (7.4)	8 (4.3)
농림어업직	1 (7.1)	2 (2.1)	1 (3.7)	2 (1.1)
기능직/조립직	2 (14.3)	3 (3.2)	1 (3.7)	9 (4.8)
단순노무직	1 (7.1)	8 (8.4)	1 (3.7)	9 (4.8)
직업이 없음	0 (0.0)	1 (1.1)	4 (14.8)	39 (21.0)
직업을 모름	0 (0.0)	4 (4.2)	15 (55.6)	72 (38.7)
합계	14 (100.0)	95 (100.0)	27 (100.0)	186 (100.0)

미혼모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과정은 아이 아빠와 많은 다툼과 갈등을 겪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랑하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혼외 임신이 확인되면, 많은 남성은 낙태나 입양을 권유한다. 아이아빠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홀로 키울 수밖에 없게 된다. 임신과 출산 사실을 아이 아빠에게 고지했을 때 반응은 양육비 책임과 관련된 미혼모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이아빠 양육비 책임에 대

한 미혼모 인식과 임신에 대한 아이아빠 반응에 대해 살펴보자. 책임이 없다는 집단에서는 아이 낳는 것에 찬성함/양육비를 주겠다고 함이 40.0%로 가장 많고, 아이 낳는 것에 반대함/양육비를 주고 싶으나 형편이 안된다고 함(30.0%),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함/아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함(20.0%)의 순이었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미혼모 집단의 경우는 아이 낳는 것에 찬성함/양육비를 주겠다고 함(41.5%)과 아이 낳는것에 반대함/양육비를 주고 싶으나 형편이 안된다고 함(41.5%)이 동일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아이아빠의 양육비 책임에 대한 미혼모 태도는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것에 따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IV-11〉 임신 및 출산에 대한 미혼부 반응별 양육비책임에 대한 태도

(단위: 명, %)

구분	임신 알렸을 때 아이아빠 반응		출산 알렸을 때 아이아빠 반응	
	책임없다	책임있다	책임없다	책임있다
아이 낳는 것에 찬성함 /양육비를 주겠다고 함	8 (40.0)	68 (41.5)	3 (17.6)	31 (20.8)
아이 낳는 것에 반대함 /양육비를 주고 싶으나 형편이 안된다고 함	6 (30.0)	68 (41.5)	4 (23.5)	31 (20.8)
내 아이가 아니라고 단정함 /아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함	4 (20.0)	9 (5.5)	7 (41.2)	35 (23.5)
반응이 없음	2 (10.0)	19 (11.6)	3 (17.6)	51 (34.2)
기타	0 (0.0)	0 (0.0)	0 (0.0)	1 (0.7)
합계	20 (100.0)	164 (100.0)	17 (100.0)	149 (100.0)

출산 고지와 양육비 책임에 대한 태도를 보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내 아이가 아니라고 단정함/아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함이 41.2%로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반응이 없음이 34.2%로 가장 높고, 다음이 내 아이가 아니라고 단정함/아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함(23.5%)이었다. 출산에 대한 아이아빠의 태도가 긍정적인 경우 아이아빠의 양육비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아이아빠의 태도가 극히 부정적일 경우, 아이아빠의 양육 책임에 대한 태도는 약화된다.

임신이나 출산 사실을 아이아빠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와 아이아빠 양육비 제공 책임에 대한 미혼모 태도와의 관계를 보자. 임신과 출산 사실을 공지 않은 이유가 상대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경우 아이아빠의 양육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락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양육비를 받을 가능성이 적은 경우, 양육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 연락처를 모르거나 낙태권유나 아이에 대한 권리 주장이 두려워 알리지 않은 경우, 양육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2〉 임신 및 출산 미공지 이유별 양육비책임 관련 미혼모 태도

(단위: 명, %)

구분	임신 알리지 않은 이유		출산 알리지 않은 이유	
	책임없다	책임있다	책임없다	책임있다
연락처를 몰라서	0 (0.0)	3 (13.6)	0 (0.0)	6 (16.2)
연락해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1 (14.3)	1 (4.5)	2 (20.0)	6 (16.2)
낙태를 권유할까봐 /아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까봐	0 (0.0)	6 (27.3)	0 (0.0)	4 (10.8)
더 이상 연락하거나 만나고 싶지 않아서	6 (85.7)	12 (54.5)	8 (80.0)	21 (56.8)
Total	7 (100.0)	22 (100.0)	10 (100.0)	37 (100.0)

#### 양육비 관련 현황별 양육비책임에 대한 미혼모 태도

양육비와 관련된 미혼모 현황별로 아이아빠의 양육비 책임에 대한 미혼모 태도를 살펴보자. <표 IV-13>를 보면 조사대상 213명 중 양육비를 받고 있는 비율은 14.6%, 양육비 소송 중인 경우 2.8%, 양육비 소송이 완료되었지만 받지 못한 비율은 1.4%, 소송의사가 있는 경우가 22.1%, 소송의사가 없는 경우가 59.2%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람들 중 소송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양육비와 관련하여 미혼모가 처한 상황과 아이아빠 양육비 책임에 대한 미혼모 태도는 관련성을 보인다. 양육비를 받고 있는 집단과 향후 소송의사가 있다는 집단에서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양육비 소송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3〉 양육비 관련 현황별 양육비책임에 대한 미혼모 태도

(단위: 명, %)

구분	합계	책임없다	책임있다
양육비 받음	31 (14.6)	2 (7.4)	29 (15.6)
양육비 소송중	6 (2.8)	0 0.0	6 (3.2)
양육비 소송완료 되었지만 받지 못함	3 (1.4)	0 0.0	3 (1.6)
양육비 소송 의사 있음	47 (22.1)	2 (7.4)	45 (24.2)
양육비 소송 의사 없음	126 (59.2)	23 (85.2)	103 (55.4)
합계	213 (100.0)	27 (100.0)	186 (100.0)

먼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있는 31명의 미혼모 집단을 살펴보자. 양육비를 받은 경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27명, 법적 소송은 4명으로 절대 다수가 합의를 통해서 받았다. 양육비를 받는 형태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고 있음이 64.5%, 양육비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주지 않음이 19.4%, 형편이 될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받음이 9.7%, 매월 정기적으로 받다가 불규칙하게 받고 있음이 6.5%로 나타났다. 양육비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더라도, 현재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거나 부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전체의 35.6%로 1/3이 넘는다. 양육비 이행 실적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양육비는 40만원 초과가 32.3%로 가장 많고, 두 번째가 10만원 이하로 29.0%, 20만원초과-40만원 이하가 25.8%, 10만원초과-20만원이하 12.9%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는 양육비의 중간값은 32.5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IV-14〉 양육비 관련 현황 : 양육비를 받은 적이 있는 집단

(단위: 명, %)

구분	명수	비율
양육비 받는 경로		
당사자간 합의로	27	87.1
법적소송을 통해서	4	12.9
양육비 받는 형태		
매월 정기적으로 받고 있음	20	64.5
형편이 될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받음	3	9.7
매월 정기적으로 받다가 불규칙하게 받고 있음	2	6.5
양육비를 받았는데 지금은 주지 않음	6	19.4
월평균 받는 양육비		
10만원 이하	9	29.0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	12.9
20만원 초과-40만원 이하	8	25.8
40만원 초과	10	32.3
중간값		32.5
합계	31	100.0

#### 4. 미혼모의 양육비 소송 관련 태도

##### 양육비 소송관련 현황 및 태도

〈표 IV-15〉 양육비 소송 관련 현황: 소송 중인 집단

(단위: 명, %)

구분	명수	비율
양육비 소송 인지 경로		
같은 미혼모	1	16.7
미혼모시설/센터	3	50.0
인터넷	1	16.7
가족/친지/친구	1	16.7
양육비 소송 돕는 단체		
대한법률구조공단	1	16.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3	50.0

구분	명수	비율
일반 변호사 사무실	1	16.7
기타	1	16.7
양육비 소송 진행과정 어려움		
매우 어렵다	2	33.3
약간 어렵다	2	33.3
거의 어렵지 않다	2	33.3
양육비 소송 진행 어려운 점		
진행하는 기간이 김	4	66.7
아이 아버지의 신상조회의 어려움	1	16.7
기타	1	16.7
지원받는 법률서비스 만족도		
매우 불만족	1	16.7
불만족	2	33.3
만족	2	33.3
매우 만족	1	16.7
합계	6	100.0

현재 양육비 소송이 진행 중인 사례는 전체 응답자 중 6명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양육비 소송 인지 경로를 보면 미혼모시설/센터가 3명, 같은 미혼모 1명, 인터넷 1명, 가족/친지/친구가 1명이었다. 양육비 소송을 돕는 단체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3명으로 가장 많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변호사 사무실, 기타가 각각 1명이다. 양육비 소송진행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매우 어렵다 2명, 약간 어렵다 2명, 거의 어렵지 않다가 2명으로 나타나, 어렵게 생각하는 미혼모의 비율이 높았다. 양육비 소송 관련 어려운 점은 6명중 4명이 진행과정이 길다는 점을 들었다. 지원받는 법률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과 불만족의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은 16.7%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양육비 소송을 준비하는 미혼모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양육비 소송을 계획하는 경우 도움을 받을 단체로 고려하는 곳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50.0%로 가장 많고 다음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었다. 소송 준비 과정 중 부담요소는 아이 아버지를 대면하는 것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아이 아버지의 신상정보 찾기 27.8%, 소송에 필요한 서류준비 22.2% 순서로 나타났다.

〈표 IV-16〉 양육비 소송 계획 현황 : 소송 준비 집단

(단위: 명, %)

구분	명수	비율
양육비 소송 도움 받을 단체		
대한법률구조공단	15	27.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7	50.0
일반 변호사 사무실	2	3.7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3	5.6
기타	7	13.0
소송 준비과정 중 부담요소		
소송에 필요한 서류 준비	12	22.2
아이 아버지의 신상찾기	15	27.8
옛날 이야기를 들쳐내는 것	10	18.5
아이 아버지를 대면하는 것	16	29.6
기타	1	1.9
합계	54	100.0

양육비 소송 의사가 없는 미혼모에 대해서 살펴보자. 소송의사가 없는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응답은 양육비 문제를 통해 연락하거나 만나고 싶지 않아서 44.4%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 이유로는 아이 아버지가 양육비를 줄 형편이 되지 않아서(20.6%)이며, 세 번째는 양육비를 대가로 친권 및 양육권을 요구할까봐(14.3%)이다. 이를 보면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아이 아버지와 연락하거나 아이를 아이아빠에게 빼앗기는 것을 더 두려워하여 소송을 고려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V-17〉 양육비 소송 의사가 없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명수	비율
연락처를 몰라서	9	7.1
아이 아버지가 양육비 줄 형편이 되지 않아서	26	20.6
양육비를 대가로 친권 및 양육권을 요구할까봐	18	14.3
양육비 문제를 통해 연락하거나 만나고 싶지 않아서	56	44.4
양육비 문제로 법원에서 옛날이야기를 하는 것이 싫어서	6	4.8
나 혼자 키울 능력이 있어서	4	3.2
아이 출생을 모르고 있어서	7	5.6
합계	126	100.0



## 미혼모가족의 경제여건과 소송의사

<표 IV-18>은 미혼모 본인의 주요활동별 소송의사 여부를 분석한 것이다.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소송의사가 없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미혼모 본인이 진학/취업준비/직업훈련 중이거나 자녀양육에만 전념하는 경우 소송의사를 보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18〉 미혼모 활동별 소송의사

(단위: 명, %)

구분	합계	소송의사있음	소송의사없음
학생	6 (3.5)	1 (2.1)	5 (4.0)
진학/취업준비/직업훈련 중	27 (15.6)	12 (25.5)	15 (11.9)
구직활동(실업상태)	23 (13.3)	2 (4.3)	21 (16.7)
자녀양육에만 전념	56 (32.4)	18 (38.3)	38 (30.2)
소득활동	61 (35.3)	14 (29.8)	47 (37.3)
합계	173 (100.0)	47 (100.0)	126 (100.0)

고용형태별로 소송의사를 보면 미혼모 본인이 전일제 근로를 하고 있으면 소송의사가 없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반면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소송의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미혼모 본인의 경제활동이 안정적이면, 아이아빠의 양육비에 대한 기대가 낮고, 경제활동이 불안정하면 양육비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9〉 미혼모 고용형태별 소송의사

(단위: 명, %)

구분	합계	소송의사있음	소송의사없음
전일제근로	31 (50.8)	4 (28.6)	27 (57.4)
시간제근로/아르바이트	24 (39.3)	8 (57.1)	16 (34.0)
자영업	5 (8.2)	1 (7.1)	4 (8.5)
기타	1 (1.6)	1 (7.1)	0 0.0
합계	61 (100.0)	14 (100.0)	47 (100.0)

#### 아이가빠 특성별 소송의사

아이가빠의 특성별 미혼모의 소송의사를 살펴보자. 먼저, 출산 당시 아이가빠의 연령별로 소송의사를 보면, 20대 이하에서는 소송의사가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30대 이상에서는 소송의사가 없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임신당시 아이가빠의 주된 활동별 소송의사를 살펴보자. 아이가빠가 학생인 경우 소송의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아이가빠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활동을 모르는 경우 소송의사가 없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앞에서 아이가빠의 직업과 관련하여 직업능력이 있는 경우 양육비 책임이 있다는 응답과 상반된 결과인 듯하다. 아이가빠의 활동 중 주된 활동은 연령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학생이거나 직업훈련 중인 경우 평균 연령이 낮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아이가빠 연령별 소송의사를 보면, 20대 이하에서는 높고, 30대 이상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주된 활동이라는 변수가 연령 및 혼인상태와 연관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표 IV-20〉 임신당시 아이아빠 활동별 소송의사

(단위: 명, %)

구분	합계	소송의사있음	소송의사없음
학생	30 (17.3)	12 (25.5)	18 (14.3)
진학/취업준비/직업훈련 중	3 (1.7)	1 (2.1)	2 (1.6)
구직활동(실업상태)	11 (6.4)	3 (6.4)	8 (6.3)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음	21 (12.1)	6 (12.8)	15 (11.9)
모른다	17 (9.8)	3 (6.4)	14 (11.1)
소득활동	91 (52.6)	22 (46.8)	69 (54.8)
합계	173 (100.0)	47 (100.0)	126 (100.0)

#### 아이아빠의 자녀관련 태도 및 관계와 소송의사

임신하기 전 아이아빠와 알고지낸 기간별 소송의사를 보자. 알고 지낸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소송의사가 없는 비율이 더 높다. 1년이상 3년미만인 경우에는 소송의사가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3년이상 5년미만 기간은 소송의사가 없는 비율이 높고 5년 이상은 소송의사가 있는 비율이 높다. 전반적으로 알고 지낸 기간이 길면, 소송의사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IV-21〉 임신전 아이아빠와 알고 지낸 기간별 소송의사

(단위: 명, %)

구분	합계	소송의사있음	소송의사없음
1년 미만	54 (31.4)	10 (21.3)	44 (35.2)
1년 이상~3년 미만	74 (43.0)	23 (48.9)	51 (40.8)
3년 이상~5년 미만	28 (16.3)	6 (12.8)	22 (17.6)
5년 이상	16 (9.3)	8 (17.0)	8 (6.4)
합계	172 (100.0)	47 (100.0)	125 (100.0)

임신 고지 여부별 소송의사를 살펴보자. 임신 사실을 알린 경우는 전체의 85.0%인데, 이 경우 소송의사가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임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사가 없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임신고지와 소송여부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임신 통보 여부별 소송의사

(단위: 명, %)

구분	합계	소송의사있음	소송의사없음
예	147 (85.0)	44 (93.6)	103 (81.7)
아니오	26 (15.0)	3 (6.4)	23 (18.3)
합계	173 (100.0)	47 (100.0)	126 (100.0)

〈표 IV-23〉 임신 통보 후 아이아빠 반응별 소송의사

(단위: 명, %)

구분	합계	소송의사있음	소송의사없음
아기낳는 것에 찬성함	57 (38.8)	16 (36.4)	41 (39.8)
아기낳는 것에 반대함	60 (40.8)	19 (43.2)	41 (39.8)
내 아이가 아니라고 단정함	12 (8.2)	2 (4.5)	10 (9.7)
반응 없음	18 (12.2)	7 (15.9)	11 (10.7)
합계	147 (100.0)	44 (100.0)	103 (100.0)

임신 통보 당시 아이아빠 반응별 소송의사를 살펴보자. 임신사실을 알렸을 때 아이아빠의 반응을 보면 아기 낳는 것에 반대한 경우가 40.8%, 아기낳는것에 찬성함이 38.8%, 반응 없음이 12.2%이며, 내 아이가 아니라고 단정한 경우는 8.2%였다. 아기 낳은 것에 찬성한 경우, 소송 의사가 없는 비율이 더 높지만, 반대한 경우는 소송의사가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아이아빠가 자신의 아이임을 부인한 경우 소송의사가 없는 비율이 더 높지만, 반응

이 없는 경우는 소송의사가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표 IV-24〉 출산 통보 여부별 소송의사

(단위: 명, %)

구분	합계	소송의사있음	소송의사없음
예	128 (74.0)	37 (78.7)	91 (72.2)
아니오	45 (26.0)	10 (21.3)	35 (27.8)
합계	173 (100.0)	47 (100.0)	126 (100.0)

〈표 IV-25〉 출산 통보 후 아이아빠 반응별 소송의사

(단위: 명, %)

구분	합계	소송의사있음	소송의사없음
양육비를 주겠다고 함	17 (13.3)	5 (13.5)	12 (13.2)
양육비를 주고 싶으나 형편이 안 된다고 함	31 (24.2)	8 (21.6)	23 (25.3)
아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함	34 (26.6)	7 (18.9)	27 (29.7)
반응이 없음	45 (35.2)	17 (45.9)	28 (30.8)
기타	1 (0.8)	0 0.0	1 (1.1)
합계	128	37	91

출산사실 통보 여부별 소송의사를 살펴보자. 출산을 통보한 경우 소송의사가 있는 비율이 더 높지만, 출산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소송의사가 없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출산 통보에 대한 아이아빠의 반응별 소송의사를 살펴보자. 반응이 없는 비율이 35.2%로 가장 높고, 아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비율은 26.6%, 양육비를 주고 싶으나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비율은 24.2%,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는 비율은 13.3%로 나타났다. 양육비를 주고 싶으나 형편이 안 된다는 경우와 아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경우 소송의사가 없는 비율이 더 높고, 반

응이 없는 경우는 소송의사가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V-26〉 아이아빠 관련 정보 인지별 소송의사

(단위: 명, %)

구분	합계	소송의사있음	소송의사없음
아이아빠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84 (48.6)	26 (55.3)	58 (46.0)
아이아빠의 집주소를 알고 있다	53 (30.6)	23 (48.9)	30 (23.8)
아이아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	65 (37.6)	26 (55.3)	39 (31.0)
아이아빠가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56 (32.4)	17 (36.2)	39 (31.0)
아이아빠가 자녀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다	63 (36.4)	27 (57.4)	36 (28.6)
양육비 청구시 인지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	78 (45.1)	28 (59.6)	50 (39.7)
국가에서 양육비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을 알고 있다	86 (49.7)	26 (55.3)	60 (47.6)
합계	173 (100.0)	47 (100.0)	126 (100.0)

아이아빠에 대한 신상정보나 근황 인지별로 소송의사를 살펴보자. 아이아빠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집주소를 아는 경우 소송의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이아빠가 일하는 곳을 알거나 아이아빠가 양육비 지급 능력이 있는 경우 역시 소송의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양육비 청구시 인지가 필요한 것을 아는 경우와 정부의 무료 법률지원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도 소송의사가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5.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과제

혼외 출산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자녀양육비 지급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 기존의 판례에서도 이 점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양육 미혼모만이 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다.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혼 가정의 자녀 복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2009년 가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이를 통해 이혼 과정에

서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보다 명확해졌다. 양육미혼모의 경우 양육비 청구에 앞서 인지청구를 해야 한다. 양육미혼모의 경우 아버지와 자녀의 법적 관계 확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이혼가정에 비해서 양육비 청구와 이행에는 어려움이 더 많다.

본 연구에 의하면 양육미혼모의 14.6%가 자녀양육비를 받았고, 전체 조사대상자 중 9.4%만이 매달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미혼부에 대한 자녀양육비 청구나 관련 의무 이행이 저조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양육비와 관련된 양육미혼모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사대상자의 대다수인 87.3%가 미혼부가 양육비 지급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반 이하인 47.9%만이 매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39.4%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양육비를 받고 있거나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양육미혼모를 제외하면, 조사대상자의 대다수인 72.8%는 양육비 소송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양육비를 받은 양육미혼모의 경우도 다수가 화해를 통해서 받았고, 소수가 청구 소송을 통해 받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양육 미혼모가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청구한다는 것이 몹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양육비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원하지 않은 양육 미혼모 모두 아이의 아버지와 대면하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다. 임신, 자녀출산, 자녀양육을 둘러싸고 아이 아버지와 심각한 정서적 갈등을 경험한 이들로서는 양육비 청구를 계기로 이들과 대면해야 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 및 이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본 연구는 미혼모를 대신하여 아동양육비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V. 향후 과제

### 양육비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

미혼한부모 가족을 포함한 한부모 가족에서의 양육비 이행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양육비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혼이나 혼외 자녀 출생 이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는 양육비 제공의 책임이 있다. 양육 미혼모의 경우도 아이아빠가 양육비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 관련법에서 제시되고 있고, 판례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차원에서 이혼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 왔다. 정부도 양육비 청구 및 이행과 관련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이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본 연

구의 실태조사에서도 양육비 이행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다수 이혼 한부모 가족과 미혼모 가족의 자녀는 동거하는 양육부모 혼자의 힘으로 양육되고 있는 것이다.

법이 존재함에도 이행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양육비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기 때문이다. 미혼모의 아이아빠 중에는 자신이 낳기를 원치 않은 혼외자녀에 대한 양육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자신이 양육비 제공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의 양육결정에 대해서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 관련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제공의무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혼외자녀의 아버지가 비양육 한부모이면 양육비 제공은 기본적 의무로 생각해야 하고, 양육 한부모들은 양육비 청구를 자녀의 권리 실현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의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 양육비 청구지원 상담서비스 강화

본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양육미혼모는 아이아빠가 자녀양육비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소극적이다. 대부분 양육미혼모는 자녀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이아빠와 극심한 갈등을 경험하며 다시 대면하기를 원치 않는다. 본 연구에서도 양육비 이행이 저조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양육비 청구 과정에서 아이아빠를 만나면 옛날의 나쁜 기억이 되살아나고, 감정적 대립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같은 상황을 양육미혼모들은 피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법원을 통해 양육비 청구와 이행 요청을 진행해야 한다. 관련 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탁월한 법률적 지식을 소유하고, 적대적 태도의 소송 상대를 대면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야 하며, 시간이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대다수 한부모들은 소송에 요구되는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이유로 비양육 한부모로부터의 양육비가 절실하지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한부모의 인지도 및 접근성 역시 높지 않다. 법률구조서비스에 전 단계 수준에서 한부모들에게 양육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서비스의 주체는 한부모센터나 미혼모 지원센터에서 진행될 수 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한부모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이나 전화로 양질의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상담을 통해 양육 한부모들이 정부의 무료 법률 구조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소득인정액에서 양육비 제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양육미혼모의 절반이 기초생계수급비를 받고 있다. 자녀양육비를 소득인정액에 포함한다면, 기초생계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양육비 금액만큼 제외된 수급비를 받게 된다. 현실이 이렇다면, 기초생계수급비를 받는 양육 미혼모가 양육비를 청구할 동기가 별로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양육비를 아이아빠에게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을 통하기보다는 소득과악이 드러나지 않는 비공식적 방식으로 양육비를 요구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육 미혼모뿐만 아니라 이혼 양육 한부모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양육비 청구 및 이행의 확대는 절실한 정책 과제이다. 당사자들에게 양육비 청구의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기초생계수급 한부모나 한부모 정책지원 대상자의 경우 비동거 한부모로부터 받는 양육비를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양육비 청구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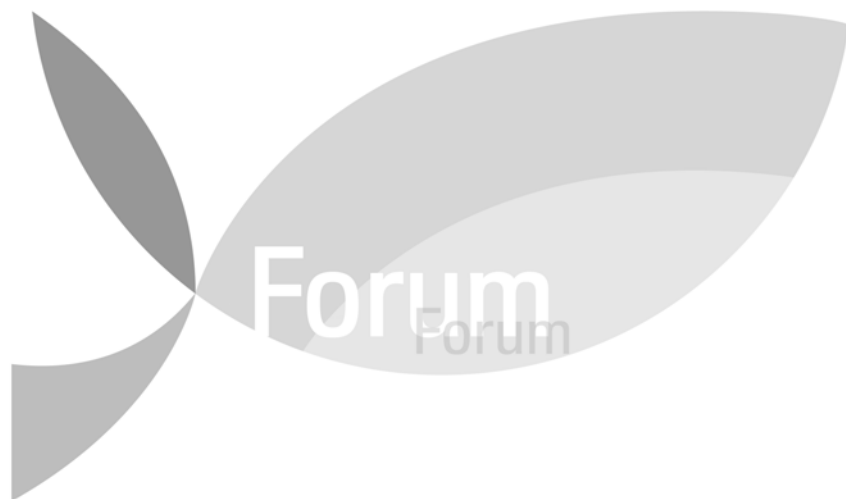
## 참고문헌

- 김혜영·장혜경·김영란(2006), 「이혼후 자녀양육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선보영·김은영·정재훈(200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2011a), 「2011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1b), 「아동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 연구」, 여성가족부·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여성가족부(2011c), 「아동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 연구-조사분석보고서」, 여성가족부.
- 이미정(2011). 「미혼부의 책임강화 방안」,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여봉(2003),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 지원 방안」, 강남대학교·보건복지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1), 「이혼가정과 자녀양육-‘양육비 제대로 받고 있는가’」.

## 미혼모들이 경험한 인지청구 및 양육비소송 서비스

최형숙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기획홍보팀장)



## 1. 들어가는 말

최근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혼모가 자녀 양육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미혼모와 그 자녀에게 현실적인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그 자녀들이 교육현장에서 모든 아동들과 함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며 임신을 하였을 때는 여성과 남성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출산 후 우리사회에서 미혼모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로만 여기고 있지만 이는 아동의 인권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미혼모는 임신과 동시에 가족과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출산 후에는 혼자서 양육으로 경제적 심리적 위기에 처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언제나 제외 되어있는 것이 아이 아빠의 부제이다. 많은 미혼모들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고스란히 떠안고 혼자서 모든 삶을 책임지지만 여기에서 꼭 이루어져야하는 아이 아빠인 미혼부의 책임과 역할이다. 대부분의 미혼부들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낙태를 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몇 분의 미혼모 당사자들의 양육비 소송 진행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다.

## 2. 자료수집 과정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 중 양육비 소송을 진행 중인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의 도움으로 진행하였고 혼인 외에 생긴 아이에 대한 남성들의 자녀 인지와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 고려대학교 남학생과 현재 미혼 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에 참석하지 않고 양육비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소송을 끝낸 미혼모들의 대상으로 이메일로 사례를 모집하였다. 대상자들은 미혼모가족협회의 회원 이었고 협회에서 도움을 받았다. 사례모집 대상자는 협회에 도움을 주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소개받고 그 당사자들의 도움으로 사례자를 모집하였다.

〈표 1〉 미혼부 법적 책임화 방안을 위한 집단인터뷰

일시	참석자	내용
2011년 6월16일	양육미혼모	양육비소송과정과 어려움
2011년 6월24일	고려대학교 남학생	양육비에 인지 정도파악

〈표 2〉 양육 미혼모 소송과정 사례모집

거주 지역	연령(자녀연령)	소송현황	소송기간	소송결과	이행여부	소송기관
서울시	27세 (여 4세)	소송종료	6개월	아동양육비 월30만원	이행 안 됨	일반변호사
서울시	29세 (여 4세)	소송종료	6개월	아동양육비 월60만원	이행중	일반변호사
서울시	33세 (여 4세)	소송종료	7개월	아동양육비 월 40만원	이행 안 됨	일반변호사
경기도	30세 (남 3세)	소송중	14개월	진행중		무료법률구 조공단
제주도	24세 (남 3세)	소송완료	1년	아동양육비 월 30만원	이행 안 됨	무료법률구 조공단
서울시	20세 (남 2세)	소송종료	8개월	아동양육비 월40만원	이행중	일반변호사

#### • 사례1 (20세)

2011년 1월 22일 경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아이아빠와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적은 usb 파일을 냈었습니다. 6하 원칙으로 쓰라고 해서서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기준으로 아이아빠와 있었던 사건들을 자세히 써서 제출했습니다. 2~3일 후에 변호사측에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소장 이였습니다. 내용확인을 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사건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법률용어로 바꾸고 더 간단명료하게 정리해주셨습니다.

2011년 1월 31일 날짜로 저의 변호사님께서 소장 접수를 하셨습니다. 2011년 2월 22일 거의 한 달 만에 아이 아빠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2011년 3월 23일에 또 한 달 만에 변호사 사무실로 답장이 왔습니다. 답변서는 제 측에선 너무나 황당하고 어의가 없었습니다. 그 답변서는 아이아빠 입장에서 쓴 것이 아니고 아이아빠 부모님 입장에서 쓴 것 일 뿐더러 자기네 감정에만 치우치고, 생각만 하면 너무 화가 나는 사건들을 자기네 입장에 유리하게 썼습니다. 상대방 답변서에 쓰인 사건의 대한 오해 부분과 상황설명 부분들을 변호사님께 다시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기간이 제게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2011년 4월 26일에 변론기일(법정에 참가하는 날)이 잡혔습니다. 아직 어리고 수업도 있고 상처를 많이 받을까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당일 저녁에 변호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상대방 측에서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였고 일치 할 경우 양육비를 주시겠다. 하였고 유전자 날짜를 잡고 진행하였습니다.

2011년 5월초에 유전자 검사결과 일치하게 나왔습니다. 2011년 5월 24일 날 제출하고 5월 31일 2차 변론기일 저는 수업 때문에 참석 할 수 없었습니다. 양육비 매달 50만원씩 합의서를 상대방 변호사에게 보냈지만 월급이 500만원인 아빠를 가져도 매달 50만원은 판결받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안될 수도 있으니 실망하지 말라하셨고 전 이해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법의 판결을 받겠다며 합의는 거부했습니다.

2011년 6월 21일이 판결선고기일 아직 미성년자라 부모 이름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연기 되었습니다. 2011년 7월19일에 다시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이 아님) 변론기일날 부모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2일 판결 선고 기일이 열려 (일부 원고 승)로 권 양육권 모두 모인 저에게 주었고, 매월 40만원씩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상대방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졌고 2011년 8월 31일날 판결확정이 났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항소를 안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려 힘들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애가 타기만 했었습니다.

마지막 2011년 7월 19일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처음부터 미성년자라 부모이름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1분 만에 끝날 일을 그것도 저는 생일이 지나서 상관없지만 상대방이 생일이 안 지나서 상대방 측에만 문제가 있었고 양쪽 다 변론기일을 가져야 했다고 한 달을 기다려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과정은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2010년 12월생인데 제가 2011년 1월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빨리 양육비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지막 판결문에 2010년 12월~2030년 12월 까지 월 40만원에 양육비 책정을 받았는데 저희가 2010년 8월에 소송이 끝나서 9월에 40만원을 받았는데 판결문대로라면 2010년12월~8월까지 못 준 것도 줘야하지 않나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판결확정이 났으니깐 그건 저보고 알아서 상대방한테 문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판사님께서 변론기일에 상대방 측에게 50만원 줄 수 있냐고 물었고 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판사님이 40만원으로 깎으시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키우지는 못하지만 돈은 줄 수 있다고 하였는데.

키우는 사람은 엄마 혼자 근데 아이에게 드는 비용은 반반 부담! 이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키우는 사람이 엄마이면, 경제적으로는 더 많이 아빠쪽 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나

요? 3:7 정도로! 아니 아빠쪽에선 키우지도 않으면서 돈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법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요.

일자	진행내용	결과
2011. 01.22	진술서작성	
2011. 01.31	소송위임장제출	
2011. 02.22	송장송달	
2011. 03.23	답변서 받음	
2011. 04.26	1차 변론기일	친자확인 유전자검사의뢰
2011. 05.24	유전자검사결과서 제출	친자확인 검사결과 일치
2011. 05.31	2차 변론기일	상대방합의거부
2011. 06.21	판결선고기일	미성년자라부모이름으로 변경과정 판결연기
2011. 07.19	3차 변론기일	부모이름으로 소송을 변경
2011. 08.02	판결선고기일	친권양육권 엄마에게 판결 매월양육비 40만원 책정
2011. 08.31	최종판결	친권양육권 엄마에게 판결 매월양육비 40만원 책정 확정

## • 사례2

소송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기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만이라도 양육비를 주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에서는 허락받고 임신했냐며 상대방 자신이 아기를 포기했고 이제 남남이니 양육비를 줄 이유도 없다며 화를 냈습니다. 상대방에서는 책임질 것처럼 임신 중 약혼식도 올리고 저도 상대방 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 무섭기도 했지만 자식을 위해서 책임을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책임은 있지만 서로 반반씩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신 중 상대방의 어머니께서 “5개월에도 아기가 유산될 수 있다”며 구박을 하고 밭에 데려가 일을 시키고, 집 청소를 하고 잠시 쉬려고하면 “뭐 잘 한 것이 있냐며 임신한 주제에 쳐들어 놓고 지랄이야”며 혼내기 일쑤였습니다. “상대방이 대학비용이 2~3천만 원 들었으니 너는 학교도 안 나왔고 친정 부모님께 그 돈을 받아와도 괜찮다”며 임신 중에도 물론이고 아기 낳은 날까지 새벽2시에 찾아와 요구하였습니다. 너무 힘들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0일만에 다 포기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 떠나버린 사람이고 그 상대방의 어머니한테 당한 것도 너무 억울하고 상대방 때문에 아빠 없는 자식이라며 손가락질 당할까봐 너무 아기한테 미안하고 상대방과 상대방의 어머니에게 죄 값을 치르게 하

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은 약한 자에게는 불리하다고 혼인빙자간음죄라는 법은 이제 없어졌다고 피해자인 저희 미혼모가 할 수 있는건 양육비 소송뿐이었습니다.

2010년 8월 상대방에게 양육비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18일 첫 번째 재판에서는 판사가 인지확인을 위해 DNA검사를 하라고 하였고 상대방은 자기 자식인 것을 몰랐던 것처럼 아무런 합의 요구도 없이 소송을 걸어서 황당하다는 글이 답변서에 적혀있었습니다) 2010년 11월 29일 두 번째 재판에서는 저희 쪽에서는 검사를 하였지만 상대방에서 검사 비용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며 검사를 협조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런 결과 없이 끝이 났습니다. 2010년 12월 27일 세 번째 재판에서는 검사 후 99.9999% 친자 확인이 되어서 다시 상대방에서 자기 자식인 것이 확인 되었으니 양육권, 친권 모두 다 빼앗겼다고 제가 양육할 자격이 안 되는 증거를 서류준비해서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2011년 1월 31일 네 번째 재판에서는 저희 변호사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시게 되어 재판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2011년 2월 3월 4일 상대방에서 재판일 변경을 하고 2011. 5. 23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1년 6월에 새로 담당을 맡은 변호사님과 네 번째 재판이 진행되었고 저는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하여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쪽 변호사님이 합의를 하였고 결정하였습니다. 2011년 8월 18일 1년 만에 저는 월30만원 양육비를 주는 것으로 재판을 끝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 되는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가 세 번이나 바뀌었고 재판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참석하는 것을 불편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아이의 성이 바뀌어 있었고 판결을 받기 전 아이의 성을 변경하니 않는다는 조항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은 그 문제는 본인들끼리 만나서 진행하라고 하였지만 저는 다시는 상대방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연락을 하였고 사정을 하여 시청 직원 앞에서 아이아빠가 포기한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1년이라는 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 시간동안 저와 저의 가족들은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위자료 소송은 안 된다고 했고 과거 양육비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출산 하고부터 양육비는 꼭 책정을 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 겪어야 했기에 혼인관계가 아니더라도 위자료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	진행내용	결과
2010. 08	소송의뢰	
2010. 10.18	1차 변론기일	친자확인유전자검사의뢰 상대방 답변서 받음
2010. 11.29	2차 변론기일	상대방의 유전자 검사비협조로 무산
2010. 12. 27	3차 변론기일	친자 확인 일치 친권 양육권주장
2011. 01.31	4차 변론기일 연기	변호사 변경으로 연기
2011. 02.03	재판일 변경 신청	상대방 재판일 변경 신청
2011. 05. 23	4차 변론기일연기	변호사가 확정 되지 않음
2011. 06	4차 변론기일	양쪽 변호사 합의
2011. 08. 18	최종판결	매월 양육비 30책정 자녀의 성이 부의 성으로 바뀜
2011. 10	자녀 성 변경신청	합의하여 모의 성으로 변경

### • 사례3

2009년12월31을 출산하였고, 출산 전후로 상대방의 계속적인 거짓말과 불성실한 태도로 더 이상의 관계지속은 경제적으로나 원고와 자녀의 미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2010년 10월경 소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송함에 있어 원고본인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 이였고,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이유는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요구하고 싶었고 양육비소송을 하지 않고 아이를 다 키워 놓았을 때 상대방이 양육권을 행사할지 여부의 두려움 상대방이 아이인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고 자녀를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 부분 복잡한 문제들 상대방에 대한 억울한 감정들, 아이에 대한 안쓰러움, 미안함 .차후에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경우의 시간적인여유가 없을 것 같아 내가 경제활동을 하기 전에 판결을 받아놓고 싶은 마음 이였습니다.

2010년 8월경 안산지부 방문 했을 때 상대방의 주소가 서울임으로 관할지부로 접수 가능 하다하여 서울 중앙지부로 재방문하여 2층 상담창구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표를 뽑고 대략 30분 사이에 상담이 가능하였고, 본인은 미혼모로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으며 상대방이 아이의 존재도 인정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집안 문제 등으로 서류상 아이를 인지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방의 불성실한태도와 더 이상의 관계지속을 할 수 없기에 양육비소송을 원한다고 하였으며, 상대방의 등본상의 주소는 가리봉으로 되어있지만, 현재 살고 있는 주소는 철산동주소로 철산동의 정확한 주소와 상대방의 휴대폰번호까지 말씀드렸습니



다. 상담자는 수급자의 경우 무료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지만, 가능여부는 차후에 공단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시고 소송접수에 필요한 서류 진술서 증거자료 등본 수급자증명서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안내해주시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오면 실거주지로 소송안내서를 보낼 거라고 서류를 준비하셔서 접수하실 때는 바로 2층 창구로 오셔서 접수 가능하도록 도움을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송하기 전에 상대방과 얘기를 다시 한 번 좋게 얘기를 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증거서류도 받아놓으라고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2달 정도의 시간동안 변하지 않은 불성실함과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만의 행동들 계속적인 거짓말로 2010년 10월경 서류접수를 하였습니다. 2011년2월24일 집으로 법원등기가 왔습니다. 주소보정 명령 이였습니다.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부 모 자녀에 관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을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 명령서였습니다.

다음날 서류를 발급받아 서울중앙지부에 등기발송을 했습니다. 2011년3월16일 피고의 부 자녀에게 친족회신송달처리가 되었지만, 피고의 가족들 모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철산동주소에 거주했기 때문에 이 또한 가족이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11년4월13일 공시송달로 1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피고가 직접 법원에 소송안내서를 찾아가도록 처리가 되었고, 2011년5월12일 첫 번째 재판-변론기일이 정해졌고, 변호사님의 사무업무를 보시는 분이 상대방 없이 재판을 하기 때문에 친언니의 진술서 첨부요청을 하셔서 2011년4월28일 저희 언니의 진술서를 등기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없이 재판을 하는 것이고 첫 번째 재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변호사님 혼자진행을 한다고 하였고 의아해서 재판전날인 11일 전화통화로 출석 안 해도 괜찮은지 여부를 물었을 때도 같은 대답이셔서 몸 상태도 안 좋고 나름의 스케줄이 있었기에 알겠다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12일 출석당일 오전에 사무업무 하시는 분이 변호사님이 첫 번째 재판이니 출석 하는 게 좋겠다고 연락이 왔고 11일 통화내용과 사정 내용 말씀드리니, “아직 시간은 있는데 못 나오시겠다는 거죠?” 하시더군요. 찻찻한 기분으로 출석을 못하고 오후에 변호사님과의 통화를 하는데 재판장님이 친자확인검사요구를 하니 상대방의 연락처와 집을 알고 있지 않느냐 가서 애길 해보라고 하십니다. 저의 입장으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 었기에 “제가 꼭 해야 하나요.” 되물으며 그쪽과 두 번 다시 연락하고 싶지 않고 내가 그 집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난 친자확인검사를 할 돈도 없다 1차적으로 내가 부담을 해야 한다면 난 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 같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하나요? 000씨 감정싸움하자고 여러 사람고생시키는 거냐. 000씨가 의뢰를 해서 지금 무료로 여러 사람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고

생을 헛고생으로 만들 겁니까?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시나요? 친자확인검사 할 돈이 없다면, 특혜적으로 공단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자녀를 위한부 분이니 상대방과 통화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럼 통화를 했을 때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상대방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 라는 녹취자료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증거자료까진 제출 할 필요 없고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 연락을 해봐서 연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통화의 마지막에 제가 약자 입장에서 변호사님께 제가 감정적으로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라고 끊었고 그 후의 감정적인 스트레스는 너무도 컸습니다.

상대편한테 연락을 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증거자료도 필요 없는데 내가 상대방과 통화를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을 왜 하라고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하라고 하니 해야 하겠는데 결국 전화통화 시도를 해봤지만, 연락처는 없는 번호로 되어있고, 아르바이트 하던 곳은 4월에 그만 두었고 그 집에 찾아가봤으나 그 집의 구조상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의 여동생한테 통화를 하여 알리긴 알렸다는 내용을 변호사님 사무보시는 분께 전달했고 그럼 동생한테 친자확인검사 강제집행요청처리를 하신다고 통화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일자	진행내용	결과
2010. 12.16	원고 김00 소송위임장제출	
2011. 02.23	원고대리인 주소보정 제출	
2011. 03.23	원고대리인 서증목록 제출	
2011. 05.03	원고대리인 서증 제출	
2011. 05.25	원고대리인 사실조회촉탁신청, 감정신청, 수검명령신청 제출	
2011. 06.23	국000000단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1. 06.24	국000000단 구로금천지사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1. 06.29	원고대리인 열람 및 복사신청서 제출	
2011. 06.30	이00 촉탁(회신) 제출	
2011.07.01	원고대리인 송달장소변경신고서, 감정신청 제출	
2011. 08.09	이00 감정기일지정 제출	
2011. 08.17	원고대리인 납부서 제출	
2011. 08.26	이00 피감정인 불참회보 제출	
2011. 11.22	원고대리인 준비서면 제출	
2011. 11.24	원고대리인 수검명령신청 제출	
2011. 12.05	서000000과대학 감정일지통보 제출	

일자	진행내용	결과
2011. 12.16	원고대리인 납부서 제출	
2012. 01.20	원고대리인 휴일송달시청 제출	
2012.02.10	원고대리인 서000000과대학 법의학교실 감정일재지정통보 제출	
2012. 03.26	원고대리인 서000000과대학 법의학교실 피감정인불참통보 제출	
2012.04.06	원고대리인 서000000과대학 법의학교실 감정일재지정통보 제출	

### 3. 정책 제언

세 사람의 사례를 통하여 양육비소송에서 미혼모 당사자들이 처해진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사례 자는 소송이 진행되기 전 두 사람이 모두 미성년자였고 미혼모는 소송기간에 생일이 지났고 미혼 부는 미성년자이라 소송 중 부모이름으로 변경하여 진행되었다. 사전에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인지하고 시작하였다면 소송 기간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첫 사례 자가 얘기한 것처럼 미혼모는 출산 후 육아로 인하여 일정기간 경제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아이의 양육비를 반반 부담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제 활동을 시작하기 전 일정간은 육아에 전념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두 번째 사례자의 경우 임신 후 약혼을 하고 미혼부의 부모님 집에서 함께 거주를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들의 언어적 무시를 당하였고 약혼식 비용 또한 미혼모 집안에서 충당하였다. 그러 함에도 혼인관계가 아이기에 위자료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며 소송 후 아이의 성이 아버지의 성으로 바뀌는 이런 문제 또한 소송 중 대리인이 충분히 인지하여 판결문에 정확히 기재 되었어야 하였다. 소송이 끝났으니 본인이 연락하여 합의를 보라고 한다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세 번째 사례 자는 1년 반 이라는 시간동안 아직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미혼모 당사자들이 소송을 진행하기 까지는 많은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다.

한 양육미혼모는 운이 좋다고 해야는지 모르지만 8개월 만에 소송은 월30만원의 양육비와 11개월 딸아이 과거 양육비 220만원을 책정 받았다. 하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 과거 양육비는 100만원을 소송 후 에 지급이 되었고 양육비는 4개월만 지급되었고 다시 지급명령소송을 하려 하였지만 진행과정의 어려움과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 시간적으로 어렵고 또한 심리적으로 또 다시 미혼부와 마주하여야하는 심리적인 부담으로 고민 중이다.

많은 미혼모 들이 미혼부의 주거지와 정보 등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를 망설이고 소송이 진행 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려 심리적으로 힘들어진다. 기본적인 정보로도 미혼 부를 찾아낼 수 있는 간단한 제도가 필요하다.(예전 전화번호 주소 은행계좌 번호등.) 소송이 진행되고 양육비가 책정되었다면 양육비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제제가 필요하다. (첫 번째 불이행 사회봉사명령 두 번째 감치명령 30일 세 번째 구금 3개월 이상)

소송 승소 후 양육비가 지급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기관에서 원천징수 또는 대체 청구를 가능하게 하여야한다. 또한 자녀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국가에서 벌금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미혼모들이 소송을 진해하는 것이 양육비만은 아닌 부분도 많기 때문이다. 아이가 지라면서 느끼는 아버지의 부제등으로 심리적 정서적 불안함 때문이다. 미혼부의 주소 이전 시 미혼모와 자녀에게 반드시 알려야한다.

## 4. 마무리

지금도 많은 미혼모들이 양육비 소송으로 고민을 할 것이다. 출산 전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문제이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아동의 문제이기도하다. 아이는 태어나면서 하나의 인격체이며 한 인간이며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판단력이 생기고 성장해 나가는 삶에서 지지해주고 건강한 삶을 살수 있게 뒷받침 해 주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 현실은 이 모든 일들을 미혼모인 엄마가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분명히 미혼부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부정하시거나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미혼모도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이 있고 그러한 삶이 출산과 양육을 경험하며 자신이 생각했던 인생과 달라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엄마로서의 삶도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 만나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미혼부와 남자 대학생들 대부분이 낙태를 하지 않고 출산과 양육을 선택 하였다면 그것은 미혼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남자들은 당연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인지를 통하여 법적으로 자신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이들도 많았다. 우리나라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내가 출산을 하였던 2005년도에 비하면 많은 부분이 변하였고 없었던 미혼모를 위한 정책들이 생겨났지만 미혼모가 발생하였던 그 오랜 시간동안 왜 미혼부들에게 책임을 전혀 묻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미혼모는 생겨날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단순한 미혼모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아이의 인권문제라고 생각해야한다. 아이는 미래의 자산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나 이 나라의 귀한 존재가 될 것이며 그러기에 이제 미혼부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선진국의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와 자녀양육비 이행제도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1. 한부모가족에 대한 공적이전체계와 자녀양육비에 관한 논의

최근 전세계적인 한부모가족의 증가는 사별보다는 이혼 및 미혼의 한부모가족에 따른 것이다. 전통적인 가족이 생계유지와 가족돌봄이라는 분업화된 가족형태를 띠는데 반해, 한부모가족은 부모 홀로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의 이중부담을 가진다(OECD, 2009; 강지원, 2010). 그러나 한부모가족 내에서도 사별로 인해 형성된 한부모가족과 이혼 및 미혼 한부모가족의 특성은 또한 구분된다. 즉 사별로 인해 형성된 한부모가족이 주로 원가족(한부모와 배우자 양쪽)과 친인척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는데 반해, 이혼 및 미혼의 한부모가족은 원가족과 연락을 끊거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중에서도 미혼 한부모가족은 주로 저연령이거나 학업을 완수하지 못한 관계로 소득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어린 자녀의 돌봄으로 인해 다른 어떤 인구집단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또한 여성 한부모가족에서 자란 청소년이 양부모가족에서 자란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문제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우, 2006; 107 재인용).

한부모가족은 양부모가족에 비해 빈곤에 처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은주·김진옥, 2009; 김진옥, 2010; 송치호·여유진, 2010; 이용우, 2006). 미국 소득패널(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PSID) 2006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장소득 기준 한부모가족의 상대빈곤율은 51.0%로 양부모가족(9.9%)의 5배에 이른다. 또한 우리나라의 복지패널(KOWEPS) 2006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부모가족의 상대빈곤율은 52.4%로 양부모가족(6.9%)의 7.6배에 이른다(송치호·여유진, 2010). 더욱 심각한 것은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이러한 수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여성한부모가족에서 생활하는 6세미만 아동의 50.3%가 빈곤을 경험했는데 이는 6세미만 자녀가 있는 양부모가족의 빈곤율 9%의 5배 이상이다(전경근 외, 2005).

특히 여성 한부모가족은 근로경험의 부족과 노동시장 이중화, 자녀양육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 등으로 빈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집단이다(김수완, 2010; 이용우, 2006).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적이전소득을 통해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이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Cancian et al., 2009a; OECD, 2007; Hakovirta, 2001). 이러한 정책적 영향으로 한부모가족이 복지급여에 의존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다. 한편 이러한 재정지원정책이 한부모가족의 증가를 야기하거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양부모가족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보수적 입장 때문에 몇몇 국가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의존을 끊고 정부의 복지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Hakovirta, 2001). 대표적인 예가 사적 체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녀양육비 이행 여부를 공적 기관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다. 본 발표문은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와 사적 지원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정책이 미약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제안하고자 한다.

## 1) 한부모가족의 공적이전

한부모가족에 대한 공적지원제도는 각국이 지향하는 복지레짐과 정책목표에 따라 상이하 다. 즉 보편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한 국가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공적지원제도를 통해 생활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잔여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한 국가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지원 여부의 결정과 지원 수준의 결정은 가구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 공적이전소득은 한부모가족의 주요한 수입원이지만 정책의 목표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 한부모에 대한 노동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여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급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제공되는 아동수당, 가족수당과 같은 보편적인 공적이전으로 제공된다. 자녀의 생물학적 부모인 전배우자가 적정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할 때 정부는 실제 지급받은 양육비와 적정 수준의 양육비 사이의 차액을 지급하고 있다. 1998년 기준으로 스웨덴은 1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모든 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여성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보장급여를 제공하고 있다(이용우, 2006 재인용; Curley & Sherraden, 1998; Hobson, 1994; Winkler, 2000; Bjornberg, 1997).<sup>1)</sup>

이와 대조적으로 네덜란드에서는 한부모의 노동시장 유입보다는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공적이전의 대상자 선정시 근로조건을 강제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공적소득이전의 비율 역시 네덜란드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Hakovirta, 2001: 6-10). 이런 이유로 네덜란드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없다면 공적소득이전의 수혜를 받고 있는 여성 한부모가구의 95% 이상이 빈곤에 빠질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에 의존하는 여성 한부모가족은 노동시장의 임금을 주소득원으로 하는 여성한부모가족에 비해 빈곤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이용우, 2006 재인용; Hobson, 1994; Knijn, 1994).

생계부양자 모델을 따르는 독일에서는 사회보험체계에서 한부모가족을 보호하고 있었으나 전통적인 가족 모델에 기초하고 있어 사별 후 재혼을 할 경우 연금권이 박탈되었다. 이와는 다르게 육아수당은 한부모인 여성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만으로도 연금 수급

1) 스웨덴은 1998년을 기준으로 가구당 자녀 4명까지 \$505를 지급하고, 이후 각 아동 1인당 \$99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이용우, 2006 재인용; Curley & Sherraden, 1998).

권을 받게 하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육아수당은 육아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상의 원칙에 따라 지급되는 보편적인 급여이다(독일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국 홈페이지, Gender Report 2005).<sup>2)</sup>

최근 독일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수당을 부모수당으로 대체하고 소득비례 급여로 전환하였다. 물론 한부모가족도 부모수당의 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출산 후 12개월까지로 제한하고 한부모가족의 경우 2개월을 추가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근로연계 복지관점에서 실업보험을 개혁한 Hartz IV의 영향으로 실업부조를 받을 경우 직업훈련과 직업센터(Job-center)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것을 강제하였고, 실업급여를 대폭 삭감하여 여성들을 저임금 고용부문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였다(안경희, 2008 재인용).

미국에서는 유자녀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공적이전체계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부모가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편이고, 성별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Hakovirta, 2001). 따라서 미국은 노동시장에의 진입과 시장소득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부양자녀가족지원제도(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가 유일하다. AFDC 수급자의 약 90%가 한부모가족이라는 실증연구에서 보듯이 한부모가족이 복지급여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이용우, 2006; Hakovirta, 2001).

대표적인 예로 공공부조 체계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공적이전소득을 제공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를 통해 요보호 부양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을 도왔다. 그러나 대다수가 한부모 가족인 대상자들의 복지의존이 심화되고 근로윤리가 손상되어, 건강한 가족구조를 와해시킨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클린턴 행정부는 복지개혁을 통해 AFDC와 취업기회 및 기초기술훈련인 JOBS(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 Training)를 결합하여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y)를 도입하였다.

TANF의 도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수급자는 근로관련 활동에 대해 참여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빠른 시기 내에 직접 노동시장에 취업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또 수급기간이 평생 5년인 60개월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제도 변화로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 경제적 보조를 받아오던 한부모가족은 어린 자녀의 연령과 수에 상관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할 의무가 강제되었다. 다만, 양부모가족의 경우 주당 30시간 이상 취업이나 근로관련 활동을 강제한데 비해 한부모가족은 주당 20시간으로 그 조건을 다소 완화하였다. TANF의 시행으로 1999년 이후 수급자가 급속히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빈곤율이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수급자의 고용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사회보장청은 한부모가족의 근로수

2)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BMFSFJ) 홈페이지(<http://www.bmfsfj.de/>)



입이 급상승하였다고 보고하였다(미국사회보장청 홈페이지).

영국 역시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선별적인 복지혜택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은 전통적으로 아동에 대한 지원을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역시 사회부조와 수당 등에서 추가적인 욕구에 대응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이전제도의 차이는 가족 형태별 빈곤율 격차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유자녀 가족 전체의 빈곤율은 미국(17.6%)과 독일(13.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빈곤율 역시 미국(47.5%)과 독일(41.5%)에서 높게 나타난다. 즉 유자녀가족 전체의 빈곤율이 높은 국가에서 한부모가족의 빈곤율도 높게 나타난다. 이는 미국과 독일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뜻한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의 빈곤율 격차는 가족의 형태에 따른 정책 효과의 상이성을 추정하는 지표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가족형태별 빈곤율 격차는 미국(33.9%)과 독일(32.9%), 네덜란드(32.7%) 순으로 나타난다. 이들 국가는 한부모가족이 양부모가족에 비해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이전소득이 낮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공적이전체계를 통해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스웨덴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이 매우 낮으며 양부모가족의 빈곤율 또한 낮다. 따라서 빈곤율 격차 역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스웨덴의 복지제도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욕구에 대응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의 빈곤율 차이는 가족형태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 위험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고(26.7%), 양부모가족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8.1%). 특이한 것은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의 빈곤율 격차가 낮다는 것이다. 이는 빈곤가족을 지원하는 공적이전체계의 역할이 미약하지만, 가족형태별로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급대상 선정 시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한부모의 연령과 자녀의 연령을 함께 고려하고 있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 젊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있으나 공적이전소득은 초등학생 자녀 이하 1인당 5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수급가구로 선정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무조건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야 하고, 시장소득이 일정 수준이 되면 수급가구에서 탈락한다. 이러한 공적이전은 빈곤층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자립·자활하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한부모가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표 1〉 유자녀가족의 빈곤율: 2000년대 중반

(단위: %)

국가	유자녀가구 전체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빈곤율 격차 <sup>1)</sup>
스웨덴	3.6	7.9	2.8	5.1
독일	13.2	41.5	8.6	32.9
네덜란드	9.3	39.0	6.3	32.7
영국	8.9	23.7	6.1	17.6
미국	17.6	47.5	13.6	33.9
한국	9.6	26.7	8.1	18.6

자료: OECD Family Database 홈페이지(<http://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주: 자녀의 연령은 18세미만 기준임.

1) 빈곤율 격차는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의 빈곤율 차이를 뜻함.

## 2) 한부모가족의 사적이전: 자녀양육비

한부모가족에 대한 공전이전소득이 낮거나 전통적인 가족이데올로기의 특성이 강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선호하지 않는 국가에서 자녀양육비는 자녀의 생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소득자원이다(Hakovirta, 2001). 뿐만 아니라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는 법적으로 자녀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이들 국가는 일찍이 자녀양육비를 징수하고 지급하는 양육비전담기관을 구축하였다. 양육비전담기관은 비양육부모에게 자녀양육비를 징수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복지급여와 함께 혹은 분리하여 제공하며, 비양육부모가 자녀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대지급(advance maintenance payments)과 구상권 행사를 대행하고 있다.<sup>3)</sup>

다음의 <표 2>는 선진국의 자녀양육이행체계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준다<sup>4)</sup>.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녀양육비는 부모와 법원, 행정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당국은 자녀양육비를 부모 동의에 맡기나 부모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중재한다.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과 미국에서 부모의 합의는 모두 법원에 등록된다.<sup>5)</sup>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온타리오 주, 프랑스,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법원이 자녀양육비 지급율의 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와 영국에서는 공적인 아동양육기관이 그 역할을 한다.

자녀양육책임을 결정하는 방식은 엄격한 산정식을 제시하는 것과 비공식 가이드라인을

3) 정부의 대지급은 일반조세로 충당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방식으로 제공되기보다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징수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된다.

4) <표 II-3>과 관련된 내용은 OECD Familydatabase와 국가별 자료(country note)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5) 미국은 주별로 상황이 다르다.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기관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들로는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와 영국이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양육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엄격한 산정식을 적용한다. 반면에 법원이 주도적인 국가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법원이 공식적인 동의를 확정할 때 비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는 등 재량권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양육비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동거여부, 비양육 부모의 경제적인 자원, 다른 부양아동, 전배우자 및 현배우자에 대한 책무, 자녀 면접 및 공동양육 등 자녀돌봄에 대한 동의와 아동의 욕구 등이 포함된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자료를 분석하면 세계 각국의 자녀양육이행시스템은 몇 가지 클러스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과 같이 공공기관에 의한 공식적인 자녀양육이행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도 그 형태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는 자녀양육이행과 관련하여 법원의 역할은 전혀 없는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에서는 법원의 역할이 공공기관의 자녀양육이행체계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덴마크에서는 자녀양육이행에 대한 부모의 합의가 공공기관에 기록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합의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나 이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이행의 결정기준은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체계를 따르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자녀양육비의 이행을 강제하는 법적 규제의 기능까지 갖게 되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엄격한 규칙과 확고한 산정식에 따라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체코, 핀란드, 폴란드, 미국 등의 경우는 공식적인 자녀양육이행체계가 있으나 그 역할이 지방마다 차이가 있거나 강제적이지 않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권한의 위임에 있어 법원의 권한은 약한 반면 아동복지기관이나 복지사무소와 같은 복지관련 공공기관이 개입한다는 것이다. 즉 체코에서는 부모가 자녀양육 및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원을 통해 양육이행 확보를 요구하고, 피양육자에 대해서는 사회법적보호위원회에 의뢰하여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있다.<sup>6)</sup> 이와 유사하게 핀란드 역시 부모가 자녀양육에 합의할 경우 사회복지위원회에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겨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구속력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공공지원을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폴란드 역시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지위원회에 신청하면 공공부조 수급의 혜택을 주거나 가산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녀양육비 지급을 법원을 통해 이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이들 국가에서

6) 사회법적보호위원회는 우리나라 인권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는 자녀양육 및 양육비 지급이 지극히 사적인 문제이므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법원을 통해 조정해야 하는 분쟁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과정과는 별개로 아동은 국가의 미래이며, 아동에 대한 책임은 부모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연대 책임이므로 이와 별도로 공공부조를 통해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공식적인 자녀양육이행체계는 필요하지 않다. 대표적인 국가들로는 프랑스, 독일, 일본, 스웨덴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자녀양육이행제도 역시 형식적으로는 이들 국가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 아동양육비체계의 주요 특징

	자녀양육결정의 개입			양육비 결정책임	양육비 결정규칙	양육비 이행확보	미혼(부)모 자녀에 대한 다른 제도	양육비 지급제한 자녀연령	대지급
	부모	법원	기관						
한국	○ (법원 승인)	○	×	부모들의 합의, 안되면 법원	고정된 규칙이나 방식 없음	법원	×	부모합의, 혹은 20세 미만	×
호주	○ (불합의 : 공적 체계)	○ (제한적 역할)	● (Child Support Agency)	부모, CSA, 수급자는 아동 지원국	규칙/엄격한 산정식	아동 지원국 (CSA)	×	18세, 혹은 학교 졸업까지	×
오스트리아	○ (법원 승인)	○ (제한적 역할)	×	부모, 법원의 승인	공식적인 지침과 규칙/엄격한 산정식	법원	×	18세	○
벨기에	○ (법원 승인)	○	×	법원	대부분 재량권, 정해진 규칙이나 방법 없음	법원	×	18세	○
체코	○ (불합의 : 공적 체계)	○	○ 사회법보호위원회	지자체와 지방법원	법에 따른 지침	법원, 국제 아동보호 조직	×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
덴마크	○ (행정부 승인)	×	○ 주(州) 당국	부모, 합의가 안되면 주 당국 기관	규칙/엄격한 산정식	주당국 기관	×	18세	○
핀란드	○ (사회복지위원회 중재 혹은 확인)	○	○ 사회복지위원회	부모, 사회복지위원회, 부모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	대부분 재량권-비공식적 지침	자치단체 사회복지위원회	×	18세	○
프랑스	○ (법원 승인)	○	×	법원	대부분 재량권, 정해진 규칙이나 방법 없음	법원과 사회보장위원회	×	18세	○

	자녀양육결정의 개입			양육비 결정책임	양육비 결정규칙	양육비 이행확보	미혼(부)모 자녀에 대한 다른 제도	양육비 지급제한 자녀연령	대지급
	부모	법원	기관						
독일	○	○	×	부모, 부모가 합의가 안될 경우 법원	대부분 재량권 양육비 산정표 이용	법원	○	18세	○
네덜란드	○ (법원 승인)	○	×	부모, 합의가 안되거나 자산조사급여 시 변호사의 감독아래 법원	대부분 재량권, 비공식적인 지침	국가적인 수집과 지원기관, 행정관을 통해 시행, 법원이 시행촉구	×	21세	×
뉴질랜드	○	○ (제한적 역할)	○ 국세청 아동 지원국 (IRCS)	부모, 부모가 합의가 안될 경우 IRCS	규칙/ 엄격한 산정식	국세청 아동지원국	×	16세, 혹은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
노르웨이	○	○ (제한적 역할)	○ 복지부 기관 (NAV)	부모, 부모가 합의가 안될 경우 NAV	규칙/ 엄격한 산정식	자녀 양육비 징수배분 센터	×	18세	○
스웨덴	○ (복지 위원회 확인)	○	×	법원	대부분 재량권, 비공식적인 지침	이행서비스	×	18세	○
영국	○ (법원 승인)	○ (제한적 역할)	○ 아동양육 기관 (CSA)	부모, 합의가 안될 경우 CSA 수급자는 PWC	규칙/ 엄격한 산정식	법원과 아동지원기관	×	16세, 혹은 전일제 학생의 경우 19세	○
미국	○ (법원 승인)	○	○ 아동양육 기관 (주별 상이)	법원	공식적인 지침	법원과 아동지원기관	×	주별 상이 (16세-25세)	×

자료: OECD Family database (Table PF 1.5)를 발췌하여 번역함.

주: 2010년 7월 1일 최종 업데이트

### 3) 한부모가족에 있어 공적이전과 자녀양육비의 영향

<표 3>은 자녀양육비를 받는 비사별 한부모가족의 비율을 보여주는데, 2004년 평균 이들 가족의 50%미만이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재정적 지원을 받는 가족의 비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에서 한부모 가족의 25%미만이 비동거 부모로부터 현금이전을 받았지만 스웨덴에서 이 수치는 80% 이상이다. 비사별 한부모가족 중 부양비를 받는 한부모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1994년 43%에서 2004년 64%로 증가했다.

〈표 3〉 한부모가족의 비율과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비율

(단위: %)

	한부모가족의 비율			자녀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의 비율		
	1994	2000	2004	1994	2000	2004
한국 <sup>1)</sup>	7.4	7.9	8.6(2005)	-	-	-
스웨덴	24.1	21.2	21.9	85.4	92.6	100.0
독일	8.0	13.9	n.a.	n.a.	30.1	n.a.
네덜란드	8.6	8.8	n.a.	15.6	24.4	n.a.
영국	21.2	22.9	24.6	20.2	21.9	22.8
미국	28.0	20.1	21.5	28.8	34.1	33.7

자료: Calculation on basis of the Luxembourg Income Study data; 한국은 이와 관련한 데이터가 생산되지 않고 있음.

주: 1. 비사별 한부모가족에 관한 것이므로 이혼과 미혼으로 형성된 한부모가족만 포함.

2. 첫 번째 칸은 1994년경, 두 번째 칸은 2000년경, 세 번째 칸은 2004년경에 작성된 것임. 각국 자료의 정확한 년도는 OECD Family database를 참조. 한국의 경우 2004년에 2005년 자료가 제시되었음.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녀양육비는 평균 소득 대비 10% 내외 수준을 나타내며, 영국과 미국 등 자유주의 국가에서 다소 높고, 스웨덴과 네덜란드 등 보편적인 수당이 있는 국가에서 다소 낮게 나타난다. 평균 순가처분 소득 대비 자녀양육비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순가처분 소득 대비 자녀양육비가 평균 소득 대비 자녀양육비 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영국에서 자녀양육비의 상대적 영향이 큰 편이다. 또한 순 현금이전 대비 자녀양육비는 미국과 영국 등 잔여주의 복지국가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며, 스웨덴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난다.<sup>7)</sup> 이는 각국의 공적이전의 수준에 따라 양육비의 중요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즉 공적이전이 보편적이며 급여 수준이 높은 스웨덴에서 사적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양육비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공적이전이 잔여적이며 급여 수준 또한 낮은 미국에서는 사적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양육비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시 말해 스웨덴에서 자녀양육비는 공적이전에 비해 덜 중요한 데 반해 미국에서 자녀양육비는 공적이전보다 중요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이후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도입된 후 협의상 이혼 절차에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확인한 후 그에 관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협의 이혼시 자녀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한부모의 경우 추후 자녀양육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이러한 소송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여성가족부(2011)가 정부지원 양육비이행소송 당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9년 기준 전체 이혼가구 중 전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 하는 경우가 8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지원소송 결과에 한정된 자료로 한부모가족이 자녀양육비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뢰할만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표 4〉 자녀양육비 수준의 국가별 비교: Circa 2000

(단위: £, %)

국가	자녀양육비	평균소득 대비 자녀양육비	평균순가처분소득 대비 자녀양육비	평균 순현금이전 대비 자녀양육비
스웨덴	112	8.0	9.0	24.5
독일	159	10.0	11.6	41.3
네덜란드(1999)	141	8.3	9.5	44.7
영국(1999)	222	12.9	13.2	65.0
미국	261	12.6	10.8	96.2

자료: Skinner, Bradshaw, and Davidson. 2008. Child support polic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WP 478, LIS

공적이전과 사적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양육비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룩셈부르크소득연구소(Luxembourg Income Study, LIS)는 조세와 급여 패키지를 이용하여 공사이전소득의 아동빈곤 감소정도를 살펴보았다. (A)는 순수하게 시장소득만을 고려할 때 아동빈곤율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50% 이상으로 나타난다. (B)와 (C)는 아동 및 가족 급여의 지급과 소득보조나 구직자수당 같은 다른 현금 급여 지급 이후의 아동빈곤율을 보여준다. (D)는 정부의 공적이전 외에 자녀양육비의 사적 이전을 포함한 총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동빈곤율을 보여준다. (E)는 시장소득과 공적 급여에서 직접세를 제외한 순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아동빈곤율을, (F)는 자녀양육비의 빈곤갭 감소비율을 보여준다.

즉 (A)는 순수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아동빈곤율을 보여준다면, (B)와 (C)는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아동빈곤율의 감소효과를 보여준다. 이에 비해 (D)는 사적이전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양육비를 포함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아동빈곤율을 보여줌으로써 공사이전소득의 아동빈곤율 감소효과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E)는 총소득에서 직접세를 제외한 순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아동빈곤율을 보여줌으로써 세금으로 인한 아동빈곤율의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F)는 자녀양육비에 대해서 빈곤율 감소의 격차를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복지국가 유형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영국과 미국 등 잔여적 복지경향을 띠는 국가들에서 시장소득(A)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동빈곤율은 50~80%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고, 직접세 이후의 가처분 소득(E)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동빈곤율 역시 30% 이상으로 높다. 이들 국가에서는 복지급여에 과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비를 소득에 포함하여 복지급여를 산정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영국은 이들 국가군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시장소득과 아동 및 가족급여, 그 외 모든 현금급여를 더한 (C)부터 아동빈곤율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조합주의적 색채가 강한 국가의 경우 시장 소득(A)을 기준으로 한 아동빈곤율 역시

50~60% 수준으로 높은 편이나, 현금급여의 부과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독일은 공적이전소득과 자녀양육비를 모두 포함했을 때 아동빈곤율이 상당부분 감소한 반면 네덜란드는 공적이전소득만 포함했을 때부터 아동빈곤율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조합주의적 색채가 강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수당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정책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복지국가 유형으로 알려진 사민주의 국가군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동빈곤율이 50%이하로 여타 국가군에 비해 낮은 편이다. 특히 노르웨이는 아동 및 가족급여(B-A)로 인해 아동빈곤율이 20%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외 모든 현금급여를 포함했을 때 아동빈곤율은 30%내외의 감소를 보여준다.

〈표 5〉 자녀양육비의 아동빈곤율 효과 비교: Circa 2000

(단위: %)

국가	(A)	(B)	(C)	(D)	(E)	(F)
	시장소득	(A)+아동 및 가족급여	(A)+자녀양육비를 제외한 모든 현금급여	자녀양육비를 포함한 총 소득	직접세 이후의 가처분 소득	자녀양육비로 인한 빈곤감소 비율
스웨덴	50.4	45.7	14.4	9.0	12.8	5.4
독일	61.6	58.0	43.1	36.3	40.4	3.9
네덜란드	57.2	53.9	27.9	24.1	37.2	2.5
영국	80.8	79.7	41.3	37.8	39.5	1.9
미국	58.2	58.2	51.2	47.5	52.4 <sup>1)</sup>	6.0

자료: Skinner, Bradshaw, and Davidson. 2008. Child support polic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WP 478, LIS

주: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급여로 간주하여 (C)에서 포함하고, (E)에서는 불포함(직접세가 아님).

특이한 것은 아동 및 가족급여의 아동빈곤율 감소효과(B-A)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 및 가족급여의 아동빈곤율 감소는 8% 이하로 나타난다. 반면 미국은 아동 및 가족급여가 없어 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아동 및 가족급여를 제외한 기타 모든 현금 급여의 아동빈곤율 감소 효과(C-B)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20~30%수준으로 높게 나타난다. 영국과 스웨덴에서 아동빈곤율의 감소는 30%이상을 나타내는 반면 미국에서 현금급여로 인한 아동빈곤율 감소 효과는 10%미만이다.

자녀양육비의 빈곤감소 효과 역시 아동 및 가족급여의 빈곤감소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만 공공부조 등의 현금급여 보다는 낮다. 영국(3.5), 미국(3.7), 네덜란드(3.8)에서 자녀양육비의 아동빈곤율 감소효과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급여에도 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 대비 아동빈곤율은 소득세 부과 전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호주와 오스트리아, 벨기에에서는 아동 및 가족급여와 그 외 현금급여, 자녀부양비에 과세를 하지 않는 정책(disregard policy)을 쓰지 않고 있다(Skinner et al., 200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부조, 가족수당, 아동수당 등 공적이전과 자녀양육비 같은 사적이전은 빈곤의 위험에 노출된 한부모가족에서 중요한 소득원천이다. 북유럽 국가에서 아동수당과 가족급여, 그 외 현금급여 등이 포함되는 공적 이전체계는 한부모가족의 아동빈곤율을 상당히 경감시킨다. 따라서 스웨덴은 자녀양육비를 징수하고 배분하는 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아동 및 가족급여 제도가 없으며 공적이전을 통한 아동빈곤의 감소폭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미국은 자녀양육비를 징수하고 배분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정부의 복지재정 부담을 줄이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에서 지난 2008년 기준 자녀양육비 지급 사례는 1,500만 건 이상이며, 양육비 징수 및 배분 액은 26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OCSE 홈페이지<sup>8)</sup>).

미국에서 자녀양육강화시스템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었을 당시 자녀양육비는 분명 복지비용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컸다. 그러나 복지 수급가구에 자녀양육비가 지급됨에 따라 비양육부모로부터 징수한 자녀부양비를 언제, 어떤 형태로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촉발되었다. 1996년 근로기회조정법(PRWORA)의 도입 전까지 대부분의 주에서 여성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산정에 있어 공공부조를 받는 여성에게 지급된 자녀양육비를 과세기반에 포함하지 않았다(강지원, 2010b 재인용; Justice, 2007). 그러나 소수의 주정부에서는 공공부조를 받는 여성에게 매월 자녀양육비를 \$50만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AFDC가 TANF로 대체됨에 따라 각 주는 부조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고안하게 되었는데, 많은 주들은 TANF 가구 급여에 대한 자녀양육비 지급을 유지하는 대신 사회적 급여를 과세기반에 포함시키지 않는 정책을 종결하였다(강지원, 2010b 재인용; 제석봉 외, 2008).

최근 미국에서 많은 주정부들은 복지수급가구의 자녀양육비 수급과 이의 과세 부과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복지수급가구의 공공부조액과 분리하여 자녀양육비를 지급하거나 공공부조액에 자녀양육비를 더하여 제공할 수도 있고, 자녀양육비를 과세 기반에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녀양육비와 공공부조액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임성은, 2010). 이러한 논쟁은 복지수급가구의 한부모가 자녀부양강화시스템을 통해 비양육부모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제한하

8)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 산하 아동 및 가족부 홈페이지(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http://www.acf.hhs.gov>)

거나 강화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양육한부모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친자인지 및 친자확인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한 후 비양육부모의 재정능력에 따라 산정된 자녀부양비를 지급받음으로써 비양육부모의 자녀에 대한 재정적·비재정적 개입을 일부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부모들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것은 찬성하나 자녀 방문 등 비재정적 개입을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녀양육비의 지급이 과세를 수반하게 되면 실제적인 한부모의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부모들은 자녀양육비가 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기반에 포함될 경우 친자인지 및 확인, 자녀부양비 지급을 위한 정보 제공 등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발생한다. 오히려 이들은 부모간 합의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자녀부양비를 지급받고자 시도한다(Cancian et al., 2009a; Cancian et al., 2009b).

칸시안 등(Cancian et al., 2009b)에 따르면 자녀양육비에 대한 과세불포함(disregard)이 높을수록 친자인지 및 확인(paternity establishment)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자녀양육비 징수 사례 비율은 자녀양육비의 과세불포함 기준 금액이 \$50, \$100일 때 유의한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양육비가 지급될 경우 복지급여를 받는 어머니가 더 많은 소득을 갖게 되므로 과세불포함 정책은 어머니의 친자 인지 및 확인에 협조하는 인센티브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 2.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체계

### 1) 영국의 자녀양육비 이행

#### 가. 법적 근거

영국에서는 부모들의 관계가 끝나거나 부모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책무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이러한 책무 중 하나가 비양육 부모가 자녀의 양육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자녀양육비이다. 많은 연구들이 사람들은 부모의 별거 후에도 자녀양육에 대한 우선적인 책무를 부모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몇몇 부모들은 그들의 합의를 실천하기가 어려워 부모들이 그들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예, Peacey & Rainford, 2004). 이에 따라 정부는 자격이 있는 아동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돕는다. 아동양육시스템(Child Support System)의 주요한 목적이 아동의 경제적 복리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부모의 권리와 책무를 지원하고 과세부담자에게 비용효율적인 방식으로 그것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아동양육에 관한 법은 1991년 아동지원법(Child Support Act, 1991)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1995년 아동양육법(Child Support Act, 1995), 2000년 아동지원과 사회보장연금법(Child Support, Pensions and Social Security Act 2000)으로 개정되었다. 특히 2000년 법률(Child Support, Pensions and Social Security Act 2000)은 아동양육비 지원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양육비 계산법을 새로이 하는 등 주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 법의 개정으로 자녀양육비를 사정하기 위한 매우 복잡한 일람표를 더 단순한 계산식으로 대체하고 사전에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즉 자녀양육비는 가족소득의 평균 30%이고, 부모들 사이에 균등하게 나누어져야 한다는 원칙 하에, 양육부모는 이미 주택비용, 음식, 난방 등을 통해 자신의 몫을 제공했기 때문에 비양육부모는 자신의 몫을 현금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하여 양육비산정에 비양육부모의 소득만을 고려사항으로 하는 쪽으로 개정되었다. 현재의 양육비 산정식의 기본원칙은 양육비 산정은 비양육부모의 소득 계산에 전적으로 기초해야 하고 양육부모의 소득이나 기타 자산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자녀의 수요에 따른 필요양육비를 결정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자녀양육비 계산은 단계를 따라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몇가지 요건<sup>9)</sup>에 따른다. 즉 비양육부모의 소득은 순소득을 계산한 후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을 결정함으로써 행해진다. 비양육부모의 주간 순소득은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료 그리고 보통 연금지불액을 공제한 이후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다. 세액공제와 직장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부터 받는 돈은 소득으로써 계산된다.

비양육부모의 소득에 따라 비율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기본비율이 적용되지만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일 때에는 영비율, 감액비율, 고정비율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자녀양육비를 지불할 수 없는 영비율은 비양육부모가 5파운드 이하의 순소득을 갖거나 학생, 미성년자, 죄수, 16세나 17세이면서 최저생계비지원이나 실업수당을 수령하는 자 등에게 적용된다.

고정비율에 해당하는 비양육부모는 5파운드의 고정액이나 규율에 기술된 액을 양육비로 지불하게 된다. 5파운드의 고정비율은 영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비양육부모의 주단위의 순소득이 100파운드 이하이거나, 비양육부모가 퇴직연금, 장애급여, 군인연금, 실업수당, 생계지원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영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비양육부모의 새로운 배우자도 비양육부모이면서 양육비지급 중이고, 둘 중 어느 하나가 각종 수당을 받

9) 각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질문한다.

1. 기본비율, 감액비율, 고정비율, 영비율 중 어떤 비율이 적용되는가?
2. 기본비율이나 감액비율이 적용될 때, 지불할 수 있는 총액은 얼마인가?
3. 비양육부모의 다른 부양자녀를 고려한 공제가 적절한가?
4. 2의 결과가 분배되어야 하는가?
5. 공동양육인가? 그렇다면 양육비는 얼마나 공제되어야 하는가?
6. 고정비율이나 영비율이 적용될 때, 지불할 수 있는 총액은 얼마인가?

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비율의 절반인 2.50파운드로 된다. 감액비율은 영비율도 고정비율도 아니면서 비양육부모의 주 순소득이 100파운드 초과 200파운드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비양육부모의 주간 순소득이 200파운드 이상일 때 자녀양육비를 계산하기 위해 기본비율을 사용한다. 기본비율은 비양육 부모의 주 단위 순소득의 일정비율인데 이 비율은 양육비 지급대상자녀가 1명인 경우 15%, 2명인 경우 20%, 3명 이상인 경우 25%이다. 이 계산은 자녀의 나이와 무관하게 양육부모의 소득을 무시한 채 매우 간단하게 계산된다. 비양육부모의 주 단위 순 소득이 300파운드일 경우 자녀가 한명인 경우에는 45파운드,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75파운드가 양육비로 산정된다. 또한 매주 2,000파운드 이상의 순소득은 고려하지 않는 양육비의 최고한계가 있다. 비양육부모의 주간 순소득이 2,000파운드 이상이라면 양육자는 법원에 특별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을 추가양육비(top-up maintenance)라 한다.

비양육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 또 다른 부양 자녀가 생긴다. 이 때 다른 의존자녀란, 양육비 지급대상자녀가 아니면서 비양육부모나 그 배우자가 아동수당을 받는 자녀를 말하는데 기본비율을 계산하기 전에 비양육부모의 주간 순소득에서 일정비율의 공제가 행해지고 있다. 다른 의존자녀가 1명인 경우 15%, 2명의 경우 20%, 3명의 경우 25%이다.

또한 자녀가 비양육부모와 규칙적으로 밤을 보내는 공동양육(shared care)의 경우에는 자녀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다. 자녀가 적어도 일주일에 평균 하루 이상을 비양육부모와 같이 보낸다면 감액을 행한다. 1년 중 평균 밤 수를 계산하지만 적절한 경우에는 더 짧은 기간을 검토할 수 있다. 공동양육사건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자녀가 비양육부모와 보내는 주의 매 밤마다 1/7씩 감한다. 이러한 원칙들에 따라 비양육부모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 양육비가 산정된다<sup>10)</sup>.

10)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단계에서는 비양육부모의 주간 순소득(A)을 계산한다. 제2단계는 주간 순소득이 5파운드 미만이거나 특별히 규정된 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영비율을 적용한다. 제3단계에서는 영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경우에 새로운 배우자가 비양육부모이면서 양육비를 지급하는지 두 사람 중 한명이 각종 수당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고정비율의 절반인 2.50파운드를 적용한다. 그렇지 않으면 4단계로 간다. 제4단계에서는 비양육부모의 주간 순소득이 100파운드 미만이라면 매주 5파운드의 고정비율을 적용한다. 제5단계에서는 비양육부모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가 퇴직연금, 장애급여, 군인연금, 실업수당, 소득보조 등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인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한다면 매주 5파운드의 고정비율을 적용하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6단계로 간다. 제6단계에서는 비양육부모의 주간 순소득이 100파운드 이상이지만 200파운드 미만이라면 감액비율을 적용하고(이때 지불 가능한 총액은 B이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7단계로 간다. 제7단계에서는 비양육부모에게 다른 부양자녀가 없는지 확인하는데 그런 경우 비양육부모의 주간 순소득의 변화 없이 8단계로 간다. 만약 부양자녀가 있다면,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15%, 2명인 경우 20%,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5%가 공제된 다음 줄어든 비양육부모의 주간 순소득을 가지고 8단계로 간다. 제8단계에서는 비양육부모의 주간 순소득에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15%, 2명인 경우에는 20%, 3명인 경우에는 25%를 곱한다. 그 결과는 C이다. 제9단계에서는 양육비지급대상자녀와 관련하여 한명 이상의 양육부모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없다면, 10단계로 가고, 이에 해당한다면 B나 C를 자녀수로

## 나. 자녀양육비 이행 체계

영국의 아동양육비지원은 1993년 이후 아동지원국(the Child Support Agency, CSA)이 행정적으로 관리·운영했다. 아동지원국은 1991년 아동지원법(Child Support Act, 1991)과 1995년 아동양육비지급에 관한 법률(Child Support Act 1995), 2000년의 아동지원과 사회보장연금법(Child Support, Pensions and Social Security, 2000) 등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재정적 책임을 돕고 보장하기 위해 세워졌다.

아동지원국(Child Support Agency, CSA)은 자녀양육비를 사정하고, 양육비를 징수하며, 한 부모가족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CSA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를 부과·징수·집행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며, 문제를 가진 가족이 처한 위기를 법정을 대신하여 다루고자 하였다. CSA는 사회보장부의 상임기관 중 하나로 설립되었다. 상임기관은 1988년 Robin Ibbs의 보고서 “Next Steps” 이후 처음 만들어졌다. 이는 정부 내에서 개별적인 서비스 관리와 이행의 책임을 지고, 보다 수요자 위주의 접근법을 갖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설립되었다. 이러한 상임기관은 상위 부서의 한 부분으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그 내부 자체에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관들로 대표되는 의사결정에 따라 움직인다.

CSA의 기능은 두 가지이다. 첫째, 현 제도와 법에 따라 얼마나 많은 자녀양육비가 지급되어야 하는지를 포괄적으로 계산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징수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CSA가 사례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한쪽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스코틀랜드에 사는 아동이 한명 혹은 두명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 아동이 직접 요청할 수도 있다. 한부모가 사회적 급여를 받는다면 CSA는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2006년부터 이러한 자동적인 개입이 바뀜). 또한 요청이 있다고 해도 CSA는 비양육부모가 해외에 산다면 개입할 수가 없다.

1997년에는 사례평가사무실(the Independent Case Examiner's Office)이 CSA에 대한 불만을 다루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되었다. 연례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주요 테마가 복합적으로 언급되었는데, 주로 양육비의 연기(2004-2005년에 불만의 51%에 해당)와 오류(2004-2005년의 전체 불만 중 24%에 해당), 해당활동없음(2004-2005년에 불만의 14%에 해당)으로 나타났다. 고용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의 통계에 따르면, 한 건의

---

나누고 그 결과(D)에 각 양육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수를 곱한다. 제10단계에서는 매년 51일밤을 초과하여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사이에 양육비지급대상자녀를 공동양육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B나 C는 변화되지 않고 11단계로 넘어간다. 만약 그렇다면 B나 C를 다음과 같이 감액한다. 공제 가능한 부분을 모두 합한 다음 이 수치를 양육부모와 함께 사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대상 자녀수로 나눈다. 그 결과는 D이다. B나 C에서 D만큼 감액한다. 그 결과를 11단계로 가져간다. 마지막 제11단계에서는 10단계에서 가져온 수치를 양육비로 산정한다.

사례가 새로운 체계에서 결정되기까지 평균 대기시간이 2003년 3월 평균 18일에서 2005년 12월에는 평균 287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4월에서 2007년 5월간 고용연금부 통계는 정확성이 구 제도 83%에서 신 제도 79%로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 때 정확성이란 보고기간동안에 수행된 자녀양육비결정(계산 혹은 평가)의 점검이나 발견 비율을 뜻한다. 동일한 재정 범주에 근거한 사정이라도 사례가 판단되는 규칙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줄 수 있다. 새로운 체계에서 양육비를 덜 주려는 비양육부모들은 특별한 환경을 제외하고는 재사정될 수 없다. CSA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시스템에 이동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사례가 언제 처음 사정되었는지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다. 2006-2007년에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자녀양육비 평균은 주당 £23로 책정되었으나 구 제도에서는 평균 £22에서 £23이었다.

1993년 설립된 이후 아동지원국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고용연금위원회(Work and Pensions Committee)의 의장인 아치 커크우드(Archy Kirkwood)경은 2004년 11월, 그 상황을 “아동지원국의 체계적이고, 만성적인 총체적 관리 실패”라고 지적하였고, 2005년 11월에는 토니 블레어(Tony Blair) 총리가 아동에게 지급되는 £1.85마다 CSA가 £1를 행정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CSA는 “그 일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게다가 CSA가 법적인 시스템을 통해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실행하기 위해 해마다 £12백만 가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징수되는 금액은 £8백만 정도이다. 부채급증으로 인한 부채의 회수를 위해 CSA는 제 3의 부채징수기관에 위탁을 주어야 했다.

이러한 비난에 직면한 존 후튼(John Hutton) 고용연금부 장관은 데이비드 헨쇼(David Henshaw)에게 세 가지 핵심 영역에 고려한 아동양육시스템의 재구성을 요청했다. 그의 연구(2006) “아동 양육비 복구: 책임으로의 길(Recovering child support: routes to responsibility)”를 통해 아동양육지원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정비를 제안하였다. 즉 부모들이 헤어질 때 부모들이 그들 자녀에 대한 재정적인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과 이러한 성과를 비용면에서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제도, 새로운 구조와 정책으로의 이동과 이미 150만명의 한부모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수준의 보장에 대한 정책 옵션들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새로운 시작: 아동양육재정비(A fresh start: Child support redesign-the Governments response to Sir David Henshaw)”를 통해 그의 정책적 제언을 대부분 수용하였으며, 나아가 자녀양육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시행할 것에 동의하였다. 추가적인 내용과 상당한 논의를 거쳐 2006년 12월 백서에서 아동양육비 관련 새로운 시스템(A new system of child maintenance)가 발표되었고, 정부는 위원회의 보고서와 백서에 대한 응답으로 2007년 5월 고용연금부(DWP) 장관이 국회에 발표하였다<sup>11)</sup>. 이를 바탕으로 기존

의 제도들을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2008년 아동양육 및 기타 급여에 관한 법률(Child Maintenance and Other Payment Act)을 제정하였다. 또한 이에 근거하여 CSA는 “더 작고, 더 집약적인” 기관으로 대체되었다.

2006년 12월, 고용연금부는 백서 발간을 통해 아동양육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제안하였다. 백서는 정부가 아동양육을 실천하고 아동지원국을 대체하기 위한 정부부처 외 공공부처(NDPB)<sup>12)</sup>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2008년 아동양육비지급에 관한 법률(Child Maintenance and Other Payment Act)은 아동지원국을 대신할 아동양육 이행확보위원회(Child Maintenance Enforcement Commission, C-MEC)의 도입을 법제화하였다. 이는 국가 정부 내에서 기능하게 되지만 어떠한 정부 부처 내에도 포함되지 않고, 모든 의사 결정과정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영된다. 즉 위원회는 아동양육과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완전한 자치권을 가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연금부의 직접적인 통제도 받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7년부터 아동양육이행확보위원회(C-MEC)가 발족하였고, 2008년 11월 1일부터 CSA를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지원국이 단순히 아동양육이행확보위원회로 명칭만 변경한 것은 아니다. 기존의 아동지원국(CSA)이 수행하던 아동양육비의 사정과 양육비 징수, 이행확보서비스 외에 정보의 위임과 부모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포함되어 아동양육이행확보위원회(C-MEC)로 대체되면서 그 기능과 목적, 업무 범위가 훨씬 다양해지고 자녀양육이행확보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빈곤을 방지하고, 부모의 책무성을 촉진하며, 비용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DWP, 2007: 5).

11) DWP(2007), A new system of child maintenance-Summary of responses to the consultation.

12) 2009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부처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NDPB)부문에 대한 레포트를 제공하고 있는 Public Bodies(2009)에 따르면, “Public Bodies는 1980년 이후 내각에 의해 해마다 발간되고 NDPB 영역의 규모와 지출,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를 제공하고 있다. Public Bodies는 또한 NDPB 위원이나 다른 정부의 공공기관에 임명된 사람들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Public Bodies 2009의 정보는 영국 정부 부처와 영국공공기관의 위원에서 임명된 공직 약속에 의해 후원되는 NDPB들을 포함한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지, 노던아일랜드의 공공기관과 공적 후원에 대한 정보는 분권 행정의 문제이다. 또한 Public Bodies 2009는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각 정부 부처는 부처별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해마다 출간하고 있다. NDPB는 “중앙정부의 집행과정에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정부 부처의 소속은 아니며, 따라서 부처 장관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기관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NDPB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Executive NDPBs는 전형적으로 근거법에 따라 설립되며, 집행과 행정, 규제와 홍보 기능을 수행한다. 예로 환경기관, 지역발전기관과 국영박물관과 미술관이 있다. 둘째, Advisory NDPBs는 부처 장관들에게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한다. 예로 저임금위원회와 공직생활표준 관련 위원회가 포함된다. 셋째, Tribunal NDPBs는 특정 법률분야에 대한 사법권을 가진다. 예를 들어 세금과 세율에 대한 사정재판기구(Valuation Tribunals) 등이 있다. 넷째, 교도소와 이민승인센터, 이민자거주센터 등의Independent Monitoring Boards(독립감독기구)는 이전에 방문위원회로 알려진 것으로, 교도소시스템의 독립적인 경비원이 된다”(Public Bodies 2009, Cabinet Office).

위원회(C-MEC)의 주요 목적은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부모가 자발적으로 자녀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개발하고 유지한다. 셋째, 1991년 아동지원법(Child Support Act, 1991)에 따른 자녀 양육과 양육비지원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법에 따른 부모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보장한다.

2008년 아동양육비 및 기타 급여에 관한 법률(Child Maintenance and Other Payment Act)에 따라 과거 아동지원국이 담당하던 대부분의 기능은 위원회가 맡아 진행하게 된다. 이 기능 외에도 위원회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책임감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인지시키며,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지원 장치를 만들 책임이 있다. 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양쪽 부모에게 관련 정보와 지침 안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양육비를 보장해야 한다.

위원회의 서비스는 크게 아동양육선택(Child Support Options)와 기존의 아동지원국(Child Support Agency) 업무가 결합된 형태이다. 위원회는 혼인 여부 및 부모의 관계와 상관없이 아동양육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러한 책무를 부모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양쪽 부모 모두에게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정보와 지침을 안내하고 부모를 지원하며, 아동양육시스템을 완성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양육비에 대한 사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거나 법원에 기반하여 합의를 한 경우 법정 양육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아동지원국(CSA)에서 양육비를 사정, 징수, 지급하는 기능과 동일하지만,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이행확보 수단을 강화하고 외부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녀양육이행확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원회의 구조는 이사회와 함께 다음의 구성원을 포함된다. 위원회를 이끌 의장으로서 위원회의 중요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전략과 정책적 능력을 갖추고 외부 이해관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회장(the commissioner for Child Maintenance)로, 조직의 전방을 파악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결과를 이사회에 직접적으로 전달하며, 위원회에서의 의뢰인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회계담당(accounting officer)로서 업무를 담당한다. 그 외 상임이사과 비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이사회는 위원회 내의 일반적인 기능을 실천하고 인재를 고용할 수 있다.



## 다. 양육비 징수 및 이행확보 권한

양육비 지원 신청은 대부분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 신청자는 양육 대상 아동에 대한 세부 정보와 함께 비양육부모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동지원국(CSA)은 법적으로 지급 가능한 양육비를 계산하기 위해 비양육부모에게 연락을 취한다. 비양육부모는 소득액에 관한 세부사항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지원국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양육비를 계산하고, 양육비 징수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때로 비양육부모는 아동지원국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양육비가 결정된 후에 양육비 징수를 거부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아동지원국은 상위 권력을 사용해 다른 방식으로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권한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취해지는 조치는 손실된 금액을 비양육부모의 임금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법이다. 이는 고용인이 비양육부모의 소득에서 공제한 액수를 아동지원국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 방법이 효력이 없을 경우, 아동지원국은 영국과 웨일즈에서는 치안판사법원, 스코틀랜드에서는 보안관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영국과 웨일즈에서는 법적 조치가 부채 상환을 위한 관문이자, 더 강화된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과정이 된다. 반면에 스코틀랜드에서의 법적 제재는 채무자의 자산 취득과 매각, 은행 계좌 정지 후 해당 금액 이체, 부채 상환까지 채무자의 상속권 박탈 등 3가지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법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 영국에서는 지방법원에서 제 3자에게 부채/채무상환(Debt/Charging Order)을 명령한다. 여기서 제 3자는 은행 혹은 주택금융공사(Building society) 등으로, 비양육부모를 대신하여 CSA에 요구된 금액을 지불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는 비양육부모에게 부과된 유무형의 자본으로부터 지불 연체를 막을 수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보안관을 통해 체포 명령을 내려 채무자의 유동자산을 묶어두고 제 3자를 통한 빚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또는 금지조서(bill of inhibition)을 통해 주요한 채무는 부동산 매각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방법에도 자녀양육비 지급을 연체한다면, CSA는 비양육부모를 치안판사법원(영국 및 웨일즈) 또는 보안관(스코틀랜드)을 통해서 6주간의 수감형, 혹은 2년간의 운전면허 취득/보육 정지할 수 있다.

법률 개정(2008)으로 위원회의 법적 집행력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에 갖고 있던 법적 효력이 변경되기도 하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기존의 집행력에 변화가 생긴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당사자의 임금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최초의 조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었다. 또한 법적 조치는 더 이상 치안법원이나 보안관의 허가와의 관계없이 행정적 절차로 이루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법적 집행력

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새롭게 도입된 법적 집행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 등의 자산기관을 통해 비양육부모의 예금계좌(개인 또는 중복 명의)에서 정기적인 수납을 가능하게 하여 양육비 징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지불 연체도 막는다. 둘째, 은행이나 부동산 양도 전문 변호사 등 제 3자를 통해, 연체된 금액을 비양육부모의 예금 계좌(재인 또는 중복 명의)등의 자산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일괄총액공제가 도입되었다. 셋째, 비양육부모가 갖고 있는 자산을 운용할 수 없도록 동결시키거나 양도 자산을 받을 수 없게 한다. 이는 영국과 웨일즈에서는 고등법원, 스코틀랜드에서는 보안관을 통해 적용된다. 넷째, 비양육부모에게 통행 금지령을 내리는 방법을 통해 당사자를 감시하는 방법도 도입되었다. 영국과 웨일즈에서는 치안법원, 스코틀랜드에서는 보안관을 통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비양육부모가 여행 허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도입되었다. Identity Card Act 2006에 따르면 이는 영국 시민으로서 영국 여권 또는 ID 카드를 발행하는 일이다. 이는 영국과 웨일즈에서는 치안법원, 스코틀랜드에서는 보안관을 통해 적용된다.

#### 라. 타 기관과의 연계

1993년 이전에는 법원에서 아동양육을 결정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은 종종 임의적이었고 판결금액이 적었으며, 일관성도 없어 효과적인 자녀양육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실패하였다. 지금은 법원에서 자녀양육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고 그들의 합의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아동지원국(CSA)에서 사용된다. 부모들은 대부분 이혼시 이러한 경로를 따르는데, 그들이 부가적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자녀양육에 관한 법원의 동의 명령을 가질 수 있다. 이 때, 부모는 자녀양육비 산정식을 적용할지를 선택하고 아동지원국(CSA)은 12개월 이내에 법원의 명령을 뒤집을 수 있다. 새로운 제도는 12개월 규정을 폐지한다. 이는 부모가 한번 동의를 하면 법원시스템을 통해서만 그 명령을 바꾸거나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양육비 징수와 관련해서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을 기관으로 종종 고려되는 곳이 국세 및 관세청(HM Revenue&Customs)이다. 실제로 데이비드한센경 역시 국세 및 관세청에서 자녀양육비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조세 시스템(tax system)을 통해 소득과 세액공제에 관한 모든 정보가 연말 이후에야 제공되고 조세 시스템을 통해 부모들간의 현금이전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세 및 관세청은 양육비의 재정적 위험을 보장하고 이에 따라 비양육부모로부터 돈을 징수하는데 작용한다. 사실 조세시스템을 통해 자녀양육비를 징수하는 데 대한 정책적 정당성은 전

혀 없고, 국세 및 관세청에서 자녀양육시스템을 둘 조직적 정당성도 거의 없다. 그러나 국세 및 관세청은 자녀양육비의 제공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부모들은 자녀양육시스템을 원하지 않는다는 연구가 보여주듯이, 부모들이 본인의 소득을 충실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동양육비의 사정의 근거로서 국세 및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2008년 아동양육 및 기타 급여에 관한 법률(Child Maintenance and Other Payment Act)은 비양육부모가 특정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정보는 위 기관들이 각 개인의 재무 상태를 통해 신용 등급을 결정하고, 관련 정보를 갖추는데 이용된다. 또한 법률에 따라 특정 대상의 가족 관련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며, 제공하지 않는 것은 법정 모독으로 간주한다. 또한 비양육부모가 그들의 주소를 바꿀 때 위원회에 알리지 않는 것을 위법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아동(child)의 정의를 2005년 아동급여법(Child Benefit Act 2005)과 일치하도록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위원회는 위원회와 수상, 북아일랜드청(Northern Ireland Department)과 국세 및 관세청(Her Majesty Revenue & Custom, HMRC) 사이의 정보 통로가 된다. 본 법률은 현재에는 일반적으로 중복되는 자신의 아이들을 부양할 법적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회보장 조항을 더 이상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2) 미국의 양육비 이행체계

### 가. 법적 근거

미국은 꾸준히 증가해온 높은 이혼율과 혼외출산으로 한부모하고만 생활하고 있는 아동이 많으며, 혼인중의 자(子)라고 하더라도 대략 10명 중 4명은 아동기에 부모의 별거나 이혼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듯 혼외에서 태어나거나 부모가 이혼한 아동은 많은 경제적 곤란에 직면하는데, 특히 모자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하여 약 5배 이상의 빈곤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한부모 가족의 빈곤은 공공부조로 살아가는 가족 수를 증가시켰고<sup>13)</sup>, 특히 여성 한부모가족의 증가는 국가재정부담의 증대로 이어져 연방차원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미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주요한 문제로 다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까지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父)의 다수는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13) 1961년에는 한부모 가정 중 240만 세대가 공적보조의 일종인 요부양아동가족보조(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 AFDC)를 수급하고 있었음에 대하여 1974년에는 그 수는 870만 세대로 상승했다.

1975년 미 연방의회는 사회보장법 IV장 D절을 추가함으로써, 각 주(州)에 양육비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고, 특히 공적부조수급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1975년에 자녀양육이행확보기관(the 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 OCSE)이 설립됨으로써 모든 주(州)에서 양육비지급의무의 주 내부에서와 주 사이의 이행강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주(州)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것에 대하여 연방의 개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후 주가 비양육부모에 대하여 자녀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한 1984년 개정자녀양육비이행확보법(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Amendments)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에서는 각주가 1987년 10월까지 주 전체에서 권고할만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연방규칙은 가이드라인이 수치화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1988년의 가족지원법(The Family Support Act)은 숫자화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의 사용을 승인하고, 모든 주에서 1989년 10월 13일까지 자녀양육비를 정하는 자가 가이드라인을 적절하게 항변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을 함으로써 자녀양육비 금액을 정하도록 하였다.

## 나. 자녀양육비 이행 체계

미국은 1960~70년대 이혼율의 증가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급증하였고, 1980년대에는 결혼 지연과 미혼 출산이 증가하면서 특히 여성 한부모가족이 증가하였다. 1970년대에는 전체 가족 중 13% 정도가 한부모가족이었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996년에는 미국 내 거주하는 아동의 25% 이상이 한부모가족의 아동으로 1970년대의 2배가 되었다. 특히 여성 한부모가족이 약 84%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미국은 여성 한부모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이들 가구의 빈곤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전체 여성 한부모가구의 약 29%가 빈곤을 경험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비교해서도 5.1%p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의 여성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은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또한 1995-1997년 사이에 복지혜택을 받은 여성 한부모가족은 전체 여성 한부모가족의 절반에 해당하며, 1993년의 45%에서 1997년에는 38%로 감소하였고, 최근에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sup>1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명시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이나 아동정책이 없는 국가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유사한 정책이 없던 국가이다. 그러나 암묵적인 아동과 가족정책의 법제화라고 명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나 정부의 헌신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유자

14) 이용우(2006), 여성 한부모 가구의 빈곤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간 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25, pp. 53-80.

녀 가족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제도는 1900년대 진보의 시대 이후 약 100여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지만, 클린턴 정부와 부시 정부 초반에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Clearing comparative policies and programs 홈페이지).

특히 미국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아동부양에 대한 책무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법정 명령에 따른 지원(court-ordered support) 보상은 부모의 월급과 조세 환급금으로부터 지급금을 자동적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중재에 따른 자녀양육비의 산정식에 따르면 한 자녀일 때 소득의 17%, 2자녀일 때 소득의 25%, 3자녀일 때 소득의 29%를 지급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자녀를 보호하는 엄마는 법원에 의해 자녀 부양을 중재된 것이 61.4%였던 것에 반해 이들 그룹의 단지 47.3%만이 전체 지급금을 실제로 받았으며, 77.5%는 자녀양육비의 일부를 받고, 양육비 금액을 낮추었다.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엄마의 빈곤율은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았을 때와 정해진 양육비 중 중 일부만 받았을 때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미국은 1970년대 혼인법에 부양 의무자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명문화하였고 가족지원법(1996년)과 자녀양육이행법(1975년)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 책임 및 양육비 이행에 대한 법적 규제를 명문화하였다. 자녀양육이행프로그램(Child Support Enforcement, CSE)은 자녀양육비 징수를 위한 연방정부와 주(州)정부,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다.

자녀양육이행(CSE)프로그램은 부모들이 자녀를 내버려두고 떠날 수 없도록 가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들의 삶에 개입된 부모를 가지도록 강조하고, 복지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 모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강화하는데 있다.

연방자녀양육이행기관(OCSE)는 미국 보건복지서비스부에 소속되어 있다. 이 기관은 주에서 그들의 프로그램을 연방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며 운영하도록 돕는다. 연방정부는 OCSE의 프로그램 운영비 대부분을 지급하고 지방서비스와 정책 지침, 강제기관에 대한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회계감사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연구를 지원하며 프로그램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이 프로그램은 비양육 부모의 소재를 확인하고, 친자확인 등을 통해 부성을 확인하며, 양육 명령을 시행하며, 필요한 때 법원명령을 수정하고 자녀양육비를 징수하여 배분한다. 이를 위해 자녀양육이행국(The 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OCSE)을 두고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서비스부에 속해있다. 또한 자녀 양육비 징수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소득자료를 협조하고 있으며,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비양육 부모의 이사 등에 따른 연락 두절을 대비해

연방부모소재탐지서비스(FPLS)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 CSE 프로그램은 1975년 사회보장법 IV-D로 설립되었다. 그 법은 모든 주와 지역에서 주/지방 사회복지부와 지방검찰청, 혹은 국세청을 통하여 작용한다. 대부분의 주들은 지방검사, 다른 법적 강제기관, 그리고 가정법원 공무원들이 지역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한다. 미국 원주민 역시 연방기금으로 그들의 문화와 전통의 맥락에서 자녀부양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주(州) 자녀양육프로그램은 비양육부모를 위치하고 부성을 설립하며, 양육 명령을 설립하고 강화하고, 적절한 때 법원명령을 수정하고, 자녀양육비를 징수하여 배분한다. 주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만 필요로 하는 모든 부모들에게 서비스는 유용하다.

자녀양육이행시스템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었을 당시에 자녀양육비는 분명 복지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였다. 그러나 복지 수급가구에 자녀양육비가 지급됨에 따라 비양육부모로부터 징수한 자녀양육비를 언제, 어떤 형태로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촉발되었다. 1996년 근로기회조정법(PRWORA)의 도입 전까지 대부분의 주는 여성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산정에 있어 자녀양육비를 제외하고 공공부조를 받는 여성에게 지급된 자녀양육비를 과세기반에 포함하지 않았다<sup>15)</sup>. 그러나 소수의 주정부에서는 공공부조를 받는 여성에게 매월 자녀양육비를 \$50만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AFDC가 TANF로 대체됨에 따라 각 주는 부조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고안하게 되었는데, 많은 주들은 TANF 가구의 급여에 대한 자녀양육비 지급을 유지하는 대신 사회적 급여를 과세기반에 포함시키지 않는 disregard 정책과 pass-through 정책을 종결했다<sup>16)</sup>.

최근 미국의 많은 주정부들은 복지수급가구의 자녀양육비 수급과 이의 과세 부과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복지수급가구의 공공부조액과 분리하여 자녀양육비를 지급하거나 공공부조액에 자녀양육비를 더하여 제공할 수도 있고, 자녀양육비를 과세 기반에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녀양육비와 공공부조액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논쟁은 복지수급가구의 한부모가 자녀부양강화시스템을 통해 비양육부모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제한하거나 강화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자녀양육비를 소득으로 인정할 경우 한부모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친자인지 및 친자확인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한 후 비양육부모의 재정능력에 따라 산정된 자녀양육비를 지급받음으로써 비양육부모의 자녀에 대한 재정적·비재정적 개입을 일부 받아들여야 하는

15) Justice, Jan. (2007). *State policy regarding pass-through and disregard of current month's child support collected for families receiving TANF-Funded cash assistance*. Washington, DC: Center for law and social policy.

16) 앞의 각주 28) 참고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부모들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것은 찬성하나 자녀 방문 등 비재정적 개입을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녀양육비의 지급이 과세를 수반하게 되면 실제적인 한부모의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부모들은 자녀양육비가 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기반에 포함될 경우 친자인지 및 확인, 자녀양육비 지급을 위한 정보 제공 등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발생한다. 오히려 이들은 부모간 합의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자녀양육비를 지급받고자 시도한다.

Cancian et al.(2009b)에 따르면 자녀양육비에 대한 과세불포함(disregard)이 높을수록 친자인지 및 확인(paternity establishment)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자녀양육비 징수 사례 비율은 자녀양육비의 과세불포함 기준 금액이 \$50, \$100일 때 유의한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양육비가 지급될 경우 복지급여를 받는 어머니가 더 많은 소득을 갖게 되므로 과세불포함 정책은 어머니의 친자 인지 및 확인에 협조하는 인센티브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 다. 자녀양육비 산정 기준 및 방식

자녀양육비는 이행부모의 지불능력과 자녀의 필요 두 가지 주요한 요소들에 기초를 둔 완전한 법원의 자유재량이었고, 이러한 자녀양육비 결정은 ① 많은 적격부모들이 전혀 자녀양육비 결정을 받지 못하고, ② 자녀양육비 결정을 받은 부모들 사이에서 결정이 부당하다는 경험적 증거들이 만연하며, ③ 결정들은 일관성이 없고, ④ 결정의 비밀관성의 직접적 결과로서 이행자들이 법원의 명령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됨에 따라 부모들은 쉽게 그들의 지원의무를 저버리게 되며, ⑤ 무정형의 기준으로 인해 부모들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러한 예측불가능 때문에 어떤 부모들도 합의하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법원의 사건부담은 가중되었다는 다섯 가지 주요한 문제들을 야기하기 쉬웠다고 한다.

자녀양육비 결정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은 직접적으로 연방정부와 연관되는데, 이는 연방정부가 부양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공공부조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가족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경감된다면 연방정부의 비용은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자녀양육비 결정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방대한 법원의 자유재량의 영역을 줄이려고 시도하였다고 한다.

자녀양육비에 관한 결정은 자녀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법률에 따른 자녀양육의무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양육비지급 명령이 없이는 이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자녀 양육비

결정시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여 행정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자녀양육비 계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1984년의 개정 자녀부양법(Child Support Amendments)의 통과로 실현되었다. 이 법은 州에게 연방기금 수령조건으로서, 지불의무자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한 달의 연체 후에 급여공제를 시행하고, 재산에 선취특권(lien)을 부과하고, 세금환급을 차단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자녀양육비이행강제기관의 효율성을 넓혔다. 또한 적절한 양육비 인용액을 결정하기 위한 수학적인 계산식(가이드라인)을 개발하도록 주에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은 자녀양육비 명령액이 지나치게 낮고 유사한 상황에 자녀양육비액이 일관성이 없이 너무 다양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요구되었다.

1984년의 개정 자녀부양법은 자녀양육비 결정시 가이드라인의 사용이 의무적이지 않았지만, 1988년 가족지원법은 연방기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서 모든 주들이 양육비를 계산할 때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의한 계산은 양육비 지불의무 있는 부모의 소득이나 부모들의 소득, 기대소득과 자녀의 특별한 수요를 감안하여 적절한 양육비액이라는 추정을 낳아야 한다. 가이드라인들의 적용이 정확한 양육비액이라는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가이드라인들의 적용이 부적절하다거나 부당한 명령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기록을 통한 사실인정이나 구체적 사실인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양육비액은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양육비결정자가 그 일탈(deviation)을 정당화할 사유들을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연방규칙은 주 가이드라인이 비양육부모의 소득과 수입을 고려한 양육비액을 계산하는 수학적인 계산식을 가져야 하며, 자녀의 건강상의 필요를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연방규칙은 가이드라인이 법률이나 사법조치나 행정조치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원칙들은 가이드라인을 위한 지침 구성의 시초가 된다.

- i. 양쪽 부모들은 그들의 수입비율에 따른 부모들 사이의 나누어진 경제적 책임에 따라 그들의 자녀들을 지원한 법적 책임을 할당받아야 한다.
- ii. 각각의 부모들의 생계비는 자녀양육비를 합의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양육책임이 0으로 정해져서는 안된다.
- iii. 자녀양육비는 우선, 자녀의 기초적 수요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나, 둘 중 어느 한 부모가 향유하는 더 높은 생활수준의 정도까지는 그 개선된 기준의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 iv. 부모들의 각 자녀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수입, 현재 배우자의 수입과 다른 부양가족의 존재와 같은 요소를 조건으로 해서 그 부모의 수입에 대하여 같은 권리를 가진다.



- v. 각 자녀들은 태어날 때 부모의 배우자 유무와 상관없이 양육비결정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vi. 지침들의 적용은 성적으로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 vii. 지침은 둘 중 한 부모의 주된 삶의 결정에 있어서 무관계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특히 지침으로 인해 재혼이나 노동참여가 억제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 viii. 지침은 자녀양육에 있어서 양쪽 부모가 몰두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지침은 분배된 신체적 양육과 장기간에 걸친 방문의 조정에 있어서 부모들에게 분할된 재정적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 3) 독일의 양육비 이행 관련 법·제도

#### 가. 법적 근거

최근 독일 가정법원은 현대 가족법의 과제로 첫째, 중립성의 원칙과 둘째, 자녀복지 우선의 원칙, 그리고 셋째, 책임에 대한 요구 3가지를 지적하였다. 여기서 ‘중립성의 원칙’은 사적인 삶의 영역에서 국가는 중립성을 지킨다는 원칙이며, 자녀복지 우선의 원칙은 혼인상태에 따라 아동이 차별받아서 안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책임을 청구하는 원칙에 대해서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무엇보다도 동반자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책임을 부담하며, 이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라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조은희, 2011: 199).

1998년 공포된 독일자녀부양법(Kindesunterhaltsgesetz)은 이혼 후의 기간동안 매우 포괄적인 부양청구권을 인정한다. 이는 혼인 중의 생활관계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 그 결과 많은 경우에 일방 배우자는 이혼한 상대방의 소득일부를 지속적으로 나누어 받았다. 이러한 와중에 2008년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이혼 후 자기책임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부부 중 누구도 원칙적으로 이혼 후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어느 한 쪽이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새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기존의 부양료에 상한을 제한하거나, 또는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결정적인 것은 이혼 후 부양이 혼인의 결과로 인한 불이익을 청산해야 하기는 하지만, 종전 배우자의 수입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관념이다. 결국 한편으로는 이혼 후에도 사후효과 있는 가족 보호와 다른 한편으로는 부양 의무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전 배우자가 궁핍에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새로운 동반자관계 또는 가족에서 재정적으로도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조은희, 2011: 201).

여타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독일은 혼외 출산률이 30%를 넘으며, 미혼모가족은 흔히

볼 수 있는 가족의 형태이다. 따라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조은희, 2011: 3). 이러한 배경에서 혼인 중의 출생 또는 혼인 외 출생이라는 지위는 친자법에서 아무런 차이를 야기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2008년 4월 1일 “부인절차와 무관한 부성확정(父性確定)을 위한 법률”이 발효되면서 자녀가 누구의 자손인지에 관하여 유전자 확인을 하는 것은 친생부인(親生否認)과는 별도로 가능해졌다.

## 나. 자녀양육비 이행체계<sup>17)</sup>

1998년의 친자관계법 개정법안과 자녀부양개정법안으로 자녀양육비와 관련된 광범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친족에 의하여 주장된 법적 부양의무와 관련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통일적으로 가정법원이 관할하며 자녀양육비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가족관련 사안으로 보고 그 절차적 범위와 심급은 통일적으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에 이행에 관한 절차를 단순화하였다. 즉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모 측과 동일 주거 내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 모든 미성년의 자녀가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절차는 독일 민사소송법 제 645조에 의하여 단순화된 절차로 진행된다.

이러한 절차의 단순화는 사법보좌관(Rechtspfleger)을 통해 가능하다. 즉 양육비를 청구하는 자녀는 양육비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 또는 양육비가 청구된 부모 측의 청구능력 등 어느 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양육비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단순화된 절차에서 증거조사는 행해지지 않으며, 이 절차를 통하여 양육비를 청구하는 자녀는 현재 양육비를 청구받은 부모측이 이미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언급했던 것만으로 확정될 수 있다.

## 다. 자녀양육비 산정기준 및 방식

1998년 개정된 자녀부양법(Knidesunterhaltgesetz)은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한 객관적 필요 정도를 기본수요(Grundbedarf), 초과수요(Mehrbedarf), 특별수요(Sonderbedarf)로 구분한다. 기본수요란 구체적으로 의식주와 관계된 모든 형태가 포함되며 의료비도 포함된다. 다만 노후대책을 위한 보험 또는 노동능력 상실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비용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성년 자녀의 기본수요에 해당하는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소득관계를 고려해서 산정된 표-예, 뒤셀도르프 양육비 산정표 등-를 이용하여 산정하므로 구체적 개별 사안에서의 산정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반면에 초과수요란 양육비 청구권자의

17) 전경근, 차선자, 강지원, 아동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 연구, 여성가족부·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의 일부를 발췌함.

특별한 상황을 전제로 일반적 수요를 넘는 정도의 수요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노동력 상실의 경우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에 따른 보호비용도 포함하고,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용도 해당되지만 해당 사유와 관련하여 사회적 급여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초과수요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특별수요는 통상 예견할 수 없고 비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정기적으로 계산되는 기본수요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수요와 초과수요의 구별은 정기적 지급 여부에 따른다(전경근·차선자, 2005).

1998년 개정된 자녀양육법에 따라 최저생계비(Regelbedarf)를 폐지하는 대신 양육비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액(Regelbetrag)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사용한다. 즉 비양육부모의 수입 등급 및 자녀의 연령층에 따른 기준양육비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뒤셀도르프 산정표와 베를린 산정표를 사용하고 있다. 뒤셀도르프 산정표는 뒤셀도르프 고등법원 가족위원회에 의해 공표되는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2011년부터 새롭게 조정된 뒤셀도르프 산정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단계를 10단계로 구분하고 아동의 연령을 0-5세, 6-11세, 12-17세, 그리고 18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각 소득 단계의 연령대별 양육비의 산정은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의 수(재혼가정의 자녀를 포함)와 최소부양비용(Mindestbedarf), 미성년의 미혼 자녀의 학업 및 생업 종사 여부에 따른 필수적인 자기부양액(Eigenbedarf), 부양필요 정도의 조절가액(Bedarfskontroll-beträge)에 따라 결정된다.

새로운 뒤셀도르프 산정표 (2011-2012)는 아래와 같다.

〈표 6〉 뒤셀도르프 산정표

	Nettoeinkommen des Barunterhaltspflichtigen (Anm.3,4)	Altersstufen in Jahren ( § 1612aAbs.1BGB)				Prozentsatz	Bedarfskontroll- betrag(Anm.6)
		0 - 5	6 - 11	12 - 17	ab 18		
총액(Alle Beträge) in Euro							
1.	bis 1.500	317	364	426	488	100	770/950
2.	1.501 – 1.900	333	383	448	513	105	1.050
3.	1.901 – 2.300	349	401	469	537	110	1.150
4.	2.301 – 2.700	365	419	490	562	115	1.250
5.	2.701 – 3.100	381	437	512	586	120	1.350
6.	3.101 – 3.500	406	466	546	625	128	1.450
7.	3.501 – 3.900	432	496	580	664	136	1.550
8.	3.901 – 4.300	457	525	614	703	144	1.650
9.	4.301 – 4.700	482	554	648	742	152	1.750
10.	4.701 – 5.100	508	583	682	781	160	1.850
ab 5.101 nach den Umständen des Falles							

자료: [www.treffpunktaltern.de](http://www.treffpunktaltern.de)

이에 비해 베를린 산정표는 뒤셀도르프 산정표의 전단계 산정표(Vortabelle)로 작성된 것으로 통일 독일 이후 독일로 편입된 지역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뒤셀도르프 산정표를 보충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새로이 베를린시로 편입된 지역에 거주하는 미혼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양육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통일 후 양육비 채권자 또는 양육비 채무자 중 어느 한 쪽이 신 독일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전경근·차선자, 2005).

## 라. 양육비 대지급(Unterhaltsvorschuss)

1994년 제정된 양육비 대지급법에 의하여 한부모가족의 아동은 비양육친이 그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망한 경우에 국가의 양육비 지원을 받는다. 양육비 대지급 신청은 12세 이하의 아동만 해당한다.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부모 중 일방이 생존하고 있고 미혼인 경우,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중인 경우이다. 나아가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규칙적으로 양육하고 있지 않거나 계부모가 사망하였거나 고아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양육비대지급법 제1조 제1항).

이와 함께 아동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장기간 배우자와 또는 생활동반자(Lebenspartner)의 관계에서 민법 제1567조에서 의미하는 별거상태에 있거나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거나 법원의 명령으로 최소 6개월의 기간 동안 수용시설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정되는 경우에도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양육비 대지급법 제1조 제2항).

양육비 대지급 급여는 독일 민법 제 1612조a 제1항 제3문 제1-2호에 의하여 확정된 월별 최소부양비용이 지불된다. 즉 월별로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1인당 279 EUR, 만 12세가 되지 않은 아동에게는 1인당 월 322 EUR이 지불된다. 그러나 아동수당 등 사회적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의 대지급 급여액은 줄어든다. 또한 양육비 대지급 기간은 최대 72개월까지 지급된다.

## 마. 양육비 청구에 관한 보좌제도<sup>18)</sup>

독일 민법의 개정으로 부모의 책임 개념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녀는 더 이상 친

18) 보좌제도에 대한 내용은 조은희, 비혼 한부모가족의 법적, 사회적 지위-독일 사례 중심으로, 『미래포럼 제 32차 자료집』, 2011; 김상용, 이혼 가정 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를 중심으로-, 『이혼가정과 자녀양육 '양육비' 제도로 받고 있는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1을 참조하여 작성함.

권의 객체가 아닌 권리주체로서 이해된다. 그래서 독일 법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보호와 면접교섭을 부모의 권리이자 명백한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최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2008년 4월 1일)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자녀의 권리와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보호하며, 부모의 권리와 불가분으로 연결된 자녀 보호와 양육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청구권을 공식화하였다(Gerd Brudermüller, 2008).

미혼모는 자녀의 임신에서부터 출산, 그리고 양육에 이르기까지 혼자서 모든 상황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려움이 배가된다. 이 때문에 독일민법에서는 혼외자 그리고 미혼모의 부양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 민법상 자녀의 생부는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 동안 자녀의 모(母)를 부양해야 한다. 미혼모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고, 자녀의 생부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이외에도 생부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기간에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미혼모는 계속적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자녀의 출생 4개월 전부터 그리고 출생 후 최소 3년까지 생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형평성에 부합되는 경우 더 연장할 수 있다.

미혼모의 부양청구권이나 자녀의 양육비청구권은 선급제도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의미가 없다. 미혼모의 경우 임신기간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생부에 대해서 부양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또한 미혼모가 출산 후 시간이 지나서 생부가 자녀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당장 자녀의 부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이 없다면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국가가 선급하여 생부가 지불해야 할 부양료를 지불하고, 후에 생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된 부양료를 다시 되돌려 받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미성년인 자녀를 위한 ‘보좌제도(독일민법 제1712조 ff)’는 특별한 형태의 법적 대리이다. 1924년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혼인 외의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아동복지기관이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어 자녀의 인지, 생부에 대한 부양료청구 등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보좌제도는 후견인 선임을 위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출산시와 그 직후에 아동복지기관의 지원을 즉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비혼인관계에서 출생하는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아동양육기관이 자동적으로 후견을 개시하는 법규정은 불필요하게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더하여 통일 후 동독과의 법률통합을 위해 혼인 외의 자뿐만 아니라 혼인 중의 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괄적인 지원제도의 입법이 논의되었고, 그 결과 1998년 7월 1일 새로운 보좌제도(Beistandschaft)가 탄생되었다.

개정된 보좌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친권자) 누구나 가족 문제를 전담하는 복지기

관(Jugendamt=Youth Welfare Office, 아동복지기관)에 보좌를 신청할 수 있다(독일민법 제 1712조 제1항). 이 때 보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은 인지(Vaterschaftsfestellung)와 양육비 청구(Unterhaltsgeltendmachung)로 제한되어 있다. 보좌인이 된 아동복지기관은 그 사안에 대하여 자녀의 후견인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되는데 아동복지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그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자녀를 대리하여 범위 내에서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독일민법 제 1915조 제1항, 제1793조). 단독친권자가 아동복지기관에 서면으로 보좌를 신청하면, 신청서가 접수되는 즉시 복지기관이 신청된 사안에 대해서 자녀의 보좌인이 되는 것이다(독일민법 제1714조). 또한 보좌는 신청자가 서면으로 종료를 신청한 경우 종료되는데, 독일민법 제1713조에 의한 전제(부의 인지, 부양청구)가 이행되었을 경우 종료된다(독일민법 제1715조 제2항). 이러한 보좌제도는 혼외자의 모(母)가 인지소송 등에 경험이 없고, 자녀의 생부와 의 긴장관계를 피하고 싶어 소극적인 태도로 권리를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보좌제도는 자발적인 청소년원조급부(Jugendhilfeleistung)로 모든 미성년인 자녀의 부나 모에게 청소년보호국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보좌의 개시에는 법원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민법상의 보좌제도는 친자법 개정 당시 도입되었으며, 개정전의 독일 민법이 혼인 외의 자가 출생하는 경우 확일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고 일정한 사안에 관하여 자녀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보좌제도로 대체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혼인외의 자와 미혼모가 보좌제도의 존재 자체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독일사회법은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생부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를 대비한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 즉 혼인외의 자가 출생한 경우 우선 아동복지기관은 지체없이 미혼모에게 인지와 양육비청구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해야만 한다. 이 때 아동복지기관은 인지의 의미와 인지방법, 양육비 지급의무의 공증가능성, 보좌제도와 그 이용가능성, 공동친권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독일사회법 제8편 제 52조 제1항 2문).

미혼모들은 많은 경우에 오로지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자녀의 생부를 밝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기관은 미혼모에게 개인적인 대화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대화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미혼모가 원하는 장소로 해야한다(독일사회법 제8편 제52a조 제1항3문-4문). 이러한 대화는 미혼모의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아동복지기관에 대한 신뢰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출산 직후에 아동복지기관을 직접 찾아 나서기 어려운 미혼모에게 아동복지기관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다. 한편 아동복지기관은 미혼 여성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출산 전부터 이러한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지원(2010), 「선진국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관련 쟁점」, 『보건복지포럼』, 168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은주·김진옥(2009), 「한부모 가구의 빈곤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 김상용(2011), 「이혼 가정 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를 중심으로」, 이혼가정과 자녀양육 ‘양육비 제도로 받고 있는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김진옥(2010), 「한부모 가구의 빈곤과 소득이전: 양부모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 독일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국 홈페이지.
-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 및 가족부 홈페이지.
- 미국사회보장청 홈페이지.
- 송치호·여유진(2010),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간 빈곤율 차이에 대한 요인분해: 미국과의 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
- 안경희(2008), 「2007년 개정 독일부양법의 주요내용」, 『법학논총』, 제20권 제2호, pp. 119-165, 서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용우(2006), 「여성 한부모가구의 빈곤지위에 미치는 아동의 영향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사회보장연구』.
- 전경근·차선자·강지원(2011), 「아동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 연구」, 여성가족부·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경근·차선자(2005), 「적정한 양육비의 산정 및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 조은희(2011a), 「비혼 한부모가족의 법적, 사회적 지위-독일 사례 중심으로」, 미래포럼 제32차 자료집.
- DWP(2007), A new system of child maintenance-Summary of responses to the consultation.
- Justice, Jan.(2007). State policy regarding pass-through and disregard of current month's child support collected for families receiving TANF-Funded cash assistance. Washington, DC: Center for law and social policy.
- OECD Family Database 홈페이지.
- Skinner, Bradshaw, and Davidson.(2008), Child support polic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WP 478, LIS.

# 미혼부의 법적 책임강화 방안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I. 들어가며<sup>1)</sup>

최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양육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입장 등으로 양육하려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비양육 부모인 미혼부의 책임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정부의 공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미혼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미혼부의 법적 책임의 이행이 매우 미비한 실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미혼부의 법적 책임의 이행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 우선 미혼부의 책임과 관련된 민법의 조문들이 법률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은 없는지를 점검해 보고, 미혼모가 미혼부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취하지 않고 주저하는 지점들이 실제 법 적용이 되는 판례에서는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미혼모들이 미혼부의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를 이용하기 쉽도록 하며, 미혼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책임 이행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양육비 지급 및 이행확보 관련 법률

### 1.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

#### 1) 혼외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

혼외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는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자녀를 중심으로 보면 그 자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는 사실은 틀림없다. 법률적으로 보면 자녀의 어머니는 자녀의 출산이라는 사실을 통해 확정되지만, 자녀의 아버지는 인지라는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인지는 인지권자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스스로 하는 임의인지와 소송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강제인지, 즉 재판상 인지가 있다. 임의인지는 인지신고의 방식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인지를 통해 아버지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녀와 아버지, 어머니가 공동의 장소에서

1) 본 원고는 2011년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지원으로 수행된 『미혼부의 책임강화 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공동의 생활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자녀를 둘러싸고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 인지 이후에 자녀에 대한 친권은 누가 행사할 것인지,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용은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지,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일방은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지 등 자녀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대한 법률적 정리가 필요하다.

## 2) 양육비 지급의 법적 근거

양육비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양육에 관한 권리의무는 미성년 자녀의 육체 및 정신의 건전한 발달과 성숙을 위한 권리의무이고, 양육비 지급의무는 그러한 보호·교양에 드는 비용의 경제적 급여의무이며 부양의무의 성격이 강하다. 민법 제837조의 양육의무와 양육비 지급의무를 구별되는 개념으로 파악할 때, 양육비 지급책임의 법적 근거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민법상 부양의무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학설이 나뉘어 있다. 즉, 민법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민법 제974조)고 하고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관한 별개의 규정(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을 두고 있지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의 법적 기초에 관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다.

우선, 민법 제913조에서 그 근거를 찾는 설은 친권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의 권리의무 중에 경제적 급여의무인 양육비 지급의무가 포함된다고 하는 견해인데, 이 설에 의하면 친권자가 아닌 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두 번째 설은 양육비 지급의무를 직계혈족 간에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974조에 근거한다고 보는 견해로, 친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지만, 민법 제974조는 일반 친족 간의 부양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부양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는 친자관계에 따른 불가결한 효과로서 당연히 발생하여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문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sup>2)</sup> 부모는 자녀가 태어난 때로부터 당연히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출생시부터 부모에 대하여 부양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상용, 2008, p.207).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경우에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보호와 교양을 통하여 이와 같은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하

2) 다만 자녀 양육비 지급의무가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친권이나 양육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입법은 별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였거나 별거하고 있는 경우 또는 처음부터 혼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일방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부양의무를 이행한다. 이렇게 본다면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자신을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부양청구권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권리행사의 문제에 있어서 양육친이 비양육친에 대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유는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양육친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를 대리하여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3) 인지 이후의 자녀의 양육책임

인지를 통해 아버지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녀와 아버지, 어머니가 공동의 장소에서 공동의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고, 마치 이혼 후의 삶과 유사하기 때문에 인지 이후의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에 관한 법률관계는 협의이혼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837조<sup>3)</sup> 및 제837조의2<sup>4)</sup>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민법 제864조의2<sup>5)</sup>).

이에 따라 자의 양육에 관하여는 우선 부모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양육에 관한 부모의 협의는 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양육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협의이혼의

- 
- 3)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1)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 4)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  
 ②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본조신설 1990.1.13]
- 5) 제864조의2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3.31]

경우에는 이혼의사의 확인절차가 있으므로 법원이 이혼의사의 확인절차에서 양육에 관한 부모의 협의를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의인지의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부모의 협의를 심사할 수 있는 절차상의 기회가 없으므로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임의인지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가 없으면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위와 같은 현 법규정에 의하면 미혼모 혼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법원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

## 2.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법률

협의를든 판결이든 정해진 양육비가 자발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이행확보수단이 필요하다. 현행법상으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와 가사소송법상의 양육비 이행확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1)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구하는 절차이다. 강제집행절차는 강제집행을 위한 권원인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채권이 이행기에 도래하고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구할 수 있지만, 집행권원이 없으면 그것을 얻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사이 채무자가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보전처분으로 가압류를 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집행권원을 얻고 나서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하면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하다.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 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을 획득한 후 재산파악을 위한 제도로써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제도를 두고 있다.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는 기본전제로서 채권이 이행기에 도래하였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과거의 양육비로서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일시금 채권과 정기금 채권 중에서도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것은 강제집행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기금 판결 중 아

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강제집행절차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달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이행기가 지난 채권에 대하여 매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거나 이행기가 지난 채권을 일정기간까지 모아 집행해야 한다. 또한 강제집행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이므로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활용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때에는 강제집행제도로는 더 이상 취할 방법이 없게 된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 상대방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육 당사자는 배당절차에 의해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다. 배당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자들에게 그 순위에 의해 우선변제가 되고, 남은 금액에서 일방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을 하게 된다. 이때 상대방의 재산환가대금이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순위에 밀려 아주 적은 금액을 지급받거나, 심지어는 전혀 지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제 여부는 우선변제권의 존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에 자녀의 기본생계에 필요한 양육비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서는 양육비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오영나, 2011, p.40).

## 2) 가사소송법상의 양육비 이행확보제도

가사채무는 민사채무와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소액의 채무이고, 또 소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정기급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비용부담이 커 강제집행절차를 밟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사사건의 당사자 사이에 가족 혹은 친족 관계가 있거나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권리실행방법을 취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보다는 생계의 보장이나 당사자의 감정적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시급히 이행을 확보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가사채무의 특성 때문에 가정법원의 후견적 입장에서 그 집행에 관여하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에는 사전적 이행확보제도인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 가압류·가처분(같은 법 제63조)과 사후적 이행확보제도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같은 법 제63조의2), 담보제공명령(같은 법 제63조의3 제1항·제2항), 일시금지급명령(같은 법 제63조의3 제3항·제4항), 이행명령(같은 법 제64조), 금전의 임치(같은 법 제65조)가 있다.

특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제도는 정기적 양육비채권에 대한 이행확보를 위하여 2009년 개정된 가사소송법에 신설되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매달 급여에서 청구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강제집행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으로서 매월 소액으로 지급되는 양육비채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사집행법상의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의 집행이라는 원칙을 완화시켜 적용한 경우이다.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하여 장래 지급할 채권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 Ⅲ. 미혼모와 미혼부의 법적 책임에 관한 판례

김혜영 외(2009)의 미혼모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미혼모가 미혼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에 불과한 것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원인으로 양육비 문제로 미혼부와 교류하기를 원치 않거나, 자녀의 양육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나아가 현실적으로 양육비 청구소송에 대한 인지도나 절차의 번거로움, 소요되는 시간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 등이 미혼모로 하여금 자녀양육비 청구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혼모가 미혼부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취하지 않고 주저하는 지점들이 실제 법 적용이 되는 판례에서는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미혼모들이 미혼부의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를 이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미혼모와 미혼부의 법적 책임이 다투어진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급심 판례는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다투어질 경우 변경될 수도 있지만, 미혼모와 미혼부의 법적 책임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기에 같이 살펴본다.

#### 1.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미혼모 중에는 아기아빠가 아기를 빼앗아갈 것이 두려워 양육비 청구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판례에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살펴보면 이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므1458, 1465판결<sup>6)</sup>에 의하면,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6)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공2010상, 1147].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아빠 또는 엄마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빠 또는 엄마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친밀도’를 고려하는데 있어 그동안 자녀를 누가 양육해 왔는지를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들고 있다. 그럼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친권자와 양육자가 결정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최근 미혼모 관련 하급심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1) 서울가정법원 2006드단4925, 58335판결

#### (1) 사실 관계

원고(어머니, 반소 피고)와 피고(아버지, 반소 원고)는 2004년 8월경 아는 사람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2004년 11월 말경 서로 다툰 후 헤어지게 되었고, 헤어진 약 1주일 정도 후에 원고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고 결혼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의 결혼을 거절하면서 원하지 않는 아이이고, 원고와 헤어졌음을 이유로 낙태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05년 7월 12일 자녀를 출산하였고, 원고 가족이 피고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자, 피고는 처음에는 입양에 관하여 언급하였다가, 자녀를 원고의 호적에 올리고 원고가 양육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자녀를 피고의 호적에 올리고, 원고가 양육할테니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자녀를 인지하지 아니하자, 2006. 1. 18. 인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6. 4. 12. 자녀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반소로 자기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줄 것과 그에 따른 자녀 인도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자녀의 출생 이후 현재까지 자녀를 양육하여 왔고, 피고는 자진하여 자녀를 면접 교섭하지는 않았으며, 피고는 2006. 4. 말경 양육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8급 공무원으로 월 20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은 없다.

##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자녀의 연령, 피고는 원고의 임신 사실을 알고서 낙태를 요구하기도 한 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3개월이 경과하여서야 자녀를 인지한 점, 피고는 자녀의 출생 후 현재까지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는 자발적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2.27. 선고 2008드단4903 판결

### (1) 사실 관계

원고(어머니)는 피고(아버지)와 동거하던 중 자녀를 임신하였고,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그 자녀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자녀가 출생한 이후 원고가 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현재까지 길러왔다. 현재 자녀는 만 11개월 정도 되는 영아이다. 원고가 인지 청구 및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청구를 한 사안이다. 피고는 양육관계진술서에서 원고의 경제적 능력을 문제삼으며, 피고의 형수에게 양육을 위탁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 (2)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현재 자녀는 만 11개월 정도 된 영아다. 이 무렵 영아는 양육자와 분명한 애착을 형성하고, 낮가림을 시작하며, 양육자와 떨어질 경우 분리불안을 겪는다. 이처럼 중요한 단계에서 양육자를 선불리 변경하게 되면 모성실조현상이 발생하여 자녀에게 지적·정서적·사회적·성격적 발달 지연 또는 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더구나 피고는 피고 스스로 양육하지 않고 피고의 형수에게 양육을 위탁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모성실조의 위험성을 무릎 쓸 만큼 바람직한 방법인지는 피고 스스로 생각해볼 일이다.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 능력을 문제 삼으나, 그것은 피고가 자녀를 위하여 충분한 양육비를 제공한다면 해결될 문제이다. 이러한 점과 원고와 피고의 양육관계진술서를 종합하여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3) 종합 의견

위 두 판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자녀를 누가 양육해 왔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



다는 것과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달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에서 일반적으로 부모의 재산 상태가 주된 고려사항으로 예측될 수 있는데, 판례에서는 재산 상황보다는 양육 상황, 양육 의사, 자녀에 대한 애정의 정도, 자녀의 의사 등이 보다 중시된다(윤덕경·장영아, 2002, p.161). 왜냐하면 위의 하급심 판례에 언급되어 있는 바처럼, 어머니가 양육하고 싶어 하고 실제로 미성년인 자녀도 어머니와 같이 살고자 한다면, 아버지가 충분한 양육비를 제공하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고등법원 1989.7.12. 선고 88르796 판결에 의하면 “비록 아버지의 경제적 사정이 어머니보다 낮고 아버지도 자녀 양육을 희망하고 있지만, 어머니를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어머니와 함께 계속 거주하면서 어머니의 보호와 교양을 받고 자라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장래와 행복, 그리고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 2. 인지청구권 포기 각서의 효력

미혼모는 임신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는데, 미혼부가 출산을 바라지 않고 낙태하기를 바라거나 입양을 바라는 경우, 간혹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몰래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혀 미혼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서울가정법원 2011.6.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

#### (1) 사실 관계

피고는 2001년 7월경 컴퓨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원고(어머니)와 2001년 9월경부터 만나기 시작하였고 성관계도 하였다. 2002년 2월경부터 임신중절수술과 자연 유산을 반복하였고, 2003년 2월부터 2008년 12월 초경까지 원고(어머니)의 거주지에서 동거생활을 하였다. 2007년 3월경 임신중절을 원인으로 한 자궁선근증 진단을 받았다. 2007년 5월경 원고(어머니)의 아버지의 고회연에 참석하여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 2008년 봄경 웨딩박람회에 다녀오고 2008년 12월 초 함께 사주를 보러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아버지)는 2008년 3월 경 인터넷 채팅으로 다른 여자를 알게 되었고, 2008년 여름경부터 그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관계를 지속하였다.

2008년 12월 경 신혼집을 구하기로 하고, 2009년 초 결혼할 생각을 갖고 있던 중, 다른 여성이 피고의 여동생을 가장하여 피고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는 것처럼 연출하였고, 피고

는 원고에게 집안 반대로 결혼할 수 없으니 헤어지자고 하였다.

2009년 1월 하혈로 병원 처방을 받고 있는 중인데 자궁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 아이를 갖고 싶고, 만약 아기가 생기면 결혼을 반대하는 피고 부모님도 좋지 않겠냐고 설득하여 정자 제공을 받기로 하였으나, 각서를 쓰지 않으면 정자제공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는 정자 증여 이후의 사건들(임신, 출산, 육아, 양육)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았다.

2009년 3월 경 피고가 제공한 정자로 시험관 아기 시술에 성공하여 네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피고는 선택유산에 동의하였고, 2009년 7월경 양수검사동의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으며, 2009년 12월 자녀 둘을 출산하였다. 원고는 출산 이후 현재까지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 피고는 현재까지 출산비용이나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유전자 검사결과 피고가 친부일 확률은 99.9% 이상이다. 이후 원고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인지청구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였다.

## (2) 인지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 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판결 등 참조)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3) 종합 의견

인지청구권이 본인의 일신 전속적인 권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고, 당사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설령 미혼부와 사이에 장차 태어날 아이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 각서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향후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위에서 예로 든 판례는 최근 의료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능해진 인공수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아주 예외적인 사례였지만, 자연적인 성결합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생물학적인 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 법과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많은 청년 미혼부들과 미혼모들은 이러한 법과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로 인하여 많은 청년 미혼부들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

거나, 설령 출산 전에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낳는 것을 반대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미혼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체념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많다. 이 부분은 성교육 등의 과정에서 생물학적인 부모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계몽활동을 통하여 책임 있는 성생활과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서울가정법원 2011. 7. 1. 선고 2010르1921 판결

### (1) 사실관계

원고의 모친인 김○은 1952년경 음식점에 근무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고, 이후 교제를 계속하다가 원고를 임신하였다. 원고를 임신한 지 6개월 정도 될 무렵 피고와 헤어졌고, 김○은 혼자서 원고를 출산하여 양육하였다. 원고가 17세 무렵 피고를 처음 만났고, 피고는 그 이후 계속적인 도움을 주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가 피고의 친자일 확률이 99.99% 이상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원고가 50여년간 인지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0년에서야 인지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원고가 피고와 친자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50여년간 인지청구를 하지 않아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에 와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2)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원고가 단순히 이를 그동안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포기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으며, 원고의 청구가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 (3) 종합의견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그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게 되고, 그렇게 믿는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되는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의 판례에서 보듯이 인지청구의 경우에는 설사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혈연의 절대적 의미를 강조한 판결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르1353 판결 참조).

### 3. 친생자 추정 미치는 자에 대한 인지청구가 인정된 예

인지될 수 있는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추정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아버지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부인된 후가 아니면 인지할 수 없다. 만약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하여 인지청구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친생추정을 먼저 깰 것을 요구한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의 일방, 즉 남편 또는 아내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추정을 깰 뒤, 자녀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제기하는 순서를 거치게 된다. 아래에 소개하는 판례는 비록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지만, 과학적 유전자 검사방법에 의하여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점이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 친생자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아 예전보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예외적인 사유를 넓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례이다. 이에 의하면,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 자녀라 할 지라도 과학적 유전자 검사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면 인지청구 전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

#### 1) 서울가정법원 2011. 5. 18 선고 2010드단76699 판결

##### (1) 사실 관계

배○와 최○은 1991년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이다. 배○은 피고 운영의 치과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피고와 성관계를 갖고 그 사이에서 원고를 포태하여 1992년 8월에 출산하였다. 피고는 배○의 요구에 따라 낙태수술비, 수술휴양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지급하였고, 배○이 예상과 달리 원고를 출산하자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최○은 원고가 피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1994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원고에 대한 양육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배○와 최○은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서 원고의 동생까지 출산하였으나, 결국 2003년에 협의이혼하였다. 그 후 배○은 2006년 피고에게 사과문을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자녀가 성년에 거의 가까워져서 피고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자녀)가 그 법정 대리인인 어머니 배○와 최○의 혼인 중에 포태한 자로서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최○의 친생자 추정을 받으므로 친생부인의 판결에 의하여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인지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2)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은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제도는 배타적인 성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혼인관계의 특질에 비추어 아내가 혼인 중에 출산한 자녀는 남편과 진실한 혈연관계에 있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진실로 어머니의 남편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과 혼인 중에 포태하였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입증케 한다면 가정의 평화가 불안하게 되므로, 부자관계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남편이 민법 제846조7), 제847조8)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법 제844조에 의한 친생추정이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기는 하지만,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같이 살고 있지 않아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고(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서 나아가 과학적 유전자 검사방법에 의하여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점이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도 친생자 추정은 깨어진다고 봄이 위와 같은 친생추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고 한 뒤, “유전학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자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혀진 이상, 원고와 최○ 사이에 혈연적 부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와 최○ 사이에 미치던 민법 제844조에 의한 친생추정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최○와의 친생부인의 소 등을 경유하지 않더라도 생부인 피고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 (3) 종합의견

현재 대법원 판례는 부부가 별거하여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포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포태한 자녀에 대해서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아내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녀에 대하여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러한 신분을 가지는 자녀에 대해서는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부자관계를 제거할 수 있도록 민법이 규정한 이유는 혈연진실주의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화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다. 위에서

7) 민법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의 경우에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8)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개한 하급심 판례는 대법원 판례보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예외적인 사유를 넓게 인정하여 과학적 유전자 검사방법에 의하여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점이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 친생자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고 있다.

친생추정제도는 혈연진실주의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화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혈연진실에 반한다고 아무런 제한 없이 친생추정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이익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부가 이미 이혼한 경우와 같이 이미 지켜야 할 가정의 평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자간의 혈액형이 배치되거나,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부자관계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실질적으로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김주수·김상용, 2010, p.273).

#### 4. 과거 양육비 부분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되기 전까지는 인지자와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인지하지 아니한 아버지는 그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화된 경우에는 그 인지로 인한 효력이 피인지자의 출생시로 소급하므로(민법 제860조), 인지자는 피인지자의 양육자에게 피인지자의 출생 이후부터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과거의 양육비 청구는 대법원 1994. 5. 13.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해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 이후에 가능해졌다. 92스21 결정 이전의 법원의 입장은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가 혼인 외의 자식을 낳은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양육하겠다는 것을 뿌리치고 그 자식을 양육하였다면 그 생모는 그 자식을 부양할 자기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 데 불과하므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대법원 1967.1.31. 선고 66므40판결; 대법원 1976.6.22. 선고 75므17,18판결; 대법원 1979.5.8. 선고 79므3판결; 대법원 1985.6.11. 선고 84다카1536판결). 그러나 대법원 1994. 5. 13.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하여 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입장을 변경하였다.

또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 범위와 관련해서는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하고 있다.

**1) 과거의 양육비 분담이 인정되어 구체적으로 산정된 예 : 창원지법 2011. 2. 9. 선고 2010드단9720 판결**

**(1) 사실 관계**

원고(어머니)는 피고(아버지)와 교제하다가 그 사이에 2009. 2. 20. 자녀를 출산하였고, 현재까지 원고가 자녀를 양육해 왔다. 피고는 자녀의 출생 후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사람과 혼인한 상태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원고가 과거의 양육비로 900만 원을 청구한 사안이다.

**(2) 법원의 판단**

앞의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자녀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출산에 따른 비용과 자녀의 병원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2010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보육료로 매월 766,000원을 납부한 점, 피고는 2009년 1년 동안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총 급여로 3,000만원 정도를 지급받은 점, 피고는 배우자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해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자녀의 출생일인 2009. 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인인 2010. 8. 20.까지의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는 54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과거의 양육비 분담이 인정되지 않은 예 : 서울가정법원 1996. 5. 30. 선고 95드75847 판결**

**(1) 사실관계**

오○은 1994. 4. 15. 경부터 피고와 교제하던 끝에 같은 해 5. 25. 경까지 결혼을 전제로

정교관계를 맺어 오다가 원고를 임신하였다. 같은 해 6월 초경 피고에게 임신사실을 알리면서 혼인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는 가족의 반대를 이유로 오히려 유산할 것을 종용하였고, 오○는 혼자서라도 아이를 출산할 것을 결심하고 같은 해 7. 7.경 피고로부터 오○가 임신 중인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 받았다. 그 후 피고와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1995. 2. 10. 원고를 출산하였고, 같은 해 4. 11. 경 피고에게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또한 같은 해 5월경 오○의 요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양육비로 20만원을 송금해 준 바 있다. 오○는 대학 졸업 후 학원강사로 일하면서 월 평균 15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고, 피고는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평소에는 70만원 남짓, 상여달에는 90만원 남짓의 보수를 받고 있다.

## (2)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법원의 판단

원고가 출생한 이후부터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되기까지의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 법원은 “오○이 원고를 혼자서 양육하여 오게 된 경위, 특히 오○이 1994.7.7.경 피고로부터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받은 이면에는 오○이 피고의 도움 없이 혼자서 원고를 양육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한편, 이 사건 청구는 그와 같은 약정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양육비조로 20만원을 송금하여 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심히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의 것에 한정시킴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 (3) 종합의견

양육권 포기 서약을 받고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여 온 것은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서는 유리한 판단을 받을 지 모르나, 과거의 양육비 청구에서는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양육권 포기 서약을 받은 것이 이러한 양육비 부담 청구를 할 수 없는 예외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급심 판례이다.



## 5.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1990년의 민법개정에 의하여 협의이혼의 제도로 규정되었으나, 재판상 이혼과 혼인의 취소, 인지에 의하여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민법 제864조의2). 이에 대하여 면접교섭권을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로도 인정하고 자녀의 복리실현이 면접교섭의 목적임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타당한 비판이 있었다. 그 후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된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에서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었고, 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된 현행 민법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권을 자녀의 권리로도 명문화하였다.

면접교섭과 관련된 판례를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청구만 있고, 면접교섭에 관한 청구가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및 면접교섭권을 판단할 때 자녀 복리 측면에서 고려하는 요소,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한 예를 중심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청구만 있는 경우 다른 항목에 대한 직권 심판 인정(대법원 2010.2.25. 선고 2009스113 결정)

어머니(청구인)가 사건본인을 임의인지한 아버지(상대방)에 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과 유아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민법 제837조 제2항의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한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법원은 [혼인외의 자(子)가 임의인지된 경우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민법 제864조의2, 제837조 제1항 및 제2항). 그러나 부모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3.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의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결정을 받아야 한다. 한편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의 목적이 된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심판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가사비송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것이 허용되고 당사자의 청구취지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아니한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3.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대상은 “민법 제83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이고, 민법 제837조 제2항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① 양육자의 결정, ② 양육비용의 부담, ③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가정법원은 민법 제837조 제2항이 정하는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중 일부 항목에 대한 청구만 있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다른 항목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인지청구를 하면서 별도로 면접교섭을 청구하지 아니하여도 법원은 면접교섭 부분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0. 4. 27. 선고 2009드단5501

###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2009. 2. 24. 사건본인을 낳았고, 사건본인의 출생시부터 지금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인지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를 한 사안이다.

###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아버지로서 자녀를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한 뒤, 자녀의 나이, 생활환경,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하여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아버지와의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5. 8. 선고 2008드단9649

### (1) 사실관계

동거하던 중 사건본인을 임신하였고, 사건본인이 출생한 이후 원고가 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을 현재까지 길러왔다. 현재 사건본인은 만 11개월 정도된 영아다. 피고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사건본인이 자신의 친생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 (2)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의 판단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법원은 “자녀에게 아버지의 역할모델이 필요하고 자녀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충분한 만남이 필요하므로 아버지가 언제든지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의 내용을 정하고, 만나기 10시간 전에 그 일시, 장소를 어머니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4)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09. 8. 11. 선고 2007드단119374

##### (1) 사실관계

김○은 2005년경 피고 박○을 만나 몇 번의 만남을 가지다가 동침까지 하게 되었다. 김○은 당시 이혼한 상태였는데, 학력, 집안, 결혼이력 등 자신의 신상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지는 않았다. 2007년 4월 임신한 사실을 알고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신상에 대해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피고 박○은 그동안 자신을 속인 것을 문제삼지 않았고, 가족들에게도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2007년 8월 1일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하였는데, 김○의 씹씹이가 커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되자 가족들에게 김○의 신상에 대하여 말하게 되었고, 2007년 8월 7일 혼인철회의사를 확인하고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폐기하였다. 피고 가족들의 계속된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 차용증과 각서를 작성해 주고, 자신의 어머니집으로가서 2007년 9월 16일 원고를 출산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출산소식을 들었지만 나중에 만나자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고서는 이후 연락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피고와 양육과 관련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자 2007년 12월 28일 인지 및 위자료 등의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현재 김○은 자신의 여동생 집에서 원고를 키우고 있는데, 피고○은 출산비용이나 양육비용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 (2)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은 “김○을 원고의 양육자로 지정하는 이상 피고 박○의 면접교섭에 대하여 직권으로 정하여야 하나, 그동안 피고 박○은 원고를 만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소송 계속 중 원고가 법정에 재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아 아직 원고를 아들로써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보이고 또한 면접교섭에 관하여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대하여 법원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이후 당사자들의 협의에 맡기기로 한다”고 판단하였다.

#### 5) 서울가정법원 2010. 7. 22. 선고 2010드단27413

#####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사이에서 2009. 7. 31. 사건본인을 낳았고,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며, 피고는 사건본인의 출생 후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한 바 없다. 이에 대하여 인지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위자료 및 면접교섭 청구를 한 사안이다.

## (2)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자녀를 면접교섭할 것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면접교섭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가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고, 어머니는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였다.

## 6) 의견

최근 미혼모들은 양육비 논의를 하면 면접교섭권 얘기가 나오고 아이에게 아빠를 보여주는 것이 싫어서 양육비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실제로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개정이 이루어진 후, 대법원 판례로도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여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결정이 나와 있고, 그에 따라 인지청구사건에서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판단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직권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직권판단의 근거가 마련된 이후부터 2011년 8월까지 인지사건에서 면접교섭의 직권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12건에 불과하며<sup>9)</sup>, 어머니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아버지가 자녀를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 하에 법원은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

# IV. 현행법의 한계

## 1. 양육비 결정 공백의 문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혼부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인지 이후의 삶의 모습은 이혼 후의 삶과 유사하기 때문에 인지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과 관련된 법률관계가 협의이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지에는 강제인지와 임의인지가 있고, 강제인지는 법원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임의인지는 법원의 개입이 전혀 없이 행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임의인지절차와 협의이혼 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협의이혼은 신고 전에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을 포함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되며, 협의내용이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개입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임의인지의 경우에는 다

9) 2011년 8월 11일 판결문 검색대에서 인지와 면접교섭을 공통의 검색어로 입력했을 때 검색된 사건 수이다.

르다. 2010년 12월 30일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는 인지신고서에는 친권자 지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면 협의에 의한 지정은 협의서, 법원의 결정에 의한 지정은 친권자 지정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임의인지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자녀 양육책임과 관련하여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실제 원만하게 이행까지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인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한 부분에 공백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으며, 이렇게 되면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보완된 이행확보수단을 사용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임의인지 이후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통하여 자녀양육책임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결정 전의 양육비는 과거의 양육비로 처리되어 여러 사정을 이유로 감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행 협의이혼처럼 임의인지에도 자녀 양육책임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아버지에 의한 일방적인 인지는 가부장적인 제도로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극단적인 예로 인지받은 자녀의 성과 본에 관련하여 살펴보면, 혼인외의 자녀의 부모가 협의하면 자녀는 인지되기 전에 사용하던 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생부는 인지신고를 하기 전에 모와 자녀의 성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지된 자녀의 성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 변경된다. 인지된 자녀의 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자녀가 법원에 대하여 종전의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가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한 후 법원에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받으면, 인지 전에 사용하던 성과 본을 회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인지된 자녀는 인지 전에 사용하던 성에서 일단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종래 사용하던 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는 불필요 할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처음부터 종전의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 2. 양육비 결정 기준의 부재

우리의 경우 양육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육비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다. 다만,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거나 제반 사정(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라고 하는 추상적인 규정밖에 두고 있지 않다(민법 제837조). 이러한 사정으로 우리나라의 양육비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없이 여러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대략적으로 결정되며, 그 고려사항들이 결정된 양육비에 어떠한 비율로 구성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혼

과정이나 인지과정에서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행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합의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양육비에 관한 심판에서도 조건이 유사한 사안에서 양육비 결정이 상이하게 나타나 일관성을 잃고 있다. 또한 매 심판시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해 양육비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요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녀 양육비가 제때에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박복순, 2004:132). 이러한 이유로 합의 및 심판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양육비 산정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김승권 외, 2003, 2006, 2009)의 자녀양육비 항목을 근거로 하여 2008년부터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기준표를 사용할지 여부는 담당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또한 서울가정법원에만 한정되어 있어 위에서 지적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

### 3. 강화된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의 한계

가사소송법 개정 이후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대법원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이는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 2년간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에 관한 처리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처리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612건, 담보제공명령은 106건, 일시금 지급명령은 13건이다.

<표 1> 가사소송법 개정 이후 처리 현황(09.11.9 - 11.11.8)

연도	접수건수			처리건수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담보 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담보 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2009	34	11	0	25	5	0
2010	309	68	5	302	54	5
2011	317	60	14	285	47	8
합계	660	139	19	612	106	13

자료: 대법원, 추출근거(올랩프로그램).

물론 양육비 이행확보가 문제되는 경우는 이혼하면서 양육비 지급에 관한 집행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와 이혼하면서 집행권원이 확보되지 않아 별도의 양육비 지급청구를 하여 집행권원을 뒤에 확보하는 경우, 인지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사소송법 개정

이후 새로운 제도의 활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그 범위를 좁혀 2010년 이혼건수만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 한해 동안 116,900쌍의 부부가 이혼했고, 그 중 1명이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비율은 53.8%를 차지해 62,900건이었다. 그리고 연구결과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최근에 조사된 자녀 양육비 이행율과 관련된 자료<sup>10)</sup>에 의하면 매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42.4%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공백없이 자녀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2010년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한 당사자만을 두고 봐도 42,000건 이상이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을 사용하여야 했다는 결과이다. 그런데 대법원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가사소송법 개정에 걸었던 기대에 비해서는 저조한 실적임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다른 두 제도에 비해 활용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제도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이 활용도가 높지 못한 이유는 세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오영나, 2011, pp.65-66). 첫째, 담보제공명령에서 양육비 채무자가 제공할 담보액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에서 일시금 액수 등은 담당 재판부의 재량으로 되어 있어 모호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도 양육비 채권자는 매달 이행기가 도래할 때마다 출급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명령을 불이행할 때 제재로서 일시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일시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할 때 그에 대한 제재로서 비로소 감치를 신청할 수 있어 실제로 채무자에게 강력한 압박수단이 될 수 있는 감치까지 걸리는 과정이 여러 단계로 되어 있고 기간이 몇 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이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이용할 수 있고, 직접지급명령의 대상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채무자로 한정되어 있어 그 효과가 매우 한정적이다. 또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겠다고 하더라도, 양육비채무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고, 이후 개인적인 대처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는 미국의 급여공제제도를 본뜬 것이지만, 몇 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우리의 경우 양육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미국은 행정작용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의 경우 급여만을 직접지급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급여 이외의 다른 소득유형도 급여공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로 인하여 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받아내는데 있어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잦은 직업이동에 대한 대처방식도 달라진다. 우리의 경우는 양육

10) 여성가족부(2011), 『아동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 연구』, p. 122.

비의무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동할 경우에 양육비를 받아내는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부과하고 있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는 이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7년 10월부터 모두 고용주에게 고용의 20일 내에 신규고용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전국신규고용인명부와 자녀양육비명령에 대한 사건등록기록을 자동적으로 비교 대조함으로써 새 일을 시작한 수일 내에 다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양육비채무자가 재취업한 경우 다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채무자의 취업 정보 등 정보에 대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육자가 직장과 양육, 소송을 병행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소재·소득 및 재산파악 등이 힘든 점 등을 감안하여 가사소송법을 보완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V. 개선방안

### 1. 임의인지 절차의 개선

현행 협의이혼처럼 임의인지에도 자녀 양육책임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협의이혼절차와 유사한 확인절차를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며, 독일과 같이 아버지에 의한 인지 시 어머니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인지의 의사표시 및 동의, 인지 시 협의사항은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공증 등본을 아버지, 어머니, 자녀, 가족관계등록계 공무원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김주수·김상용, 2010:272). 다만,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민사집행법 제56조), 공정증서 작성 시 이 점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인지는 생부가 스스로 언제든지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자녀나 어머니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김주수·김상용, 2010:89). 인지신고할 때 피인지자의 출생 당시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는 피인자자의 출생당시 유부녀가 아니었음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sup>11)</sup> 위와 같은 증명서의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아버지가 일방적인 인지신고를 위해 위의 증명서를 대리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협의나 동의가 개입되었다고 볼

11) 자녀의 출생 당시 어머니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그 자녀는 배우자의 친생 자녀로 추정 받고, 인지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유부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중요한 의무를 갖게 된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양육책임에 대한 공백은 메워지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임의인인지시 첨부서류의 협의서 중 친권자 지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자녀 양육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로 변경하여 첨부을 의무화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과 무관한 사항을 요청하게 되고, 협의이혼 시 자녀양육책임의 결정이 그 이후 집행권원으로서 기능하는 것처럼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재판상 인지만을 인정하는 제도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직권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인지 이후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다.

## 2. 양육비 산정기준 마련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양육비 산정을 위한 방법 및 기준양육비를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협의 시 참고할 수 있고 재판상 고려기준이 될 수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부부 각자의 총재산의 일정비율이나 수입의 일정비율을 기준양육비로 정하거나 평균교육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액수로 양육비를 산정하는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산정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시에는 정식 재판으로 엄밀한 양육비 산정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그 효용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계산프로그램을 만들어 양육비 계산의 자동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박복순, 2005, p.138).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양육비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 2011년말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의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추가되었다(법 제17조의3). 또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12년 3월부터 전국의 가정법원이 서울, 부산 외에 대전, 대구, 광주로 확대되어 가사사건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서 2008년에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갱신하여 전국의 가정법원의 의로 확산시키며, 여성가족부와 의 업무협의를 통해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양육비 합의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작성시 참고가 된 것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이다. 이 자료는 전국 가구를 대표하는 18,000여 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이들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과 동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 가구가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아동 총 11,49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아동을 포함한 가구의 특성에 따라 자녀 양육비가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 파악한 것이다. 실제 가구에서 지출되는 양육비를 평균적으로 제시한 자료로서, 이를 산정한 자료로서 이를 양육비 산

정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는 아동의 연령, 가구소득, 자녀수가 고려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부양자녀수, 가구소득, 아동연령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2009년

(단위: 만원)

부양자녀수	가구소득	아동연령					
		0~2세	3~5세	6~11세	12~14세	15~17세	18세 이상
1명	99만원 이하	44.1	34.0 <sup>*</sup>	40.7	41.2	68.2	83.9
	100~199만원	53.6	57.9	62.4	64.8	65.8	97.1
	200~299만원	68.5	80.3	85.7	94.2	95.9	112.4
	300~399만원	83.3	110.9	110.5	109.0	117.0	142.4
	400~499만원	109.6	126.8	130.7	160.5	137.0	155.5
	500만원 이상	120.2	169.9	176.4	180.1	187.9	202.0
2명	99만원 이하	45.6 <sup>*</sup>	47.1	49.7	54.7	43.4	92.5
	100~199만원	38.8	47.4	46.6	47.0	52.1	72.6
	200~299만원	53.6	64.7	66.8	71.4	77.1	99.3
	300~399만원	68.4	81.2	84.6	87.3	98.6	122.4
	400~499만원	82.6	99.0	98.2	107.3	121.3	140.9
	500만원 이상	100.4	133.4	140.4	160.2	188.0	196.8
3명	99만원 이하	44.3 <sup>*</sup>	30.3 <sup>*</sup>	32.2	35.6	55.1 <sup>*</sup>	150.0 <sup>*</sup>
	100~199만원	30.4	36.2	36.7	40.5	54.0	85.5
	200~299만원	42.0	51.2	53.7	59.2	63.5	106.0
	300~399만원	49.6	65.1	68.0	75.2	85.8	92.1
	400~499만원	62.0	77.2	79.8	89.6	100.2	108.0
	500만원 이상	97.7 <sup>*</sup>	124.8	121.1	133.6	155.5	177.2

주 : \*는 아동수가 10명 미만이어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약함.

자료 : 김승권 외(2011),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여성가족부, 228면.

### 3.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 보완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지급의무자에 대해선 자녀의 생존과 복리를 위협하는 범죄로 보아 형사적 처벌을 과할 수 있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sup>12)</sup> 그 근거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며 스스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

12)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04년에 마련했던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법안에서는 양육비 지급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국회에서의 법안검토 과정에서 생략된 바 있었다.

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오스트리아 형법은 부양의무위반의 경우 6월 이하의 자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오스트리아 형법 제189조 제1항), 스위스 형법에서도 3일 내지 3년의 범위에서 자유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스위스 형법 제36조).<sup>13)</sup> 양육비지급의무위반에 대하여 주에 따라 형사상 양육의무불이행죄 혹은 법정모독죄의 책임을 부과하는 미국에서는 양육비지급의무를 해태한다고 하여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 양육의무자의 양육의무해태는 사회규범상 용납되지 않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백히 한 판례<sup>14)</sup>들이 이미 오래 전에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 달리 양육비 채무불이행은 자녀의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형사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자녀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면은 경제적 측면 외에도 정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고, 부모의 자녀의 정서적 유대를 유지시키기 위해 현행 감치제도를 활성화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박복순, 2005, p.143).

다만, 감치제도는 금전적 제재가 아닌 사실상의 압박수단으로서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게도 실효성이 있지만, 감치결정은 고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하지 못하여 채무자가 빠져나갈 여지가 많으며 채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구인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법원직원, 교도관, 경찰공무원의 인식이 높지 않아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양육비채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사소송법상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감치의 경우 집행기간 제한을 3개월보다 더 연장하고, 감치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의 인식제고가 요청된다(오영나, 2011, p.66).

#### 4.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도입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자녀를 부모와 독립된 인격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부모에게 종속된 객체로서 간주하는 경향이 팽배하여 자녀양육을 사적 부양에 전적으로 맡겨 왔다. 그럼으로써 자녀의 권리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부족하여 사적부양과 사회보장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약자보호를 위한 국고지원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아동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헌법 제10조). 또한 헌법 제34조에서는 국가의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가 자

13) 김상용(2004), 「양육비채권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청회자료집(2004), 재인용.

14) *Livingston v. Superior Court*, 117 Cal.633,49P.836(1897); *Rose v. Rose*, 481 U..619, 107 S.Ct.2029(1987), 「양육비제대로 받고 있는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자료집(2001), 100면 재인용.

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대하여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의 제약국의 하나로써 그 속에 규정된 부모의 제1차적 책임에 대해 국가는 제2차적 책임을 지며,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이행확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물론 미온적이거나 빈곤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등 생계보장을 위한 국가의 공적 지원이 행해지고는 있으나 대상이 너무 한정되어 있고, 지원금도 현실에 맞지 않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박복순, 2005, p.144).

지금까지 개선된 양육비 이행확보수단의 강화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경제력이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경우에는 어떤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더라도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공백 기간이 발생하게 되어 양육비 채권자와 미성년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미성년 자녀들은 인격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와 국가로부터 최대한의 보호를 받으며 양육되고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가정에 대하여는 국가가 입법적·정책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 이혼이나 미혼 등 한부모 가정의 자녀문제는 개인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복지적 관점에서 국가가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따라서 양육비 대지급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여전히 존재하며, 현재 국회에 이와 관련하여 강명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법안」과 이낙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혼 자녀의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률안」,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석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 중 「양육비 대지급법안」을 제외하고는 미혼모자 가정에 대해서만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그동안 법과 제도 속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미혼가정에 대한 배려는 두드러진다. 그러나 모든 아동은 부모의 혼인상태와 무관하게 그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UN 아동권리협약 제27조), 미혼 가정의 자녀만이 아니라 이혼, 별거, 유기 등의 사유로 부모의 충분한 양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가정의 자녀는 모두 양육비 대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5. 양육비 전담기구 설치·운영

현재 우리나라에는 미혼모의 인지 및 양육비 청구와 양육비강제집행 등을 조력하는 무료 법률구조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기 훨씬 전부터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소송지원이 있어 왔다. 그러나 생업과 양육,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소송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를 대리하여 양육비의 청구와 이행확보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줄 수 있는 전담기구는 없는 실정이다. 독일의 아동복지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아동복지청(각 지역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기관, 교회 등에 위탁운영하는 경우가 많음)은 미혼모의 신청이 있을시 인지 및 양육비청구에 관하여 자녀의 대리인(독일 민법 1712조, 1714조)이 되어 미혼부를 상대로 한 인지 및 양육비 청구, 미혼모의 부양료 청구 등을 대신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15)</sup>

한편 양육비 집행의 경우 미국의 자녀양육비 이행강제기관(the 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이 하고 있는 것처럼 권리자가 집행을 위하여 일일이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행정기구에서 법원의 양육비 명령에 근거하여 부양의무자의 수입이나 재산을 조사하고 월급 등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도록 하여 권리자의 계좌에 양육비가 입금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예컨대 미혼부가 양육비지급책임을 피하기 위해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다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하는 어려움을 겪어야하며, 때로는 양육비 지급이 중단되어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또한 직접지급명령제도는 법원을 통해서만이 이행강제가 가능하여 ‘돈을 대신 받아서 통장에 양육비가 들어오게 해달라’는 양육비 권리자들의 요구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사법적인 영역을 보완하고 법원의 명령을 시행하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미혼모와 그 자녀의 복리를 기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기구에서 담당할 업무로는 인지 및 양육비청구 등과 함께 부재 부모의 수색, 양육비지급의무자에 대한 재정조사(의료보험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조회 등을 통한), 양육비가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 소득삭감 운영, 강제집행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15)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2004년 양육비이행확보 법안을 준비할 때 국가가 민간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 등의 소속직원에게 보좌를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문이 있었으나 국회입법과정에서 민간기관에 법적 대리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된 바 있었다.

## VI. 마치며

이혼이나 혼외 자녀 출생 이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는 양육비 제공의 책임이 있다. 양육 미혼모의 경우도 아이아빠가 양육비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 관련법에서 제시되고 있고, 판례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차원에서 이혼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 왔다. 정부도 양육비 청구 및 이행과 관련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이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며, 대다수 이혼 한부모 가족과 미혼모 가족의 자녀는 동거하는 양육부모 혼자의 힘으로 양육되고 있는 것이다.

미혼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책임 이행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혼부의 책임과 관련된 조문들이 개정되어야 한다. 양육비 결정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의인지절차가 개선되어야 하며, 양육비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결정된 양육비의 적절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이행확보수단의 보완과 양육비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며, 보완적으로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도입이 되어야 한다.

또한 법적·제도적 보완을 위한 노력 외에도 양육비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이행실적이 미비한 이유에는 양육비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것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혼외 자녀의 아버지가 비양육 한부모이면 양육비 제공은 기본적 의무로 생각해야 하고, 양육 한부모들은 양육비 청구를 자녀의 권리 실현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의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주수·김상용(2010). 주석민법[친족(1-3),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승권·김상철·최영준(2011).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여성가족부.
- 김혜영·선보영·김은영·정재훈(200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3). 비혼모에게 인권은 있는가 : 비혼모 가정의 법적 권리와 복리
- 여성가족부(2010). 아동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 연구.
- 婚外子差別と闘う會 編 (2004). 非婚の親と婚外子 : 差別なき明日に向かって. 青木書店(東京).
- 오영나(2011). 미혼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절차와 이행확보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미혼모연구
- 팀·전국여성법무사회.
- 전경근(2011).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양육비지급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경애(2011).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토론문. 양육비지급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복순(2005). 양육비 확보제도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민사법학 제30호. 한국민사법학회.

## 토 론 문

**김전영**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박영미** (한국한부모연합 고문)

**오영나** (전국여성법무사회 부회장)

**이정연**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사무관)







## 토 론 문

김선영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현재 1년 6개월의 시간동안 소송을 하고 있는 32살 김선영 입니다. 4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저는 정신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2년 5월 7일 상대방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친자확인 검사를 위해서 두 번째 서울대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2010년 7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았고, 그 후에 상대방이 잘하겠다는 약속과 상대방의 가족들을 만났음에도 변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와 계속적인 거짓말로 2010년 10월경 서류접수를 하고 담당변호사가 정해져서 연락이 오기까지 한 달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2010년 12월 16일 소장접수가 되었고 소송안내서를 송달할 때 분명히 저는 상담을 하면서 등본에 나와 있는 가리봉주소에 거주하지 않고 철산동주소에 상대측과 그 아버지와 여동생이 살고 있다고 말했음에도 절차상의 이유로 소송안내서가 가리봉으로 전달이 되어 받지 못하였고,

또 다시 2011년 2월 24일 집으로 온 법원등기를 확인하니 상대방의 가족관련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을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명령서였습니다. 상대방과 아버지, 여동생이 가족인데 그 가족들 모두 가리봉의 동일한 주소에 전입신고는 되어있으나 실 거주지는 철산동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소송안내서는 절차상의 이유로 가리봉으로 전달이 되어 또 다시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2011년 4월 13일 공시송달 처리로 법원에 소송안내서를 찾아가도록 처리가 되었고,

2011년 5월 12일 첫 번째 재판-변론기일이 정해졌습니다.

담당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해주시는 분과 통화를 했을 때 상대방 없이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해도 된다고 하였고 대신에 친언니의 진술서를 등기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2011년 4월 28일 등기로 보내드리고 11일 출석을 안 해도 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했을

때도 출석을 안 해도 된다고 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2011년 5월 12일 당일 오전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 출석을 하라고 전화가 와서 전후사정 설명하고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 당일 저녁때 변호사님이 전화가 와서는 재판장님이 친자 확인검사를 요구하시니까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집을 알고 있으니 찾아가서 얘기를 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하여 아이가 10개월이 될 때 동안 그 상대방으로 인해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미혼모의 대부분이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큰 상태에서 상대방을 찾아가기란 죽기보다 싫었지만, 상대방을 찾아갔는데 협조를 안 해준다는 증거자료를 원하시면 어쩔 수 없이 하려고 했으나, 증거 자료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변호사님은 마치 저를 굉장히 낮추어 보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대충 기억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김선영씨가 안하면 누가하나요? 김선영씨 감정싸움하자고 여러 사람 고생시키는 거냐. 지금 무료로 여러 사람이 너로 인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고생을 헛고생으로 만들 거냐. 말귀를 못 알아 듣냐. 친자확인검사 할 돈이 없다면 공단에서 특혜적으로 처리가능여부 알아봐주겠다. 자녀를 위한 부분이니 상대방과 통화해보고 연락을 달라.” 제가 약자인 관계로 저는 마지막에 감정적으로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를 했고 변호사님의 마지막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해한다는 그냥 사무적인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겠더군요.

그 통화 이후에 저는 며칠 동안 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불친절 글을 올렸으나 귀하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널리 이해해 달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상대편과 통화를 시도 해봤지만 연락처는 없는 번호로 되어 있었고, 그 여동생과 통화를 했는데 나로 인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니 본인도 고소를 하겠다고 하기에 고소하라고 했고 소송중이니 당신 오빠한테 말해서 연락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나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 집도 찾아가 봤으나 구조상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님께 상황설명을 드렸고, 또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1년 6월 13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서 송달을 했고, 현대리조트라는 곳이 확인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안내서를 전달했으나 반송이 되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상대방이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현대리조트 계열사가 굉장히 많을 텐데 만약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물었고 그 계열사 모두를 제가 확인해야 되는 건지를 물으니 “그럼 누가 합니까? 이 소송 건 김선영씨 사건 아닌가요? 발 벗고 뛰어 다녀도 모자를 텐데 뛰어다니셔야죠. 의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거다. 친자확인검사비용도 김선영씨가 어렵다

고 해서 우리가 해주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본인이 내고 검사한다.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라면서 변호사 보조업무 하시는 분이 또 다시 저를 굉장히 무시하는 어투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에 제가 양육비소송관련 포럼에 가 봤을 때 친자확인 검사는 누구나 다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 몬가 제가 굉장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님을 말씀드리니 ”그럼 거기다 소송을 하시지 왜 우리한테 소송의뢰를 했나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또 며칠 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아이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소송을 안 하는지 알겠더군요.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누가 무료구조공단을 이용해서 양육비소송을 한다고 하면 말리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시 구조공단에서 전화가 와서는 “친자검사를 해야 되는데 명절이고 하니까 아이 데리고 한번 상대방에 가보시라고 설마 손잔데 모라고 하시겠냐!” 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소송 전화만 받으면 감정컨트롤이 안됩니다. 아이도 며칠 동안 제대로 돌보지도 못합니다. 상대방을 보고 싶지도 연락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고작 30만원. 판결 받아도 받을 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 이 소송으로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으니 소송취하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말씀드리니 “아이를 위해서 소송을 하시는 거고, 다음에 다시 소송을 하게 되면 이 과정을 또 겪을 텐데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으니 좀 더 지켜보시죠. 힘드신 거 압니다.”

그 이후에는 그냥 거의 포기상태입니다.

서울대병원에 갔지만 상대방은 오지 않았고 또 다시 보정명령과 수검명령의 진행이 계속되고 최근에 철산동 주소에 집행관이 가서 소송안내서가 상대방의 아버지에게 전달이 되었고 5월7일 친자확인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1년6개월의 시간동안 소송을 하면서 너무나 지친 상태입니다. 임신부터 지금까지 상대방은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내가 소송을 한다고 할 때 상대방이 그러더군요. “내가 일 안하면 양육비 받지도 못해. 내가 평생일 안하면 어쩔 건데?” 라고 했습니다. 이미 알아 볼만큼 알아봤던 거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힘없는 저소득층의 엄마는 아이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기란 너무나 힘이 들고 무시를 당해야 하며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또한 인지를 하면 아이의 성이 바뀌고 그로 인해 또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양육비

판결이후에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또 다시 번거로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미혼부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생활을 합니다. 판결에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주면 받고 안 주면 받지 못 하는 게 현실이고 미혼부의 월급이 150만원 미만일 경우 양육비이행소송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 상대방의 인권보호라고 하던 거 같습니다.

양육을 하는 미혼모의 월급은 자활하는 사람들이 70만원 사무직하는 사람들이 150만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30살이 넘으면 취업을 하기도 어렵고 아이를 혼자 키운다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돈가 잘못 되도 정말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좀 융통성 있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들도 소송 진행을 하면서 힘드시겠지만,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어도 틀린 행동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좀 더 언어적인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비 양육 미혼부들에게 자녀에 대한 책임의무에 대해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책임이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비 양육자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비 양육 미혼부들은 월급이 150만원미만이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없는지도 의아합니다. 아이의 인권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을 하지 않는 비 양육 미혼부들에게 일자리를 정부가 제공해 줬으면 합니다. 양육을 하는 미혼모들은 아이가 12개월만 지나면 경제활동을 하라고 전화가 옵니다. 아니면 자활이라도 해야 합니다.

양육을 하는 미혼모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책임요구를 하면서 왜 같은 반반의 책임이 있는! 양육을 하는 미혼모보다 훨씬 수월하게 생활을 하는 비 양육 미혼부들에게는 그런 책임을 지워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실 거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도 다 알고 있고, 가족사진, 일반사진 등 수십 장의 사진들과 그 사람과 연락을 한 내용이며 이메일로 주고받은 편지 등 증거자료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소송이 1년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재판장님은 계속적으로 친자확인검사만 요구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상대방에게 모든 은행거래를 중지 시켜서 소송중임을 알리고 차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또한 양육비 소송 판결 시에 인지신고를 하기 전에 양육자에게 결정권을 주고 법적효력이 있는 서면 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남자에게 너무나 관대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양육 부모의 양육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박영미 (한국한부모연합 고문)

### ○ 양육비 청구! 뭐야?

나는 1998년부터 사별,이혼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성한부모들과 함께 해왔다. 한부모가족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사회적 편견과 차별,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것이었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도 그것이 결국 한부모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방치하고 내모는 것에 일조하는 것이고, 편견이란 어디까지나 편견이어서 한부모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만 크지 않다면 스스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 편견은 많이 깨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편견과 차별을 없애든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든지 어떤 고리를 잡아도 되는데 사회적 차원에서 핵심은 경제적 문제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초기에는 한부모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 하면 주로 아동을 가진 모든 가족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와 한부모가족을 위한 공적지원을 주로 생각했다. 그래서 한부모당사자조직에서도 양육비청구와 같은 일은 아주 개인적으로 이뤄졌다. 나는 누가 그런 소송을 한다는 이야기는 소문에 들었지만 나 자신이 당사자가 아니다보니 잘 몰랐고 대부분의 이혼 한부모들이 관심이 없었기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서 이것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5년 경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지고 이혼 한부모가정의 양육비대지급건이 논의되면서부터였다. 다른 나라에서는 임신사실을 몰랐거나 출산을 반대한 미혼부에게까지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양육비를 안내고 잠적하거나 형편이 어려워 못내는 비양육 부모를 대신하여 정부가 내주고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다.

## ○ 정부의 양육비 소송지원 이후

2009년 이후 협의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법률수단이 확보되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미혼모에 대해서 미혼부에 대한 부인지청구, 양육비청구, 양육비이행확보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이혼한부모와 미혼모들이 지원을 받아 소송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연구에 의하면 전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2.7%에 불과하다(김혜영 외, 2006: 119-124)하고, 2010년 미혼모 실태조사의 의하면, 미혼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에 불과하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판다고 하는데 가장 답답해야할 미혼모들이 양육비청구를 모르거나 양육비청구에 소극적이다. 미혼모들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양육비 문제로 미혼부와 교류하기를 원치 않거나, 자녀의 양육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나아가 현실적으로 양육비 청구소송에 대한 인지도나 절차의 번거로움, 소요되는 시간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다.

이혼한부모들도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고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했거나, 양육비 문제로 다시는 전남편을 보고싶지 않아서 양육비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 조건에서 미혼모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또한 민법과 가사소송법의 개정 등으로 양육비 청구가 수월해지고 이행확보수단이 넓어졌지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맘먹고 빼돌리는 경우 등등에는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혼을 많이 상담하는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들도 양육비청구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소송해도 받기 힘든데 왜 헛고생하냐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정박사와 박복순박사 두분의 연구가 미혼모들의 소극성을 깨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감사하다.

## ○ 양육비 대행 공적기관과 국가대지급법안

정부의 인식도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2005년 당시 양육비대지급제도의 도입은 이혼을 부추기고,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며 사별한부모를 비롯하여 다른 가정에 대한 형평성문제로 길이 막혔는데 지금까지도 거기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태다.

양육비청구 및 이행확보를 대신해줄 공적기관의 설립 문제도 양육비 대지급안과 맞물려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 ○ 미혼모 당사자가 아니면 미혼부 양육 책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이 토론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다. 대부분 모를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 그대로였다.

우선 미혼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20대와 30대 미혼과 기혼의 남성들 중 친구관계가 폭넓은 사람들을 골라 질문을 했다.

Q. 주변에 선후배나 친구 중에 미혼남들이 여성들과 교제하여 성관계도 가질 때, 여성분이 임신하여 자신이 반대했거나 자신은 모른체 헤어졌는데 아이를 낳아 자신에게 아이를 대신하여 아이엄마가 아버지라는 인지소송을하고 양육비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있나요?

기) 모를것같습니다 아마도 대다수가 모르지 않을까요?네 저도 몰랐네요

기) 이 이야기를해본적없어서 아는지모르겠어요 저는몰랐어요

미) 본인도 처음

미) 저도 몰랐구요 주변도 모를것 같아요ㅠ

미) 아뇨~몰르고있었어요 ㅠㅠ

미) 티비에서 한번씩나왔던 거같아요—

미) 아니 몰랐습니다.

2-30대 여성들에게

Q. 성인이건 청소년들이건 미혼남들이 여성들과 교제하여 성관계도 가질 때, 여성분이 임신하여 자신이 반대했거나 자신은 모른체 헤어졌는데 아이를 낳아 자신에게 아이를 대신하여 아이엄마가 아버지라는 인지소송을 하고 양육비청구소송을 할 수있다는 것을 알고있나?

20-21 여2) 몰랐다.

26세 여2) 처음 듣는다.

30대 초반 미혼여성 2) 몰랐다.

30대 아기 엄마 3) 그런 법이 있나요??처음들었어요

## ○ 학교나 단체에서 성교육을 받을 때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

Q. 혹시 학교나 단체 등에서 성교육 받을때 혹시 결혼전에 아이가 생겨 낳게 되면 미혼모는 아이를 대신해 인지청구와 양육비청구를 할 수있고 미혼부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25세여) 미혼모와관련되서는자세하게배우지않아요—결혼전성과관련되서현실적인것보다는도덕적인것과피임기구정도의수준으로배운다고알고있습니다—

26세여) 제가 배울때는 그렇게까지 자세한거는 안배웠어요

피임하는법까지만 배웠던거같아요

20세 여) 없어요. 없었다구요.

청년단체 여성상근자) 청년회 회원들 대상으로 작년에 했는데 포함되지않았을거여요.  
자신도 이런내용을접해보지못했습니다

당직자 남 31세) 저는 당에서만 성교육받았는데, 이런 법적 문제를 당에서도 하진 않았구요

Q. 혹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성교육할 때 결혼전에 아이가 생겨 낳게 되면 미혼모는 아이를 대신해 인지청구와 양육비청구를 할 수있고 미혼부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여성상담원) 강의안은 만들기 나름인데 성교육에는 많이 안들어 가는것 같아요~~

청주김선영) 학교는 주로 성폭력예방교육 위주로 하여 미혼모는 이야기 안한다. 몇명아이들로 몇회기차 집단상담을 할때는 미혼모 부분 다룬다



김종점) 일반 성교육에서는 그런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학교에서 의뢰할때 성폭력예방중심으로 해달라고 해요

중고생들은 교과수업때문에 제대로 성교육안하는곳이 부지기수죠

## ○ 미혼모시설, 모자원 등에서도 미혼모들에 대해 미혼부 양육책임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제공이 없었거나 부진했다.

Q. 여러분은 미혼모시설이나 모자원에서 살때 인지소송, 양육비지급청구소송이나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등 양육비와 관련된 정보제공이나 상담 교육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나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어땠나요?

아이 8세) 저때는 거의 없었던것같아요 그런 교육있으면 도움될것같아요 요즘은 잘모르겠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아이 8세) 저는2005~6년때는 소송은 할 수있다고 들었으나 방법은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어요. 한부모센터는 정보만알려주는거죠어디서할수있다는 정도  
저는 시설 퇴소후 아이가 다섯 살 때 시설에 가서 소송 관련 교육 참여했는데 강사로 오신분이 “양육비주면 감사하게 생각해라 많이 주는거라 친권양육권 엄마에게 불리하다” “아이아빠와 대화로잘꼬서봐라”

아이 3세) 시설에서 그런교육은 받은적이 없고요. 센터에서도 없는듯요

아이 3세) 전혀

아이 6세) 제가 이용했던 곳은 한부모센터와 지금 살고 있는 모자원입니다. 어디서도 양육비소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은 없고 다만 모자원에 포스터로 붙어 있는것을 본적은 있습니다. 형식적이기에 현실적으로 이런 제도가 저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전에 한부모센터에서 법무부사무관님이 오셔서 교육을 했었는데 그 때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아이 5세) 건강지원센터 없고요. 그 안내 소송지원안내 리플릿?? 그것도 어디 동사무소에 비치된거 집어왔던듯해요

그래서 직접 거기 적힌 번호 여기저기 전화하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생각보다 에너지가 넘 많이 들어서, 그리고 상담전화 받는 관계자 분....법원?? 어디였는지도 몰겠네요.....암튼 그 남자분들이 아주 사무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진행하는 동안 어떤 지지를 받고 있다는 느낌 받기가 힘들었던 생각이 들었어요

Q.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혼이나 미혼 한부모를 위해 인지소송이나 양육비지급이나 양육비 이행소송에 대해서 홍보와 상담, 교육을 하고 있나요?

1년전 미혼모거점기관 직원) 오시는 분들에게 안내는 하고 있고 홍보지 부착했어요. 법률상담 요청할 때 기관과 연계해주고는 있어요.

## ○ 이혼 한부모들의 경험

양육비 포기각서를 쓰면 못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법률구조공단의 직원조차도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책임에 대한 의식이 약하다는 것,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기 어려움, 수급권과 양육비청구의 관계를 보여준다.

Q. 이혼후 양육비청구나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등에 대해서 홍보와 상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 어디서?

자녀 고등) 전 이혼당시 다 포기해서 생각도 안하고 있었고, 교육이나 상담받거나 정보제공을 받은 곳은 없었어요.

자녀 초등)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양육비 청구소송해서 2년반 만에 합의하고 현재 받고 있어요. 저도처음엔 그냥 있다가 수급자탈락이 된 뒤 청구했어요  
아빠 직장이 전산에 나와서. 통장압류하면 그때야 합의보자고 애 아빠한테서 연락온다

00) 전 2008년에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했는데 오히려 애 아빠 편을 들더라고요 통장압류를 하면 애아빠는 어떻게 먹고사냐며. 같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날나쁜사람 취급하더라고요 무시하는기분도들고. 우리나라도 덴마크처럼 복지가잘되면 남자들이 여자한테 잘할텐데요

그때 전세금 3500만원 다 받고 더 이상 양육비 청구 안하기로 하고 각서쓰고 공증했어요. 어차피 돈도 안주고 직장도 자주 옮겨서 월급 압류도 못하니까 그 돈받고 땡쳤죠.

## ○ 미혼부의 양육책임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림의 효과

남성들이 자신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남녀관계를 가짐으로서 미혼부를 예방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또한 당연히 양육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감을 지님.

여성들은 미혼모가 된다면을 상상함으로써 예방하거나 대처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Q.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서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은?

미혼남) 음..책임감과 더 신중해야되겠다는 생각^^

기혼남) 책임감 같은거

미혼남) 음..글쎄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상대방에게 배신감을 느낄 것같은데요~

만약 임신사실을 알았다면 같이 의논을 해야될텐데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당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같아요^^;;

미혼녀) 이내용을 많은 미혼모들이 알았다면 현실에서 힘들게 살지 않았을거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내가 미혼모가 되게 된다면 이정보를 꼭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정부에서 적극적인 교육 및 정보제공에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미혼모에 대해서 보수적인 생각으로 쉬쉬하는 것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미혼녀) 학교에서 이런내용도 가르쳐줬으면 좋겠네요 이런일로 피해를 보는 여학생들이 많을거같은데...

미혼녀)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지않을까요? ㅎㅎㅎ

기혼녀) 여자에게도 힘이있구나

기혼녀) 중고등학생 엄마들이 알아야겠네

30대 여성 4) 헤어지고나면 그냥 지워야 된다.

Q.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이런 내용이 많이 알려지면 남성들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미) 남성들이 여성들과 관계를 가질때 더 조심스럽고 책임감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말하기가 조심스럽네요---

## ○ 양육비를 소득에 포함시키는 문제

미혼부의 양육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미혼부에 대한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 이행확보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수급자일 경우 양육비가 월소득계산에 포함되면 양육비청구에 대한 동기가 약화된다. 포함을 안시키면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된다.

두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3년 등 일정기간을 정해 소득에 포함 안시키는 경우, 양육비의 50%만 포함시키는 경우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오영나 (전국여성법무사회 부회장)

## I. 서론

먼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미혼모의 권리실현을 위해 연구활동을 계속해 주신 한국여성정책 연구원의 연구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포럼은 2011년에 진행했던 연구의 성과들을 정리, 집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우 충실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므로 큰 이견을 제시하기보다는 발제의 내용을 다시금 확인하고 약간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II. 임의인지 절차의 개선

### 1. 발제문의 문제점 인식과 개선안

발제문에서는 임의인지의 경우 ‘법원의 개입이 전혀 없이 이루어져 자녀 양육책임에 대한 공백이 생겨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의인지는 해당관청에 인지신고서를 제출, 수리하는 것으로 종결되는 절차이므로 협의이혼의 경우처럼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행사여부 및 방법을 포함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 주목하여 현행 협의이혼처럼 임의인지에도 자녀 양육책임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이혼절차와 유사한 확인절차를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며, 독일과 같이 아버지에 의한 인지 시 어머니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인지의 의사표시 및 동의, 인지 시 협의사항은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공증 등본을 아버지, 어머니, 자녀, 가족관계등록계 공무원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결론 부분에서는 가장 바

람직한 방향은 재판상 인지만을 인정하는 제도로 개선하자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에 의한 일방적인 인지신고에서 가지는 가부장적인 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자녀의 성이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지된 자녀의 성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 변경되게 되고 자녀가 종전의 성과 본을 유지하려면 별도의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이 과정이 자녀에게 불편할 뿐더러 개인의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처음부터 종전의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2. 임의인지의 일방적 제도운영의 문제

발제문에서는 임의인지 운영의 일방성과 양육책임에 대한 공백발생이라는 두가지 면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 두가지 면을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의인지 운영의 일방성에 대하여는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연구위원회에서는 지난 2010년 7월에 발표한 ‘미혼부의 법적책임과 이의 실현방안’ 발제문에서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의인지 신고시 친권자 미지정인 경우에는 인지신고서 상의 ‘친권자’란을 비워 놓고 인지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현재의 민법에 의하면 친권행사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데 인지에 의해 갑자기 변동되는 가족관계의 질서를 수용해야 되는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子の 복리나 여태껏 방치했던 父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자가 정해질 때까지 母가 단독으로 여태껏 행사해 왔던 친권행사를 하게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김혜주, 2010, p.15). 라고 하였으며 자녀의 성본사용에 관하여도 임의인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성을 쓰고 다만 협의가 되는 경우에만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민법체계상 여전히 부성사용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바, 친권자 지정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子の 복리와 여태껏 방치한 父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히려 인지의 경우 종전의 성과 본 사용이 원칙이고, 다만 협의된 경우에만 성본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요청된다.(김혜주, 2010, p.19)라고 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친권자 지정과 자녀의 성본에 대하여는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종전의 친권자와 자녀의 성본을 유지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두가지 점이 개선된다면 임의인지의 일방성은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3. 양육 책임의 공백 문제

상식적인 인간의 감정은 부가 자신의 자녀임을 인지했다면 당연히 양육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임의인지절차는 양육책임에 대하여 모와의 협의를 요구하지 않으며 법원의 개입도 없고, 오로지 부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인 이행을 기대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한 공백이 생겨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발제자의 우려에 대하여 공감하는 바 큼니다.

그러나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재판상 인지절차만을 인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또다른 우려를 하게 됩니다. 재판상 절차가 분쟁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이긴 하나 재판 자체가 당사자에게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절차인 만큼 과연 재판상 절차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제한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발제문에서 협의이혼절차와 유사한 확인절차를 두는 것에 대한 제안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원래 임의인지제도는 사실상 친자관계를 법률적인 친자관계로 인정하는 매우 간명한 제도이며 절차 자체도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운영을 양육책임의 문제를 포함시켜 협의이혼절차처럼 운영했을 경우 지금보다는 절차가 복잡해질 것이므로 임의인지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현행 임의인지제도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부의 일방적인 의사로 친권자와 자녀의 성분이 바뀌어 모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된다면 임의인지의 가능성을 넓게 열어두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후 미혼부와 자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나 법률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보다 도움이 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부가 임의인지를 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자발적인 이행을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고 재판절차까지 간다 하여도 임의인지를 하였다면 친자관계가 확인되었으므로 소송절차 자체가 간단해지는 잇점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회는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미혼부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자녀도 미혼부와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데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두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아 임의인지제도와 양육비이행에 관하여는 임의인지절차를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임의인지절차 자체는 간이하고 폭넓게 운영하고 이후 양육비 이행과정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고 제안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양육비이행과정을 살펴보면 사실 양육비청구소송자체가 매우 복잡한 법

를관계를 해결해야 하는 소송이 아니므로 소송절차의 운영면에서 특칙을 두어 보다 간이하게 운영할 여지가 있고, 굳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친자관계가 확인되었다면 보다 간이하게 양육비를 징수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발제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양육비 이행확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Ⅲ. 양육비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문제

또한 양육비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지난 2011년 9월 2일의 ‘미혼한부모가족의 양육비이행절차와 이행확보방안’에서 시론으로 제안하였고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양육비채권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경우는 양육비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을 변제받게 되는데 그 배당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우선변제가 되고 남은 금액에서 일반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을 하게 됩니다. 현재 양육비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을 부여받고 있지 못한 일반채권자이므로 우선변제권을 가진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환가대금이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순위에 밀려 아주 적은 금액을 지급받거나, 심지어는 전혀 지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제의 여부는 우선변제권의 존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에, 자녀의 기본생계에 필요한 양육비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서는 양육비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 가. 현행법상 인정되는 우선변제권

##### (1) 담보물권의 특성으로서의 우선변제권

원래 고유한 의미의 우선변제권은 민법상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질권 등의 담보물권의 특성에 기인하는 권리로서,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받은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앞서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는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담보권은 설정된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의 순위가 결정되어 담보권자들 간에도 이를 대항할 수 있습니다.

## (2) 정책적 배려에 의해 인정되는 우선변제권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도 자기의 권리를 대항할 수 있는 담보물권과 달리, 채권은 채무자이외의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않은 일반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자기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채무자에 대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한 지위를 가지게 되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일반채권자들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일정한 경우 담보물권이 아닌 일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금채권, 퇴직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이들 정책적 배려에 의해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의 경우 주택 및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소액임차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은, 모든 우선변제권에 대해서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므로써 더욱 두터운 이중적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의 생활유지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주거안정내지 사업안정, 최소급여의 확보를 통해 서민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의해 법이 특별히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생계를 보장할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사회안정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일이기에 물권이 아닌 이들 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일정범위 내에서는 물권에 앞서는 보호를 하게 된 것입니다.

## 나. 양육비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의 필요성

그렇다면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정책적 배려나, 의무가 요청되지 않는 것일까요?

양육비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자녀의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해 지출되는 최소한의 생계비에 해당되며, 양육에 필요한 시간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당사자의 근로능력에 일정한 제한을 주어,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할 만한 충분한 소득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육비의 확보에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은 각 부모의 법적의무이지만 동시에 미래사회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들 자녀들은 현재 우리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요, 미래사회에서 사회의 주축이 될 세대이므로 국가와 사회의 미래는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생계유지 및 건강한 성장을 통한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그 중의 하나로 양육비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생계에 직결되는 양육비채권을 일반 사적 채권채무관계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여타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과의 형평성에 비추어도 양육비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다. 양육비채권의 우선변제권 부여 방향

### (1) 양육비 채권에 일정범위를 정하여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검토

양육비채권의 우선변제권 부여방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정책적배려에 의해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인 임대차보증금채권과 임금채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채권은 그리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임금, 퇴직금채권은 일정범위내에서 최우선변제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sup>1)</sup>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4조.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7조

주택임차인의 경우 보장받을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특별시: 7천5백만원 이하 임차인의 경우 2천500만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6천5백만원 이하 임차인의 경우 2천200만원

③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천5백만원이하 임차인의 경우 1천900만원

④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이하 임차인의 경우 1천400만원

위 규정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규정이므로 임대차계약시점이 그이전이라면 이전 규정대로 적용이 된다.

상가건물임차인의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특별시 : 5천만원 중 1천 5백만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4천500만원 중 1천 350만원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만원 중 9백만원

④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중 750만원

위 규정 역시 2010년 7월 2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이러한 최우선변제권은 임대차보증금채권과 임금채권이 가지는 국민의 기본생계적 성격으로 인하여 두터운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의 도입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담보물권의 효용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므로 양육비채권에의 최우선변제권의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모든 양육비 채권에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검토

최우선변제권 이외 우선변제권도 임대차보증금채권과 임금채권은 구체적인 적용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근로기준법 규정을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보증금의 회수) 제3조 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기준법 38조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담보물권과 동순위로서 순위를 다투게 되고 임금채권은 담보물권보다는 후순위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순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그 해당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부동산 경매, 공매대금에만 우선변제권이 있지만 임금채권은 사업주의 총재산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양육비채권에의 우선변제권도입을 검토할 때 유의미한 시사점을 줍니다. 우선 논란이 될 수 있는 권리의 공시 문제를 보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는 담보물권과 동일한 순위를 보장받는 임대차보증금채권은 공시의 필요성을 수반하게 되나 임금채권은 담보물권보다 후순위이므로 공시의 필요성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성격상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생활비로 지출되는 생계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임금채권이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양육비채권에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공시의 문제를 거론할 여지가 약하다는 점에서 양육비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도입한다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과 유사하게 담보물권보다 후순위로, 그러나 조세, 공과금, 일반채권보다 앞선순위를 인정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해 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양육비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도 실무상 부동산경매보다는 채권 집행이 주로 집행의 방법으로 쓰일 것이므로 양육비채권자의 권리확보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Ⅳ. 양육비 이행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에 법무사의 참여

여성가족부는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시행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법률구조제도는 소송절차에 집중되어 이루어졌고 이행절차를 지원하는 비율은 아직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행까지 이루어져야만 최종적인 해결이 되는 것이므로 이행절차에 법률구조의 손길이 좀더 적극적으로 미쳐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법률구조제도에는 변호사들이 주로 참가하여 왔으나 법무사들도 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행절차는 법무사들이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이행절차와 관련하여 법률구조에 법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여성법무사회는 그동안 미혼모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법률구조기관과 협의하여 양육비이행의 법률구조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연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사무관)

## 미혼부의 법적책임 강화 필요성 제기에 공감

- 도덕 및 법(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 등 양육 의무)과 현실(비양육 부모의 양육책임 인식 및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가정 비율 저조) 불일치 →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한부모가족의 높은 상대빈곤율) → 미혼모 가정 아동 복리 위협
- 최근 민법, 가사소송법 등이 개정되어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과태료 등 다양한 양육비 이행확보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마저도 집행절차, 미혼모 등의 정보 및 시간부족 등으로 권리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

## 최근, 미혼부 법적책임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전,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

- 각 법의 구체적 내용 및 집행주체는 상이하나, 국가가 미성년 자녀 복리의 확보를 위해 주도적 역할(대지급 또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처벌 강화)를 한다는데 있어서 공통적 내용을 담고 있음
  - \* 한부모가족지원법(이석현의원, 미혼모에 한정하여 대지급), 양육비대지급법안(강명순), 양육비선지급법안(박선영) 등
- 정부부처 내에서는 미혼부 법적책임 강화라는 전반적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재정 부담 등의 현실적 문제로 부정적 의견이 다수

\* (관계부처) 구상권 불능에 따른 지자체 및 국가 재정부담 초래 우려, 개정된 가사소송법 등의 활용경과를 지켜볼 필요.

- 다만, 일부부처의 경우 양육비 지급을 위한 이행강제제도(운전면허 취소 등) 도입 및 전담기관 설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기본적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
- 이번 회기내에서는 국회일정상 논의가 어려울 전망이나, 19대 국회 개원 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음
- 현 단계에서, 대지급제도는 국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비양육부모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 또는 이행기관 설치 등을 검토 예정

## **"양육비 지급금액 기준"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최종 확정된 안을 발표할 예정**

- 양육비 산정기준에 관한 통일적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추가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으며, 이번포럼에서 발표된 내용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한부모가족의 복리 향상을 위한 추가 정책발굴에 고민을 지속하겠음

제 75차 여성정책포럼 **미혼부의**  
**책임강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22-70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TEL. 02-3156-7230 FAX. 02-3156-7271 [www.kwdi.re.kr](http://www.kwdi.re.kr)